

2025 가을 | 제 25권 3호(통권99호)

ISSN 2566-2259

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 가을 | 제25권 3호(통권99호)

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2025년 가을 | 제25권 3호(통권99호)

편집위원: 변상정(위원장, 전략연), 김종원(전략연), 백선우(전략연), 하경석(전략연),
박영준(국방대), 박원곤(이화여대), 박재적(연세대), 안세현(서울시립대),
이동선(고려대), 이무성(명지대), 이장원(충북대), 서정건(경희대)

편집간사: 박수련(전략연)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김성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13-18층

전 화: (02)6191-1169, FAX: (02)6191-1111

E-mail: publication@inss.re.kr

인쇄일: 2025년 9월 30일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6년 봄호부터 『국제문제연구』를 『국가안보와 전략』으로 제호를 변경해서
연속 발행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 :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을 중심으로

1

안재현 (합동군사대학교)

김광현 (조선대학교)

황현아 (한미연합군사령부)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과 안정성
4.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 분석
5. 결론

II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와 한중일 경제협력

33

안정은 (통일연구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3.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
4. 한중일 경제협력의 기회와 실현 방안
5. 결론

Ⅲ 한반도의 미래전에 관한 연구

71

: 평시전 개념의 도입과 전시전 양상의 예측

지호근 (건양대학교)

1. 서론: 한반도 미래전에 대한 재인식
2.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3. 한반도에서의 평시전 양상
4. 평시전 영향 하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시 전쟁수행활동
5. 결론

Ⅳ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적 분석틀을 활용한

111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사례 분석

김근희 (국방부)

금현섭 (서울대학교)

1. 서론
2.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개요
3.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적 분석틀
4. 사례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Ⅴ 북한 전략무기 기술 수준과 군사전략 간 관계 분석

145

: 상호 구성적 접근

장재규 (영남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 목표 기술 수준 기반 군사전략
4. 현 기술 수준 기반 군사전략
5. 결론

정권의 정당성 연출과 전략적 모호성

박정수 (고려대학교)

장석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북한 심야열병식의 연출구조:
사회적 퍼포먼스로서의 구조적 분석
4. 전략적 수용을 위한 이중 퍼포먼스:
대내외 이중 ‘관객(audiences)’ 구조와 전략적 모호성 설계
5. 결론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

: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을 중심으로

안재현* (합동군사대학교)

김광현** (조선대학교)

황현아** (한미연합군사령부)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과 안정성
4.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 분석
5. 결론

북중러 삼각관계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급변속에서 질적 구조 변화와 위계 재편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을 적용하여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과 안정성, 구조 변화와 위계 재편을 분석한다. 냉전기 소련 중심 이념 동맹, 탈냉전기 중국 중심 비대칭 연계를 거쳐 2010년대 이후 미·중 전략경쟁, 러-우 전쟁, 북러조약 체결 등 내·외부 요인이 중첩되며 삼각관계의 주도성, 상호작용, 역할이 재편되었다. 특히 2024년 북러조약 체결은 내부적 변화를 촉진하였고 북중러 삼각관계는 기능적 응집력이 강화되었으나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북중러 삼각관계는 제한된 복합체의 이중적 성격을 보인다. 본 연구는 구조 변화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주제어 | 북중러 삼각관계, 지역안보복합체, 위계 재편, 내부적 변혁, 외부적 변혁, 압도, 동북아 안보

1. 서론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북중러 3국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질적 구조가 변화하는 전략적 재편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특히 3국은 상호작용 밀도, 국가 간 위계 구조, 삼각관계 내 역할 수행 방식 등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외교적 조율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¹⁾ 북중러 삼각관계는 1950년대 6.25전쟁 전후로 형성되었다. 지리적 근접성, 공산주의 이념의 공유, 공통된 외부 위협 인식이 기반이었으며, 냉전기 소련과 중국은 북한 생존의 이중 축 역할을 하였다.²⁾ 북한은 양국의 지원 아래 국가 정체성과 외교 전략을 설계해 왔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의 상호의존성은 핵심 구조로 기능해왔다.³⁾

이후 탈냉전,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위상 약화, 북한의 외교적 고립 등은 삼각관계 성격을 점차 비대칭적이며 유동적인 형태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2020년대에 이르러 이 관계는 과거의 느슨한 협조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화 가능성까지 동반한 전략적 연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전통적 삼각협력 구조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단일 사건이 아닌, 북중러 삼각관계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약은 북러 양자관계 심화뿐 아니라 삼각관계 내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 역할 재조정, 전략적 자율성의 이동 등 삼각관계 내부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⁴⁾

* 제1저자

** 교신저자

- 1)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4호(2023), pp. 99-130.
- 2)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2호(2018), pp. 67-90.
- 3) 김재환, “동북아 안보구조 하의 한반도 안보연구: 베리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pp. 19-22.
- 4)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국가

결과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는 이전의 단순한 협력 모델이 아니라 지속적 상호작용과 전략적 조율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된 협의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에 대해 베리 부잔(Barry Buzan)의 지역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 이론의 시각으로 삼각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중러 삼각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자관계의 전략적 이해, 외교적 연계의 지속 가능성, 3국 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⁵⁾ 그러나 최근 강화되는 3국 간 상호작용 밀도, 내부 위계 변화, 전략적 역할의 재편 등 질적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구체적 변화 양상보다는 한미일 진영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략적 프레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3국의 관계가 다자협력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계 재편, 각국의 역할 변화, 외부 압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식 등에 대해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은 안보 상호의존성이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강화되

안보와 전략』 제24권 제4호(2024), pp. 1-31.

- 5)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99-130.; 김재관,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 『분석과 대안』 제8권 3호(2024), pp. 7-44.;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pp. 67-90.; 성원용, “북러 관계 변화의 동인과 북중러 삼각 체제 전망,” 『황해문화』 2024 여름호, pp. 55-75.; 신봉섭, “북중러 삼각연대에 숨겨진 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중저널』 Vol. 18(2023), pp. 46-51.; 엄구호,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Connect』(2024), pp. 1-13.; 우제민, “북·러 동맹, 한반도에 ‘독’인가 ‘약’인가,” 『Russia-CIS Talk』 Vol.3(2025), pp. 1-3.; 이기동·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242호(2023), pp. 4-17.; 이동규·김지연,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29(2023), pp. 1-11.; 이수석·안제노,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93호(2022), pp. 1-6.; 장세호·김성배·최용환,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220호(2023), pp. 1-23.; 정민기·조명혜, “협력의 길, 편의의 선택: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 삼각관계,” 『외교안보연구소 제13회 학술논문상』(2024), pp. 1-36.; 정창현, “멀어지는 남북한과 가까워지는 북중러,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워치』 제32호(2024), pp. 1-10.;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4-19(2024), pp.1-11.; 황상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아시아연구』 제26권 4호(2023), pp.23-42. 외.

고, 외부와는 구별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변혁 유형—현상유지, 내부적 변혁, 외부적 변혁, 압도—은 삼각관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다.⁶⁾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 ① 북중러 삼각관계는 어떠한 요인과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는가?
- ②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이 삼각관계의 위계와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③ 복합체의 변혁 유형별로 각국의 주도성, 상호작용, 역할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를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에 근거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러-우전쟁,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이 관계가 일시적 협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닌 동북아 안보복합체의 하부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가.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의 개요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은 베리 부잔이 제시한 국제안보 분석 틀로, 국가 간 안보 현상이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고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⁷⁾ 부잔은 안보 행위자를 국제체제, 지역(국제 하부

6) Buzan and Wæver,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44–53.

7) Buzan and Wæver,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체제), 소규모 그룹, 단위, 개인으로 구분하며, 특히 지역이 안보 위협과 대응에서 핵심 단위라고 보았다. 부잔은 이 복합체를 “한 국가의 안보 문제가 다른 국가의 안보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밀접히 연결된 국가 집합체”로 정의하며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경험, 위협 인식의 공유, 정치·군사적 역학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형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복합체는 외부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안보 질서를 구성하고 내부 국가들은 상호의존성과 전략적 조율을 통해 독자적 안보를 전개해 간다.⁸⁾

이 이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체 내부 국가들의 상호작용 밀도와 반복성이 높다. 둘째, 복합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내부 상호작용은 외부보다 더 긴밀하고 구속적이다. 셋째, 안보를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닌 사회적·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본다.

특히 이 이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복합체의 구조 변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부잔은 복합체가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며 이를 다음의 네 가지 변혁 유형으로 구분한다.

- ① 현상유지: 복합체 내부 위계와 상호작용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
- ② 내부적 변혁: 내부 국가 간 힘의 분포나 정책 변화로 복합체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
- ③ 외부적 변혁: 복합체 외부나 신흥 세력의 등장 등으로 인해 구조 및 경계가 변화하는 현상.
- ④ 압도: 외부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으로 복합체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외부 질서에 편입되는 상태.

이러한 변혁 유형은 복합체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개념

pp. 44–50.

8) Buzan and Wæver,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pp. 44–53.

을 제공하며 복합체 내부에서의 주도성, 상호작용 양상, 역할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형 유형을 중심으로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동북아 지역안보복합체와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

동북아는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갈등, 강대국 중심의 군사력 배치, 핵 문제 등 복합적 안보 쟁점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한국·북한 등 주요 국가들이 상호 견제와 협력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며 고도의 전략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⁹⁾ 이러한 동북아 지역안보복합체의 주요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과 고도의 안보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안보 결정이 역내 전체 안보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¹⁰⁾ 둘째, 명확한 동맹과 적대 구도가 공존하는 우호-적대 관계의 이중성이 존재하나, 이는 고정된 블록이 아니라 유동적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셋째, 나토와 같은 공식 안보 조약 및 상설기구 부재로 정상외교, 전략 문서, 비공식 협의체를 통한 비제도적 협력이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위기 시 빠른 구조 재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¹¹⁾

이러한 구조적 특성 속에서 특히 북중러 삼각관계는 동북아 지역안보복합체의 중요한 하부구조로 기능한다. 이 삼각관계는 단순한 협력의 산물이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경험, 이념적 요인과 더불어 외부 전략 환경이 결합하여 형성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접하고 있는 세 국가의 국경은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 상호 신속한 지원과 전략 자산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둘째, 1950년대 6.25전쟁을 기점으로 공유된 공산주의 이념과 안보협력의 경험은 상호 전략 연대의 역사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9) 황성우,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슬라브학보』 제38권 4호(2023), pp. 737-746.

10) 김재환, “동북아 안보구조 하의 한반도 안보연구: 베리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pp. 19-22.

11)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pp. 71-75.

셋째, 이 관계의 힘의 분포는 일정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과 외교력을, 러시아는 군사력과 지정학적 균형자 역할을, 북한은 자율성과 균형 조정자로서 역할하며 관계 내 유동성과 역동성을 유발한다.¹²⁾ 넷째, 미국 중심 국제질서, 한미일 협력체제, 국제 제재 등 외부 요인이 북중러 결속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한다.¹³⁾ 특히 미·중 전략경쟁, 러-우 전쟁, 북러조약 체결 등이 이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형성된 북중러 삼각관계는 비제도적 협력 체계와 비대칭적 위계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외부 위협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동할 수 있는 유동적 전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향후 세 국가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한 동북아 안보 구조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변형 유형—현상유지, 내부적 변형, 외부적 변형, 압도—을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아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 요인과 특성을 바탕으로 세 가지 분석 지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주도성(leadership)이다. 이는 삼각관계 내 특정 국가가 전략적 의사결정, 외교적 조율, 군사적 주도권 등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도성은 복합체의 안정성 및 위계 구조의 고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예컨대 중국이 경제·외교적 리더십을 지속해 온 가운데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가 군사·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공동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양상에서 주도성의 재편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이는 국가들 사이 협력과 갈등의

12)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06–107.

13)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한반도 안보전략』 (2024년 9월호), pp. 24–26.

빈도, 강도 및 안보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복합체는 정태적 관계가 아닌 동태적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밀도가 복합체의 실질적 응집력을 결정한다.¹⁴⁾ 북중러의 경우 정상회담, 공동 성명, 안보협력 문서 채택, 유엔 안보리 내 공동 대응, 무기 및 기술 협력 등이 대표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삼각관계 내 역할(role)이다. 각국이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예컨대 조정자, 균형자, 수용자 등—의 특성과 그것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은 내부 국가들이 단순 협력자가 아닌 서로 다른 전략적 기능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변혁 유형’과 ‘분석 지표(주도성, 상호작용, 역할)’의 교차 틀을 적용하여, 각 변혁 유형별로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교차 틀에서 ‘변혁 유형’은 복합체 구조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주도성-상호작용-역할’은 변혁 유형별 구체적 관계 동학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3.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과 안정성

북중러 삼각관계는 단순한 전략적 협력을 넘어 일정한 안정성을 갖춘 복합체적 구조로 발전해 왔다. 냉전기 이념 동맹에서 탈냉전기 비대칭적 연계, 2010년대 이후의 전략적 역할 분담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의 반복성과 구조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본 연구는 구조적 변화를 다음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① 냉전기: 공산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군사동맹적 성격과 조약에 의한 제도화의 시기, ② 탈냉전기: 소련 붕괴, 중국의 부상, 북한의 고립 심화로 비대칭적 연계와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 시기, ③ 2010년대 이후: 미중 전략경쟁, 북핵 고도

14)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12–114.

화, 러시아의 대서방 갈등 심화 속에서 전략적 역할 분담과 안정성의 복원이 본격화된 시기. 이는 단순 연대기가 아니라 위계, 상호작용, 역할 등 구조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은 북중러 삼각관계가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에서 말하는 형성과 안정성의 조건을 시기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각 시기별 위계 변화, 상호작용 밀도, 전략적 역할을 분석하여 어느 조건에서 더 높은 안정성과 응집력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한다. 이는 제4장의 변혁 유형별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의 분석에 앞서 삼각관계의 기초 구조가 지닌 복합체적 특성과 한계를 정리하기 위함이다.

가. 냉전기: 소련 중심의 이념 동맹과 안보 연계 형성

북중러 삼각관계의 출발점은 1950년대 초 6.25전쟁이다. 북한, 중국,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며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에 맞선 군사적 행동을 전개하였다. 소련은 군사자산 지원, 고문단 파견으로 후방지원을 제공했고, 중국은 참전을 통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섰으며, 북한은 두 강대국의 지원 아래 체제 생존과 안보를 보장받았다. 이 연대는 단순한 전술적 협력을 넘어 공통된 위협 인식과 정치·군사적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이념적 안보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삼각관계는 소련 중심의 수직적 위계였다. 소련은 군사력, 경제력, 이념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도하였고, 중국은 중소연대 틀에서 종속적 파트너, 북한은 두 강대국에 안보·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하였다. 3국이 구성원이 되는 조약은 없지만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과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군사동맹적 요소를 지닌 제도화된 형태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¹⁵⁾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중소분쟁 격화로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였고, 북한은 ‘등거리 외교’와 주체사상, 외교의 자주노선을 통해 자율성을 모색하였다.¹⁶⁾ 상호작용의 밀도와 위계 구조에 불균형이 생겼지만, 미국과

15)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pp. 24-26.

서방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을 유지한 가운데 비공식적 안보 연계는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냉전기 삼각관계는 높은 안보 상호의존성과 반복적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제도화된 복합체로 형성되었다.

나. 탈냉전기: 비대칭 연계와 구조적 불균형 심화

탈냉전기 북중러 관계는 새로운 전략적 조건 속에서 재조정되었다. 소련의 해체, 중국의 개혁개방, 북한의 국제 고립 심화가 맞물리며 비대칭성과 불균형이 뚜렷해졌다. 공동의 안보 구조의 기능은 약화 되었지만, 안보 상호의존성의 잔존과 간헐적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유동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역량 약화와 국내 불안정으로 후순위 행위자로 조정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핵 개발로 고립이 심화되면서 중국 중심의 비대칭 연계로 전환되며 위계의 재편과 상호작용 밀도의 저하가 나타났다.¹⁷⁾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연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중국과는 정치적 정상회담을 반복하며 안보 및 경제 의존도를 높였고, 러시아와는 2000년 ‘조러 친선 및 선린 협조 조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상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중심축은 중국에 편중되어 있었다. 중국은 6자회담 주도, 원조 제공, 안보 보장 차원의 외교 발언 등을 통해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였다.¹⁸⁾ 이 시기는 비공식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상호작용의 밀도가 저하되고 전략적 자율성은 중국에 집중이라는 위계 재편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¹⁹⁾

결론적으로 탈냉전기의 삼각관계는 고강도 동맹은 아니었지만 전략적 상호이해, 지정학적 연계성에서 복합체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였고, 양자관계 중심의

16) 김재환, “동북아 안보구조 하의 한반도 안보연구: 베리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pp. 33-34.

17) 김재환, “동북아 안보구조 하의 한반도 안보연구: 베리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pp. 33-34.

18) 황성우,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pp. 745-746.

19) 박영택 · 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pp. 72-75.

협력으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2010년대 이후: 전략적 연계 복원과 안정성 강화

2010년대 이후,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시아의 대서방 갈등, 북한의 핵 개발과 고립 심화가 상호 전략적 필요를 강화하며 전략적 연계 복원을 이끌었다. 이는 정치·군사·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반복적 상호작용과 구조적 조율을 동반하면서 안정성을 강화해 가고 있었다.

중국은 대북 제재 환경에서 ‘균형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을 전략적 후방으로 간주하였고,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동북아 지역 내 입지 강화를 위한 대북 접근을 본격화(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등)하였다.²⁰⁾ 북한은 중·러를 활용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며,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²¹⁾

2020년대 들어 이 경향은 구조적 안정성의 회복으로 진화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북한 역시 대러 포탄 및 무기 지원 의혹, 고위 군사대표단 파견 등 실질적인 군사 연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²²⁾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였다.²³⁾

2024년 6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군사 조항을 포함한 준 군사동맹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위상 확대와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이 일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²⁴⁾ 이에 따라 냉전기 이후 약화되었던 전략적 연대가 복원되고, 위계는 중국

20)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10-112.

21)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pp. 75-78.

22)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pp. 24-26.

23)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20-123.

24)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5-12.

의 일극 구도에서 다극적 조정 구도로 전환되었다.²⁵⁾

종합하면 2010년대 이후 북중러 삼각관계는 반복적 안보 상호작용, 역할 분담의 구체화, 제도화 가능성의 확대를 통해 ‘안정된 복합체’로의 이행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했다. 중러의 대북 접근방식 차이 등 내재적 긴장은 있으나 외부의 위협이 강할수록 상호의존성과 응집력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의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이상의 시기별 검토는 북중러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역안보복합체의 하부구조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는 단순한 연대 부활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의 공유와 구조적 상호의존성 심화라는 점에서 제도화된 연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⁷⁾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북중러 삼각관계의 구조 비교

구 분	냉전기	탈냉전기	2010년대 이후
협력 유형	이념 연대 기반 군사동맹	약화된 비공식 연계	전략적 연계 복원 및 역할 분담
협력 형태	조소·조중 조약	북중 정상외교, 조러 친선조약	북러 전략동반자 조약, 유엔 공조, 무기협력
주도성	소련 중심 수직 위계	중국 중심 비대칭 구도	중·러 공동주도 또는 다극적 전환
상호작용 밀도	고강도 군사 연대 및 제도화	제한적 협력과 간헐적 정상외교	정상외교, 군사협력, 외교 공조의 지속적 확대
관계 내 역할	소련: 군사지원 중국: 참전 북한: 실행자	중국: 외교적 조정자 북한: 수혜자 러시아: 제한적 조력	중국: 외교·경제 지원자 러시아: 군사파트너 북한: 전략적 지렛대
성격	형식적·제도화된 관계	비제도적, 비대칭적 협력 구조	전략적 조정 능력 기반 안정된 기능 구조로 이행 중

* 출처: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25) 황성우,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pp. 752-754.

26) 김재환, “동북아 안보구조 하의 한반도 안보연구: 베리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pp. 41-42.

27)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5-12.

4.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 분석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러 삼각관계는 냉전기 이념 동맹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탈냉전기 비대칭적 연계 구조를 거쳐 2010년대 이후 전략적 역할 분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협력 체제로 진화해왔다. 특히 공통된 위협인식과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세 국가 사이의 안보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안보복합체로서의 특성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중러 삼각관계는 일시적 협력 구조가 아닌 구조적 복합체로의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⁸⁾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 복합적인 국제질서의 변동 요인들이 북중러 삼각관계의 구조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 삼각관계의 위계를 흔들고 각국의 역할 및 주도성을 재조정하게 만들며, 새로운 안보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²⁹⁾

본 장에서는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변형 유형—현상유지, 내부적 변형, 외부적 변형, 압도—을 중심으로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로 삼각관계의 위계 구조, 상호작용 밀도, 역할 수행 방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장은 북중러 삼각관계의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가시화된 201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가. 현상유지: 북중러 삼각관계의 구조적 연속성과 안정화 메커니즘

북중러 삼각관계는 2018~2019년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외부 압력에 대한 공동 대응 프레임을 재확인하면서 기존 협력 구조를 유지하였다. <표

28)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pp. 67–70.

29)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5–12.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전략적 후원을 확보하고자 한 북한의 전통적 외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쇄 방중은 중국 중심의 위계 구조를 재확인하고 북합체 내에서의 위계 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³⁰⁾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여기고 이어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밝혔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 역시 “북중 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이라면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³¹⁾ 이처럼 양국 정상의 공식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연속성과 공동 대응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표 2〉 2018~2019년 북중·북러 정상회담

구 분		일 자	장 소	주요 의제 및 특징
북중 회담	1차	2018. 3. 25.~28.	베이징	김정은 집권 후 첫 방중, 북중관계 복원, 남북·북미회담 직전 전략 조율
	2차	2018. 5. 7.~8.	다롄	북미정상회담 직전, 비핵화·안보 보장 논의, 전략적 소통 강화
	3차	2018. 6. 19.~20.	베이징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직후, 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 논의
	4차	2019. 1. 7.~10.	베이징	하노이 북미회담 사전 조율, 북중 수교 70주년 강조, 경제협력 논의
	5차	2019. 6. 20.~21.	평양	시진핑 첫 방북, 북중관계 과시, 경제협력·전략적 연대 강화
북러회담		2019. 4. 25.	블라디보스토크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속 러시아 중재 역할 모색, 경제·군사협력 논의

* 출처: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10~112; 박병광, “정상외교로 바라본 북중관계: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INSS전략보고』 2018-07(2018), pp. 1~17.; 이상숙, “제4차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할,” 『IFANSFOCUS』 2019-02(2019), pp. 1~2.의 내용으로 필자 재구성.

30)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10~112.

31) 이봉석, “김정은,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비핵화 등 한반도 해법 논의,” 『연합뉴스』 2018년 3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8096200009> (검색일: 2025년 5월 30일).

을 회복하고자 한 시도로, 냉전기 조소 협력의 역사적 패턴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이러한 양자 협력은 단지 일회성 정치 외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구조 속에서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적 연속성은 특히 중국의 구조적 우위 유지에서 드러난다. 2018~2019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했을 때에도 북중 무역액은 연간 3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며, 에너지 및 식량 지원 등 중국의 비공식적 후원이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기반이었다.³³⁾ 러시아는 2019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성을 제안하며 소극적이지만 전통적인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하였다.³⁴⁾ 이는 냉전기 소련이 수행한 전략적 균형자 역할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북중러 삼각관계는 나토와 같은 공식 집단방위조약 없이도 비제도적 유연성을 통해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2018~2019년 회담은 모두 양자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삼자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1960년대 조중·조소 간의 우호 조약처럼 양자 조약을 통해 간접적인 삼각연계를 형성했던 냉전기 방식과 유사한 협력 양상이다.³⁵⁾ 또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 반대 입장과 실질적인 묵인 전략이 병존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9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전략적 모호성과 기능적 연대를 동시에 유지하였다.³⁶⁾ 더불어 북중러 삼각관계의 현상유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조율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한 체제 안정과 대외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 하였고, 중국은

32)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pp. 24-26.

33) 최장호·최유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11(2020), pp. 3-13.

34)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pp. 71-75.

35)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3-12.

36) 이귀원,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 남북철도도로사업도(종합),” 『연합뉴스』 2019년 12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10552072> (검색일: 2025년 5월 31일).

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³⁷⁾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피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초기에는 철도 연결, 에너지 프로젝트 등 인프라 협력에 더욱 주력하는 전략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러 간 군사협력도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³⁸⁾

결국 2018~2019년을 전후한 북중러 삼각관계의 현상유지 양상은 내부적 변혁이나 외부적 변혁보다 외부 위협 인식의 지속과 기존 구조에 대한 전략적 적응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중국의 구조적 주도성을 수정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우위와 전략적 조정 능력이 삼각관계의 재편을 억제하였다. 동시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의 일방적 대북 압박 전략은 북중러 3국의 협력 패턴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⁹⁾

나. 내부적 변혁: 2024년 북러조약을 계기로 한 삼각관계의 구조 재편

북중러 삼각관계는 북한과 러시아간 2024년 6월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계기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 조약은 단순한 양자 협력의 심화를 넘어 북중러 삼각관계 내부의 주도성, 상호작용 방식, 역할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전형적인 ‘내부적 변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도성 측면에서 북한은 조약 체결 직후 이를 “실질적 동맹”으로 규정하며 중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북 협력을 가속화하며 중국 중심의 단극 구조에 균열을 가했다.⁴⁰⁾ 그 결과 삼각관계는 북한의 자

37)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20-123.

38)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pp. 24-26.

39)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pp. 75-78.

40)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울성 확대와 러시아의 군사적 존재감 부상으로 점차 다극화 양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⁴¹⁾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각국의 내부 전략적 필요와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기술 확보 필요성, 러시아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전시 자원의 보충 필요, 중국은 대러 제재 부담 완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내부 요인이 각각 작용하였다. 이처럼 내부 전략적 필요와 대외 전략이 맞물리면서 북중러 삼각관계의 전략적 계산은 한층 복잡해졌고, 복합체 구조의 역동성 또한 심화되었다.

둘째,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러조약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23개 조항의 협력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조항은 군사적 자동개입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과 전략적 연계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화이다.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⁴²⁾ 유엔헌장과 각국의 법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일방이 무력 침략을 받는 경우 상호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 동맹에 준하는 전략적 선언으로 볼 수 있다.⁴³⁾ 이와 더불어 경제 및 외교 분야의 협력도 삼각관계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및 운송 인프라 확대의 연결고리로 부상하였다.⁴⁴⁾ 반면 중국은 북러 관계 강화가 자국의 대외 전략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소극적 거부권 행사나 경제적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구조 내

5-10.

41)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20-123.

42) 이가영,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전문],” 『조선일보』 2024년 6월 20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6/20/QXEYNKQV7RFFVHP6QUHNF6SV6M/ (검색일: 2025년 5월 31일).

43)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pp. 24-26.

44) 문승원, “대러제재의 역설: 러·중 갈등의 진앙지에서 경협 전초기지로 변모하는 ‘극동,’” 『Russia-CIS Talk』 Vol.8(2024), pp. 1-3.

입지를 지켜나가고 있다.⁴⁵⁾

셋째, 역할의 재정립이다. 북한은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 채널을 확보하면서 ‘전략적 지렛대’로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북러 조약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군사대표단 교류가 이어지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방문하여 무기 체계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⁴⁶⁾ 중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삼각관계의 주도권 경쟁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확장하지 않고 전략적 조정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⁷⁾

결론적으로 2024년 북러조약은 북중러 삼각관계 내부의 위계질서와 역할 구조를 조정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비제도적 연대를 넘어 주도성 경쟁·상호작용 양상·역할 분화를 수반하는 질적 변화를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제도화된 복합체로의 전환이라기보다, 각국의 전략적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계와 역할을 재편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비대칭적 의존 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정 수준의 북중 간 거리두기와 북러 간 고위급 교류의 집중으로 나타났다.⁴⁸⁾ 반면 중러 양자관계는 제재 회피, 전략적 자원 교환, 대미 견제 등의 공동 이해를 배경으로 오히려 기능적 응집도를 높이고 있다.⁴⁹⁾ 이러한 변화는 북러조약이 북중러 삼각관계를 제도화된 결속체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복합체 내부의 전략적 위계와 기능적 역할을 재편하는 구조적 사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⁵⁰⁾ 결과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는 응집력 강화보다는 역할 분화와 전략적 선택의 다양화를 동반

45) 이신욱,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강화: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 협력을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제17호(2024), pp. 214-216.

46) 피터 워드, “북러협력 현황 및 대응문제,” 『세종포커스』(2024), pp. 4-5.

47)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pp. 4-5.

48)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pp. 4-6.

49) 이동규·김지연,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pp. 4-5.

50)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10-12.

한 긴장된 병존 상태로 재편되었다.⁵¹⁾

다. 외부적 변혁: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의 파급

북중러 삼각관계의 최근 구조 변화는 내부 요인뿐 아니라 외부 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외부 요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의 전면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체제이다. 특히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연례 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캠프 데이비드 정신’·‘신속 협의 약속’ 등 3개 문서를 채택해 위기 시 신속한 3국 간 협의와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였다. 이는 북중러 입장에서 전략적 고립감과 반미 연대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⁵²⁾ 북한은 이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북러 및 북중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 노선을 추진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 제재 관련 공동 대응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우회적으로 보장하고 있다.⁵³⁾

여기에 러-우 전쟁의 장기화가 북중러 삼각관계 내부의 위계를 재편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였다.⁵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전쟁 물자 부족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과의 고강도 군사협력을 선택하였고, 북한은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 외교적 지렛대를 확대하였다.⁵⁵⁾ 특히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조약은 “군사적 자동개입 가능성”을 명문화한 사실상의 준(準)집단방위 조약으로 북러 양자관계

51) 김재관,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 pp. 34-39.

52) 이신욱,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강화: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 협력을 중심으로,” pp. 214-216.

53)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pp. 120-123.

54) 러-우 전쟁을 ‘외부적 변혁’ 요인으로 분석한 부분은 나토 및 서방의 개입과 인도-태평양 전략 등 외적 요인과 연결되어 ‘외부적 변혁’으로 분석되었으나,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와 같은 내부의 변화도 유발하였기에 ‘내부적 변혁’ 요인과 부분적인 중첩이 불가피하였다. 마찬가지로, ‘외부적 변혁’과 ‘압도’ 요인 간에도 일부 중복이 나타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복합체 외부의 행위자이자, 구성 국가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5)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pp. 24-26.

의 성격을 실질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⁵⁶⁾ 이는 북중러 삼각관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주도성 확대를 상징하는 사건과 동시에 북한의 역할을 수동적 수혜자에서 적극적 군사 파트너로 이동시키는 구조 변화를 일으켰다.⁵⁷⁾

이 같은 북러 밀착 흐름은 중국에 중대한 전략적 딜레마를 야기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북중 중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나 북러 간 급진전된 관계에 연루될 경우 유럽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면 개입보다는 전략적 관망과 선택적 조정자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⁵⁸⁾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중러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러 협력에 군사적 동맹 수준의 확대가 나타날 경우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⁵⁹⁾

결과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는 외부의 압박으로 응집력은 강화되는 동시에 위계 이동과 역할 재조정이 병행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협력을 확대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을 서방 견제를 위한 우군으로 확보하였다. 반면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주도적 리더십 보다는 전략적 완충자 또는 조정자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⁶⁰⁾ 이러한 변화는 무기 협력, 군사대표단 교류, 전략 문서 채택 등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여 결속력을 강화하였다.⁶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력은 여전히 비제도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내포한 구조임을 보여준다.⁶²⁾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따른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56)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5-12.

57) 피터 워드, “북러협력 현황 및 대응문제,” pp. 4-5.

58)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pp. 4-5.

59) 이봉석, “북러 새 조약, 중국에 골칫거리…한중관계엔 기회,” 『연합뉴스』 2024년 6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1160900009> (검색일: 2025년 4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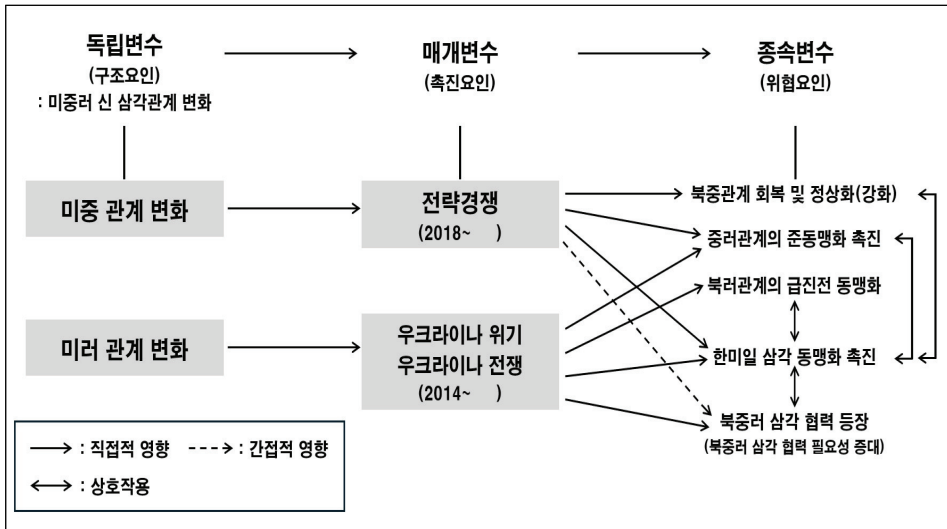
60) 황일도,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2023), pp. 85-105.

61) 김영환·박민형,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통일정책연구』 제33권 2호(2024), pp. 183-185.

62) 김재관,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 pp. 34-39.

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냉전 다극화 시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2010년 이후)



* 출처: 김재관,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 p. 16.

라. 압도: 한미일 주도 안보구조와 북중러 삼각관계의 자율성 한계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한미일 협력 체제는 북중러 복합체가 자율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하고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3국은 사실상 관계를 제도화하는 안보협력 문서를 채택하였으 며, 이는 동북아 안보구조에서 북중러 연대를 압박하는 전략적 구도를 형성하였 다.⁶³⁾ 미국은 이 구조 속에서 핵우산 제공, ICBM 탑재 가능 전력 전진 배치, 공동 정찰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는 북중러 삼각관계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제약하는 압도 형태를 보여준다.⁶⁴⁾

주도성 측면에서 북중러 복합체는 상호 내부 결속력을 높이고 군사협력을 심

63) 이신욱,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강화: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 협력을 중심으로,” pp. 214–216.

64) 황성우,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pp. 737–746.

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의 전략 구도 하에서 독립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성과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은 북한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질서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자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국은 서방과의 경제관계 및 유럽과의 전략적 균형을 고려해 북러 밀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⁶⁵⁾

상호작용 밀도 측면에서도 북중러 3국은 최근 군사대표단 교류, 무기체계 협력, 유엔 안보리 공조, 전략 문서 채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안보 구조가 북합체 내부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북중러는 반복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다자 협력체로의 전환이나 공식 연대 구조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이 구조화된 동북아 안보 틀 속에서 북중러 북합체가 비제도적 연대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⁶⁶⁾

역할 변화 측면에서 압도 구조는 각국의 역할을 외생적 요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중국은 기존의 주도적 경제·외교 지원자에서 미국 견제와 북러 관계 조율이라는 조정자적 역할로 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방 견제세력으로서 군사력 및 기술 제공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대상이자 전쟁물자 공급자·전략적 대리자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역할 구도는 자율적 위계질서가 아닌 외부 권력 질서에 의해 규정된 종속적 위계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⁶⁷⁾

결국 북중러 삼각관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구조와 질서의 외압에 의해 전략적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침식당하고 있다. 삼각관계 내부에서 자율적인 구조

65) 안경모, “신냉전과 북중러 삼각관계: 북한의 전략과 그 함의,”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Connect』(2024), pp. 2-3.

66)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pp. 10-12.

67) 이재영·홍민·현승수,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제23-04호(2024), pp. 36-38.

정립 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미치는 범위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한받고 있으며, 이는 북중러 복합체가 ‘자율 복합체’가 아닌 ‘제한된 복합체’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러시아의 전술핵 협력 의도는 이와 같은 압도 구조에 대한 역방향 시도이지만 그것 역시 지역 및 글로벌 권력 질서의 틀 내에서 재구성되는 한계 속에 있다.⁶⁸⁾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전략, 확장억제 강화, 대중 견제 기조의 복귀는 북중러 삼각관계의 전략적 결속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제도화된 연대를 제약하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협력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북중러 복합체의 자율성은 제약된 채 기능적 연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⁶⁹⁾

5. 결론

본 논문은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의 네 가지 변형 유형-현상유지, 내부적 변형, 외부적 변형, 압도-을 축으로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관계는 단일한 고정형 구조가 아니라 다중 변형 요인이 교차하는 유동적·응집적 복합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4년 북러조약과 같은 내부적 변형,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일 협력 강화 같은 외부적 변형 그리고 미국 주도의 압도 구조가 상호작용하며 주도성, 상호작용, 역할을 재조정하고 있다.

첫째, 주도성은 중국 중심의 일극 구조에서 다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러조약 이후 러시아는 군사 분야의 실질적 파트너로 위상이 확대되었고, 북한은 수동적 수혜자에서 전략적 지렛대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북러

68) 김태현,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26호(2024), pp. 39-41.

69) 엄구호,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pp. 2-5.

밀착에 대응해 전면 주도보다 전략적 조정자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상호작용 밀도는 정상회담, 고위급 군사대표단 교류, 유엔 안보리 공조, 전략 문서 채택을 통해 뚜렷이 증가하였다. 이는 수사적 연대를 넘어 반복성과 기능 분화를 동반한 복합체적 응집성을 강화한다.

셋째, 역할 분화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군사적 변수이자 전쟁 물자 공급국으로, 러시아는 군사력 및 기술 제공자, 중국은 완충자이자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구도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외부 압력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는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압도 요인으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미국의 확장억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삼각관계의 공식 제도화와 안정적 위계 정립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결과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는 기능적으로는 강화되었으나 제도적으로는 유보된 제한된 복합체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한국은 북중러 삼각관계에 대해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북중러 내 역할 갈등—중국의 경제 중심 접근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화—을 분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이간전술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차원의 압박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핵심 소재, 배터리, 에너지 공급망 등에서의 선택적 의존 구조를 통해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북러 간 핵·미사일 기술 협력이 구체화 될 경우, 한국은 ‘군사적 레드라인’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미국·EU 등과의 공조 아래 제재 강화 및 대북 억지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보복보다는 기술 연계 차단 및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수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넷째, 사이버 및 디지털 안보 영역에서 북중러 간 기술 협력, 특히 AI 및 위성기반 감시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EU 간 디지털 동맹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연계망을 활용한 차단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는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이 제시하는 네 가지 변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동적인 복합체로 향후 외부 전략 환경과 내부 전략 조정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도화된 복합체로 이행할 수도 있고, 위계 붕괴와 기능 불균형 속에 유동적 복합체로 회귀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2025년 9월 3일,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단순 외교 퍼포먼스를 넘어, 북중러 삼각협력의 전략적 의도가 집약되어 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된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을 구축하고, 향후 각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우 전쟁 종전을 고려하여 북러 밀착 기간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을 통해 향후 대미 협상력 강화,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반미연대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미국을 압박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 러시아 또한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미국과의 줄다리기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⁷⁰⁾ 따라서 이번 북중러 정상들의 집결은 앞서 언급하였듯 각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외부적 요인, 그리고 미국의 압도 구조가 일시적으로 교차한 결과로, 북중러 삼각관계는 응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으로 가고 있으며, 제도화된 복합체로 이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복합체 간 경쟁 지표 개발, 전략적 시뮬레이션 분석, 네트워크 기반의 계량 연구 등 실증적 접근을 통해 외부 압력과 내부 역학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70) 곽희양, “김정은의 중국방문, 북·중·러 진영 구축 신호탄인가,” 『경향신문』 2025년 8월 28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81827001> (검색일: 2025년 8월 28일).

참고문헌

1. 단행본

Buzan, Barry and Wæver, Ole.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 논문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4호(2023), pp. 99–130.

김영환·박민형.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통일정책연구』 제33권 2호 (2024), pp. 171–195.

김재관.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 『분석과 대안』 제8권 3호(2024), pp. 7–44.

김재환. “동북아 안보구조 하의 한반도 안보연구: 베리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pp. 1–150.

김태현.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26호(2024), pp. 7–50.

박영택·김재환.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 안보 역학관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2호(2018), pp. 67–90.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4호(2024), pp. 1–41.

성원용. “북러 관계 변화의 동인과 북중러 삼각 체제 전망.” 『황해문화』 2024 여름호, pp. 55–75.

- 윤창용.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분석.” 『한반도 안보 전략』 2024년 9월호(2024), pp. 23-70.
- 이신욱.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강화: 한미일 공조와 북중 러 협력을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제17호(2024), pp. 195-222.
- 정민기·조명혜. “협력의 길, 편익의 선택: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삼각관계.” 『외교안보연구소 제13회 학술논문상』(2024), pp. 1-36.
- 황상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아시아연구』 제26권 4호(2023), pp. 23-42.
- 황성우.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구조 연구.” 『슬라브학보』 제38권 4호 (2023), pp. 737-746.
- 황일도.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2023), pp. 85-105.

3. 보고서 및 기타

- 문승원. “대러제재의 역설: 러·중 갈등의 진앙지에서 경협 전초기지로 변모하는 ‘극동’.” 『Russia-CIS Talk』 Vol.8(2024), pp. 1-3.
- 박병광. “정상외교로 바라본 북중관계: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2018-07(2018), pp. 1-17.
- 신봉섭. “북중러 삼각연대에 숨겨진 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중저널』 Vol. 18(2023), pp. 46-51.
- 엄구호.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Zoom&Connect』(2024), pp. 1-13.
- 우제민. “북·러 동맹, 한반도에 ‘독’인가 ‘약’인가.” 『Russia-CIS Talk』 Vol.3(2025), pp. 1-3.
- 이기동·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

- 략연구원 전략보고」 242호(2023), pp. 4-17.
- 이동규 · 김지연.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아산 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29(2023), pp. 1-11.
- 이상숙. “제4차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할.” 「IFANSFOCUS」 2019-02(2019), pp. 1-2.
- 이수석 · 안제노.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93호(2022), pp. 1-6.
- 이재영 · 홍민 · 현승수.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제23-04호(2024), pp. 1-136.
- 장세호 · 김성배 · 최용환.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220호(2023), pp. 1-23.
- 정창현. “멀어지는 남북한과 가까워지는 북중러,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워치」 제32호(2024), pp. 1-10.
-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4-19(2024), pp. 1-11.
- 최장호 · 최유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11(2020), pp. 1-19.
- 피터 워드. “북러협력 현황 및 대응문제.” 「세종포커스」 (2024), pp. 1-6.

4. 뉴스 ·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곽희양. “김정은의 중국방문, 북·중·러 진영 구축 신호탄인가.” 『경향신문』 2025년 8월 28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81827001>(검색일: 2025년 8월 28일).
- 이가영.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전문].” 『조선일보』 2024년 6월 20일. <https://www.chosun.com/interna>

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6/20/QXEYNKQV7RFFVHP
6QUHNF6SV6M/(검색일: 2025년 5월 31일).

이귀원.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 남북철도도로사업도(종합).” 『연합뉴스』 2019년 12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10552072>(검색일: 2025년 5월 31일).

이봉석. “북러 새 조약, 중국에 골칫거리...한중관계엔 기회.” 『연합뉴스』 2024년 6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1160900009> (검색일: 2025년 4월 21일).

이봉석. “김정은,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비핵화 등 한반도 해법 논의.” 『연합뉴스』 2018년 3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8096200009> (검색일: 2025년 5월 30일).

Reconfiguration of Hierarchy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North Korea-China-Russia Triangle: Focusing on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Ahn, Jae Hyun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Kim, Kwang Hyun (Chosun University)

Hwang, Hyeon A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North Korea-China-Russia (DPRK-China-Russia) trilateral relationship is undergoing qualitative structural changes and a reconfiguration of hierarchy amid the rapidly shift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applies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RSC) theory to analyze the formation, stability,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hierarchical shifts within this triangular relationship. From the Soviet-led ideological alliance during the Cold War, to a China-centered asymmetric structure after the Cold War, the triangle has evolved into a more dynamic configuration due to external and internal drivers such as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the prolonged Russia-Ukraine war, and the signing of the DPRK-Russia treaty in 2024. The treaty marked a major internal transformation, enhancing the functional cohesion of the complex, but the presence of U.S.-led overwhelming structures has constrained its institutionalization. As a result,

the DPRK-China-Russia triangle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a “limited complex” with both strengthened functional ties and structural fluidit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analysis of the triangular dynamics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Keywords: DPRK-China-Russia trilateral relations, Regional Security Complex, hierarchical reconfiguration, internal transformation, external transformation, overwhelming dominance, Northeast Asian security

투고일: 2025.04.25. 심사일: 2025.05.27. 게재확정일: 2025.09.05.

II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와 한중일 경제협력

안정은 (통일연구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3.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
4. 한중일 경제협력의 기회와 실현 방안
5. 결론

본 연구는 트럼프 2.0 시대의 일방주의적 경제 안보 정책이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통된 외부 위협 인식으로 인한 제도화된 협력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경쟁국과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고관세와 공급망 재편 등을 단행하며, 기존 통상 질서와 안보 동맹에 구조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은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의존성을 재검토하고, 상호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토마스 셸링의 ‘초점(focal point)’ 개념을 이론적 분석틀로 도입하여, 외부 위협이 공동 대응의 계기가 되는 조건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된 위협 인식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재인식은 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전략적 균형자로서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트럼프 시대의 경제 안보 정책을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 보기보다 동맹 구조와 역내 질서를 재편하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주제어 | 트럼프 2.0, 경제 안보, 한중일 협력, 제도화, 한중일 FTA

1. 서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2025년,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 미·중 전략 경쟁의 환경 속에서 그는 1기 행정부보다 더욱 강경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까지 강경한 경제적 조치를 연이어 단행했다. 무역 불균형을 국가 안보와 연계한 ‘경제 안보’ 정책을 통해, 상호 관세 부과, 무역 재협상, 공급망 재편, 방위비 재분담 등의 경제적 압박 정책을 동원했다. 이는 경쟁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한국과 일본까지 공통된 구조적 위협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전략적 이해관계, 역사적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3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따른 공통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역내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대립과 경쟁 구도 속에서 협력이 불가능했던 3국이 공동 위협을 인식하고,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할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중일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분석 수준(체제, 제도, 전략)과 핵심 변수(구조적 제약, 제도 설계, 행위자 전략)에 따라 세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한중일 협력의 제약을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통해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차정미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약한 제도화’로 정의하고, 역사 및 안보 균열로 인해 협력이 제약되는 구조적 상황을 분석했다.¹⁾ 오승렬도 한중일 경제협력의 추상적 관념 및 제도 마련의 한계를 비판하고, 역사, 영토 분쟁 등 비경제적 요소가 협력의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함을 강조했다.²⁾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구조에서의 안보 정책이나 외부적 압력이

1) 차정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한중일 3국 협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2집 2호, (2018), pp. 219-255.

역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협력 유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한다.³⁾

둘째, 제도·통상적 접근 방식은 한중일 FTA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제도화 논의와 통상 규범, 무역 자유화에 집중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제반 요인을 분석한다. 이창재 외는 한중일 경제 협의체 구상을 제시하고, 3국의 경제적 위상과 상호 의존도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추진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분석했다.⁴⁾

마지막으로 외교 전략 및 역할론 접근 방식은 한중일 3국 협력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역할과 전략적 선택에 주목한다. 홍주연은 3국 협력 메커니즘이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 멤버십의 중첩으로 인해 동력을 부여받고 한국이 3국 협력의 중재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더 나아가, 장 무후이(Zhnag Muhui)는 한중일 3자 협력을 위해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이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⁶⁾

요컨대, 대부분의 연구들은 “왜 협력이 지체되거나, 실패하는가”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트럼프 2.0 시대의 일방주의적 경제 안보 정책에 따른 한중일 3국을 둘러싼 외부 위협에 주목하며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왜 한중일이 협력해야 하는가?”, 둘째, “한중일은 어떤 조건에서 협력하게 되는가?”, 셋째, “그 협력이 실제로 제도화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 틀로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의 ‘초점(Schelling point 또는 focal point)’ 개념을 도입하여 과거 협력의 방해

2) 오승렬, “한중일 경제협력 심화와 한반도의 대응과제,” 『국토』 2013집 12호, (2013), pp. 5-11.

3) 김상규, “한, 중, 일 3국의 위기와 협력에 관한 연구: 비전통 안보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집 4호, (2018), pp. 29-47; 박창권, “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31집 2호, (2015), pp. 7-40; 문예찬,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 6집 6호, (2024), pp. 591-608; 양동훈, “한중일 3국 협력 현황과 발전 과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집 62호, (2020), pp. 207-223.

4) 이창재 외, 『한·중·일 경제 협의체 구상』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5) 홍주연,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중일 3국 협력의 동력과 부침,”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집 1호, (2022), pp. 85-128.

6) Zhang Muhui, “Growing Activism as Cooperation Facilitator: China-Japan-Korea Trilateralism and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2(Summer 2016), pp. 309-337.

요인인 미국 변수(외부 요인)가 오히려 공통의 위협이라는 특정 조건을 만들어 내고,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 2.0 시대의 강력해진 경제 안보 정책이 한중일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공동 위협 인식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재인식이 실제로 협력을 촉진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한중일의 전략적 불신과 만성적인 제약 아래에서, 외부의 위협(압력)이 어떻게 3국의 공동 대응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분석 틀과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 정책과 그에 따른 한중일의 공동 위협 인식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한중일 경제협력과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기회와 실현 방안에 대해 고찰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국가는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협력에 임한다.⁷⁾ 즉, 공통의 이해 또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각 국가는 상호이익의 구체적인 형태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하고 다를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거나, 상호 기대치에 대한 오해로 인해, 협력의 의지가 있어도 목표, 방향, 방식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은 ‘초점

7) Robert O. Keohane,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Routledge, 1989), Chapter 1.

8)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si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Summer 1992), pp. 576-577.

(Schelling point 또는 focal point)’을 제시했다.⁹⁾ ‘초점’은 명시적인 의사소통 또는 사전 조율 없이도 각 국가들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특성의 선택 지점이나 해결책을 의미한다. 특히, 특정 위협이나 기회가 ‘두드러지는(salience)’ 외부 요인이 존재할 때, 명시적인 합의 외에도 직접적인 대화나 협상 없이도 상호 간의 기대의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조정(tacit coordination)’이 이뤄질 수 있다. 즉, 초점은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점을 기반으로, 국가들은 공통의 외부 위협을 인지할 때, 과거 공통의 지식, 문화적 배경, 상황적 맥락 등을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눈에 띄는’ 선택으로의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외부 요인이 언제 ‘초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다. 외부 요인이 단순히 두드러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부 요인은 종종 협력의 방해 요소로 존재해왔다. 예컨대, 한중일 3국 협력의 사례에서 주요 외부 요인인 미국 변수는 그동안 각국에 서로 다른 전략적 신호를 보내, 오히려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길버트 로즈만(Gilbert Rozamn)은 냉전의 유산에 따라 세계화와 민족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아래 미국이 취한 동아시아에서의 정책이 지역협력을 방해했다고 본다.¹⁰⁾ 또한, 켄트 칼더(Kent Calder)도 한중일 3국이 모두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3국의 협력보다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헤게모니가 역내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¹¹⁾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 요인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오히려 공통된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협력의 ‘초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9)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10) Gilbert Rozman,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3-6.

11) Kent Calder, "U.S. Foreign Policy in North East Asia," Samuel S. Kim,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Lanham, MD: Rowman and Little field, 2004).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협 또는 기회의 성격이 명확하고 두드러져야 하며 (salience), 그 영향이 여러 국가에게 유사하거나 대칭적(symmetry of exposure)으로 작용하고, 국가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국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을 상호 인식(mutual recognition of convergence)해야 한다. 단순히, 공통된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통의 위협을 초점으로 인식한 국가들이 협력을 하게 될 때, 불균등한 역할,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한 배신이나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로 협력이 장기화되지 못하는 협조의 문제가 등장한다.¹²⁾

종종 협력은 단기적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에 대해 장기적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상대 국가가 공약(commitment)을 배신하려는 충동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¹³⁾

이런 협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필요하다. 로버트 O. 코헤인(Robert O. Keohane)은 ‘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유도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았고, 제도화는 보편성, 구체성, 자율성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¹⁴⁾ 이를 기반으로 존 G. 러기(John G. Ruggie)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통해 규범 기반의 상호 기대와 반복적 상호작용이 협력의 신뢰 기반을 형성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다자주의가 조정의 문제를 관리하고 협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단계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다자주의는 특정한 이해관계나 전략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 유형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행위를 명시할 수 있는 제도(원칙)에 기반한 셋 이상의 국가

12)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si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pp. 578-584; Vincent P. Crawford, Uri Gneezy, and Yuval Rottenstreich, “The Power of Focal Points Is Limited: Even Minute Payoff Asymmetry May Yield Large Coordination Failur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4(September 2008), pp. 1443-1458.

13)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Spring 1982), p. 180.

14) Robert O. Keohane,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pp. 567-574.

틀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제도적 형태라 할 수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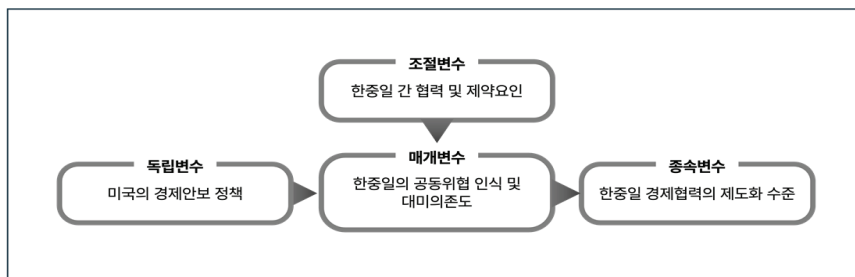
그러나 보편적 다자주의의 형태가 효율성 저하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소수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유효한 대안이 되고 있다.¹⁶⁾ 특히, 협력이 낮은 제도화 수준을 가진 경우에 소다자주의는 최소의 참여국으로 협상 비용을 줄이고 유연한 합의를 통해 신속한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틀은 초점에 의해 시작된 협력이 협조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 축적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와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외부 요인을 주로 협력의 제약요인으로 다뤄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 요인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 협력의 ‘초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왜 한중일은 협력해야 하는가? 둘째, 어떤 조건에서 협력이 이뤄지는가? 셋째, 그 협력이 어떻게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림 2-1>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그림 2-1> 트럼프 2.0 시대 미국 경제 안보 정책과 한중일 협력의 관계 구조



출처: 저자 작성.

15)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si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pp. 578–584.

16) 민병원, “소다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개념, 기능, 효과-,” 『통일연구』 22집 2호, (2018), pp. 177–218.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이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통상 압박과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면서, 경쟁국과 동맹국에 공통의 위협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공동의 위협 인식을 형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미 의존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 두 요소는 매개변수로 작용하며, 3국의 협력 필요성을 제고하게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력은 3국 간의 전략적 신뢰, 정치체제의 차이, 역사적 갈등 등 조절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요소는 협력의 장애 요인이자, 반대로 위협 인식을 증폭시키는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 안보 정책은 한중일 3국 간 공동 위협 인식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재인식하게 한다.

가설 2. 한중일 3국 간 공동 위협 인식이 증대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주 요성을 재인식할수록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강화한다.

가설 3. 한중일 3국 간 협력 촉진 요인이 강할수록, 공동 위협 인식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 재인식이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강화한다.

가설 4. 한중일 3국 간 협력 제약 요인이 강할수록, 공동 위협 인식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 재인식이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약화한다.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고, 과정추적(process tracing)에 기반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이는 특정 시기와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수 간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식별하는 데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전후에 나타난 담화 및 3국 정부의 공식 브리핑과 공동성명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과 연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중일 3국 경제협력

의 조건과 제도화 수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코헤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편성, 구체성, 자율성의 제도화 측정 수준에 더해 지속 가능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추가하여 3국 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3.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안보

“미국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America)”를 선포하고,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다. 트럼프 2.0 시대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며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까지 더욱 강경해진 무역 재협상과 고관세를 예고했다. 또한 이것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는 ‘경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고, 185개국을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와 무역적자 규모에 따라 최대 50%에 다다른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발표했다. <표 3-1>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발표된 관세와 그에 따른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일지

날짜	주요 내용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및 2기 행정부 시작 •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1월 26일	• 불법 이민자 이송 항공기 착륙 거부에 따른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 부과 → 1주일 후 50% 인상 → 콜롬비아가 미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관세 보류
2월 1일	•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날짜	주요 내용
2월 3일	•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30일간 유예
2월 4일	• 중국 추가 10% 관세 발표
2월 10일	•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고 • 중국, 미국산 에너지·상품에 대한 10~15% 보복관세 부과
2월 13일	•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 예고
2월 26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발표 • 중국 관세 10% 추가(총 20% 관세 적용)
3월 5일	•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3월 6일	•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에 대한 4월 2일까지의 관세 면제 행정명령 서명
3월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3월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발표 (1기 행정부 당시보다 알루미늄 관세는 15%나 상향 조정) • EU, 미국산 상품 대상 260억 유로의 보복관세 발표
3월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89억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및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협의 요청
3월 24일	•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25% 관세 부과 발표 (4월 2일부터 발효)
3월 26일	•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4월 3일부터 발효)
4월 2일	•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 •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 10% 부과(4월 5일부터 발효) • 대미 무역적자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 (4월 9일부터 발효) →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등
4월 4일	•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 추가 보복관세 부과 예고 (4월 10일부터 발효)
4월 5일	• 전 세계 대상 10% 기본 관세 발효
4월 8일	• 중국에 대한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
4월 9일	• 중국, 미국산 수입품 84% 보복관세 인상 • 중국 제외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90일간 유예 전격 발표 • 중국의 누적 관세 145% 인상
4월 12일	• 스마트폰, 컴퓨터,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상호 관세 부과 대상 제외
4월 22일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의 국가 안보 관련 영향 조사 착수

날짜	주요 내용
5월 4일	•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 발표
5월 9일	• 미국-영국 무역합의 발표 • 영국산 자동차 관세 연간 10만 대 한해 25% → 10% 관세 인하 •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및 10%의 상호 관세만 유지 • 영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5월 10~11일	•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스위스 제네바)
5월 12일	• 미·중 관세 115%p 인하 • 90일간 미국 대중 관세 145% → 30%, 중국 대미 관세 125% → 10% 인하
5월 14일	•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 관세 120% → 54% 인하
5월 23일	•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경고(6월 1일부터 발효) • 애플(Apple)사 겨냥, 아이폰 미국 제조 불가능 시 최소 25% 관세 부과 경고
5월 25일	• EU에 대한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5월 28일	• 미연방 국제 통상 법원, 상호 관세 시행 금지
5월 29일	• 미연방 항소법원, 상호 관세 일시 복원 명령
5월 30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배 인상 발표(25% → 50%)
6월 3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50% 인상 포고문 서명
6월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6월 10일	• 미연방 항소법원, 항소심 본안 심리 완료 때까지 상호 관세 효력 지속 결정
6월 26일	•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희토류·반도체 관련 합의 발표
7월 7일	•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 하루 전, 한국 포함 14개국에 대한 관세 서한 일방적 발송 → 한국·일본 25% 등 발표(보복관세 결정 시, 2배 인상 경고) •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은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 서명
7월 23일	• 미일 관세협상 타결, 25% → 15% 관세 인하
7월 31일	• 한미 관세협상 타결, 25% → 15% 관세 인하

출처: 각종 언론보도 종합.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발이 커지자, 9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미 1기 행정부 당시 중국과의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145%라는 누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또한 1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5월 10일 미·중 고위

급 무역 회담을 통해 115%p를 인하하면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총 25개 국가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행정부 당시, 『국가 안보 전략(The National Security)』에서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¹⁷⁾ 경제 안보는 국가의 권력과 부를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국가의 자원과 재정, 시장의 확보와 활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서, 경제적 강압으로부터의 보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된다.¹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경하고 보호주의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경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치환했다. 즉,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다자간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희생’으로 돌리고, 미국을 ‘약탈’하는 ‘적’을 새롭게 규정하는 안보 프레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는 경제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적인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미국의 커다란 소비 시장을 통해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 온 제조업 국가에게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안보에 따른 관세 정책을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부활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역사적 사례¹⁹⁾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고관세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강행

17)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18) 이효영, “경제 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집 8호, (2022), p. 3; Gusang Kang, “The Return of Tariff Policy: Strategic Responses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KIEP Opinion* April 30, 2025,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20308000000&bid=0008&list_no=11818&act=view (accessed: May 5, 2025).

19) 미국은 1828년 ‘혐오스러운 것들의 관세(Tariff of Abominations)’를 통해 북부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수입을 증대하려다 남부 농업의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남북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경험했다. 1890년 ‘매킨리 관세(McKinley Tariff of 1890)’를 통해 국내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하려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여론이 나빠졌다. 또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증대하려 했으나, 전 세계적인 보복관세 경쟁을 촉발했고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켰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관세 정책이 무역을 넘어 불법 이민, 마약, 방위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레토릭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소셜 미디어와 같은 비 전통적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전략적 경쟁국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를 내는 동맹국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방국이 적대국 보다 더 나쁘다. 수십 년간 우리는 우방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이용당했다”라고 주장했다.²⁰⁾

이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받던 한국에도 미국은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한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에 대해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며,²¹⁾ 무역과 안보를 포괄하는 협상을 예고 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관세 서한 발송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관세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²²⁾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15%의 상호 관세율이 극적 타결되었다.

한국은 2012년 한미 FTA에 따라 상호 간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 말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약 20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는 약 600억 달러로 3배 이상 무역적자가 증대되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이 동맹국에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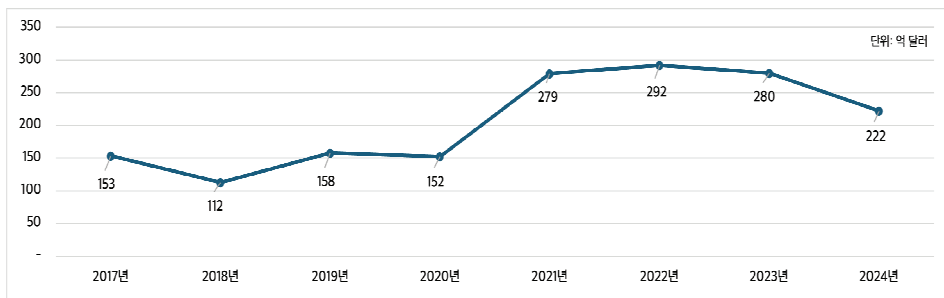
20) Fox 5 Washington DC, “FULL SPEECH: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s Trump Tariffs on “Liberation Day”,” April 3,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c2bZto8YvEc>(accessed: May 20, 2025).

21)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pril 9, 2025,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accessed: July 14, 2025).

22) 박성민,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지불”(종합2보),” 『연합뉴스』 2025년 7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002252071?input=1195m> (검색일: 2025년 7월 14일).

업 공급망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공장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출하고,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의 일부 품목의 한국에서의 수출이 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증가된 것이다(〈그림 3-1〉, 〈그림 3-2〉 참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한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성과를 얻어낼 경우,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1〉 한국의 대미 투자액 추이(2017-2024)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직접투자동향분석,” 2025년 1분기(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25).

〈그림 3-2〉 미국의 대한·대일 무역적자(2017-2025)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K>(accessed: July 13, 2025).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4월 2일에는 24%의 상호 관세가 예고되었으나 7월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p 상승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일본은 미국의 전체 수입 물량 중 4.5%를 차지하지만,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줄곧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적극적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까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익을 건 싸움에서 꺾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하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킬 것”으로 밝히며,²³⁾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표명했다. 이후, 일본도 관세협상을 통해 15%의 상호관세를 확정했지만, 자동차, 쌀, 일부 농산물 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5천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합의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방을 넘어 동맹국에까지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국가 간 신뢰’보다 ‘거래(협상)’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단으로서 관세를 거래(협상)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미국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강압적인 외교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맹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양보를 끌어낸 과거와 달리, 미국의 국력 소모를 철저히 막고, 동맹국의 안보적 공여를 요구하며 강압적으로 책임져야 할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²⁴⁾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일종의 ‘표준 모델’로서 대표적인 경제 대국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23) 김민표, ““꺾보는데 참을 수 있나”...거칠어진 일본 이시바 총리의 입,” 『SBS News』 2025년 7월 11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73873(검색일: 2025년 7월 13일).

24) 전재성,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① 트럼프주의 외교 전략과 세계질서의 미래, 한미관계,” EAI Issue Briefing (2025), p. 6. https://www.eai.or.kr/new/en/pub/view.asp?intSeq=22678&board=eng_reports&keyword_option=&keyword=&more= (검색일: 2025년 7월 14일).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며, “트럼프가 선택한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²⁵⁾ 이는 다소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전략일지라도 한국과 일본이 안보라는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세를 통한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및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안보 문제를 연계해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빠르게 합의하면, 이를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면 예외 없이 압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심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을 상호 경쟁 구도로 설정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미국이 어느 쪽에게 더 손을 내밀었는가?” 또는 “협상에서 미국에게 얼마나 양보했는가?”는 단순히 외교 현안으로 끝나지 않고, 국내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리더십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은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⁶⁾

이에 따라, 미국은 두 국가의 상호 경쟁 구도를 활용해 자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거래의 차원을 넘어서, 동맹국 간의 심리적 긴장과 불안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 간의 협조나 공동 대응을 약화하고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5) 김은중, “트럼프, 한국·일본부터 콧 집어 거론… “간담이 서늘해지는 메시지.”, 『조선일보』 2025년 7월 8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7/08/JRWFODJ2AFFIFK6MR3O6XA2SUM/>(검색일: 2025년 7월 14일).

26) 7월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실패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 유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다른 핵심 축인 중국은 오래 전부터 경제를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사용해 왔다.²⁷⁾ 경제력을 통해 빠르게 부상한 중국은 다른 국가에 경제적 보상과 처벌을 교차적으로 운영하면서 외교관계를 운용해 왔다. 특히,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때 수출입 제한, 관광 규제 등의 강력한 경제 보복을 가해 왔다. 한국은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등의 경제 보복을 겪었고,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긴장 상태를 겪은 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었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 전략에 합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강압적 접근과 미국의 정책 기조 전환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커녕,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했다.

결국,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관세 부과, 공급망 통제, 기술 규제, 방위비 분담 압박 등 중국의 경제적 통치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맹국을 대하는 전략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한국과 일본에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되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거나 기존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줄이는 등 자율적인 협력체계나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미국만큼이나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는다. 중국 또한 미국과의 전략 경쟁으로 인한 위협 속에서 역내 협력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은 7월 11일 개최된 ASEAN+3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동아시아는 미국의 일

27)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p. 21.

방적인 무차별 관세 부과 등의 도전에 직면”했다며,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 통합 과정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한중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잘 드러난다.²⁸⁾ 즉, 중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균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경제 안보 전략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게도 동맹 차원에서 대중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공통된 위기 인식과 대응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즉, 위협 노출의 강도가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더라도, 미국 정책의 강압성과 두드러짐은 3국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성장 잠재력에 협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새로운 협력 논의의 초점(focal point)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오랜 시간 진척되지 않았던 한중일 FTA 논의가 다시금 재개되었다. 2025년 3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3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포괄적이며 차별 없는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고,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한중일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통합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⁹⁾ 또한, 2025년 8월 23일~24일 양일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7년 만의 한일 정상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미일 협력’ 추진뿐만 아니라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28) 권수현, “中, 동남아서 결속 강조 “관세도전 맞서 아세안·한중일 뭉치자”, 『연합뉴스』 2025년 7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1114300009?input=1195m>(검색일: 2025년 7월 13일).

29) 산업통상자원부, “한·일·중, 글로벌 통상의제 공동 대응…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3월 3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158>(검색일: 2025년 7월 15일).

이처럼 한중일 3국 간 공동 위협 인식이 증대될수록, 3국은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동시에 임시적인 협력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해진다. 협력의 제도화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의해 협력이 공고화해지고, 예측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경제 안보 정책에 따라 한중일의 공동 위협 인식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 재인식이 3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어떻게,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가? 또한, 오랜 기간 협력을 저해한 제약 요인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중일 협력의 당위성을 재조명하고, 기존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또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3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 전략적 대응의 방향성 또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 한중일 경제협력의 기회와 실현 방안

90년대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와 지역 경제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만의 제도화된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나 ASEAN+3 등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제도화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 그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협력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일본, 한국은 세계 2위, 3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동아시아 전체 GDP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비중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 및 상호 의존적 관계를 고려할 때,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자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역내 경제협력 및 통합을 축

진하기 위한 ASEAN+3를 통해 최초의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1999년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비공식 조찬 모임을 했고, 이 자리에서 3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후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2007년에는 ASEAN+3와는 별개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최초의 단독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정상회의 정례화를 위한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³⁰⁾

〈표 4-1〉 한중일 정상회의 일시

차수	일자	개최지	참석자			주요 내용
			한국	중국	일본	
1차	2008. 12.13.	일본 후쿠오카	이명박	원자바오(温家宝)	아소 다로(麻生太郎)	한중일 3자 간 협력 사이버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Cyber Secretariat, TCSS) 구축을 위한 행동 계획 합의
2차	2009. 10.10.	중국 베이징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 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 성명’ 채택
3차	2010.5.29-30	한국 제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3국 협력 VISION 2020’, ‘표준 협력 공동 성명’,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 성명 4건 채택
4차	2011.5.21-22	일본 도쿄			간 나오토(菅直人)	- 정상 선언문 및 부속 문서 채택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협정 발표 → 9월 사무국 개소
5차	2012.5.13-14	중국 베이징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3국 FTA 연내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착수 합의

30) 박홍석,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정치연구』 13집 1호, (2010), pp. 153-173; 홍주연,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중일 3국 협력의 동력과 부침,” pp. 85-128.

차수	일자	개최지	참석자			주요 내용
			한국	중국	일본	
6차	2015. 11.1.	한국 서울	박근혜	리커창 (李克強)	아베 신조 (安倍晋三)	-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3국 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계 강화
7차	2018. 5.9.	일본 도쿄	문재인			- 정상 선언문 및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 성명 채택 3국 협력 강화
8차	2019. 12.24.	중국 청두				-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및 부속 문서(고령화 협력) 채택 3국 협력 강화
9차	2024. 5.26. -27.	한국 서울	윤석열	리창 (李強)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 공동선언 및 3국 지식재산 협력 및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부속 문서 채택 3국 협력의 제도화 증진 노력

출처: 아태지역협력과, “한·일·중 3국 협력(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3963/contents.do(검색일: 2025년 7월 16일).

〈표 4-1〉에서처럼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화는 2011년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설립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 중,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한중일은 제조업 분야의 강국으로 국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계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 대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3국 간 상호 무역 의존도도 매우 높다(〈표 4-2〉 참고).

〈표 4-2〉 한중일 3국 간 상호 무역 통계 비교(2024년 연간 누적 기준)

국가	상대국	수출	수입
한국	중국	\$1,330.1억 (1위, 전체 수출 중 19.5%)	\$1,398.8억 (1위, 전체 수입 중 22.1%)
	일본	\$296.1억 (6위, 전체 수출 중 4.3%)	\$475.9억 (3위, 전체 수입 중 7.5%)
중국	한국	\$1,463.8억 (5위, 전체 수출 중 4.1%)	\$1,817억 (2위, 전체 수입 중 7.0%)
	일본	\$1520.1억 (3위, 전체 수출 중 4.2%)	\$1562.5억 (3위, 전체 수입 중 6.0%)
일본	한국	\$296억 (3위, 전체 수출 중 4.3%)	\$475.9억 (3위, 전체 수입 중 7.5%)
	중국	\$1,246.3억 (2위, 전체 수출 중 18%)	\$1,786억 (1위, 전체 수입 중 25%)

출처: K-stat, “국내통계,”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검색일: 2025년 7월 17일); Trading Economics, “Indicator,” <https://tradingeconomics.com/indicators>(accessed: July 17, 2025).

한중일은 높은 상호 의존도를 바탕으로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등 다양한 장관급 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특히, 3국은 2012년 한국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3국의 FTA 협상 착수에 합의하면서,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 FTA는 3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TA가 체결될 경우, 전 세계 3위의 지역 통합 시장으로 부상하며,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생변수에 취약한 동북아의 교역 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러나 한중일 FTA는 2019년 11월, 서울에서 제16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이어서 12월 베이징에서 회기 간 회의 이후 2025년 3월 ‘한일중 경제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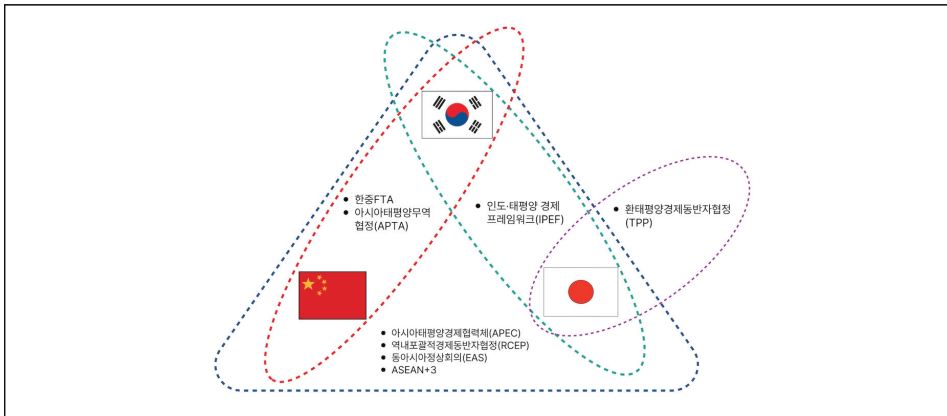
31) 산업통상자원부, “한-중-일 FTA,” 『FTA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kfta/lov1/cnjp/1/1/>(검색일: 2025년 7월 17일).

장관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장기간 체결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그 원인에는 다음의 네 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1>와 같이, 한중일은 이미 다양한 역내 다자주의 경제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4-1> 한중일 3국의 역내 경제협력에 참여 구도



출처: 저자 작성.

한중일은 APEC,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ASEAN+3 등 지역경제 협력체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표면적으로 공통의 협력 기반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개별 협력 네트워크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경제 통상 전략이 다르다. FTA 협상에서도 협력 목적이 다르므로 실질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RCEP,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등 자국 중심의 다자협력 체제를 확장하려 한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선호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의 사이에서 균형적인 다자주의와 실용적 양자 외교를 추구하려 하나,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이 상충하며 독자적 전략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³²⁾ 이는 단순한 경제 협상을 넘어 사실상의 지정학적 균형을 조율해야 하는 복합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다자 협정으로 인해 협력의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FTA 추진에 따른 추가적 비용 대비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이 기저에 있다.

둘째, 3국의 통상 규범의 수준과 범위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닌, 각국이 속한 경제협정의 규범과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수준의 고도화 된 통상 규범을 지향하나, 중국은 RCEP과 같이 포괄적이고 낮은 수준의 규범을 적용하길 원하고 있다. 한국은 상충하는 두 규범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이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와 함께, 3국이 산업 구조상 민감 분야가 중첩되면서 각국의 이견이 존재한다. 한국은 중국의 농수산물, 일본의 제조업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중국은 일본의 제조업 분야를, 일본은 중국의 농수산물 분야에 주목하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³³⁾

셋째, 3국 간의 만성적인 정치적·외교적 갈등이 경제협력의 근본적인 방해물로 존재하고 있다.³⁴⁾ 3국 모두 국내 여론과 정치 동향에 민감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의 비경제적 요소가 주목받을 때 늘 3국 경제협력의 상향식 진전을 막는 장애로 작용해 왔다.³⁵⁾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 및 독도 문제 등을 비롯한 수출 규제 문제 등은 한일 관계의 장애가

32) 최영미, “한중일 삼국의 FTA 전략: 미일의 TPP vs. 중국의 RCEP 하 한국의 전략적 선택,” 『新亞細亞』 21집 2호 (2014), pp. 104-132.

33) 김성진, “한중일 FTA 8개월만에 협상…핵심분야 이견으로 진전 더뎠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034900003>(검색일: 2025년 7월 18일).

34) 차정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한중일 3국 협력을 중심으로,” pp. 235-236.

35) 오승렬, “한중일 경제협력 심화와 한반도의 대응과제,” p. 5.

되고 있고, 센카쿠 열도를 둔 중일 간의 영토 분쟁, 사드 분쟁 이후 한중 간의 약화된 신뢰 등은 모두 국가 간 대립을 야기하고 경제협력으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심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에 따른 3국의 협력이 지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경제 블록을 견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미국과 전략적 연계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 또한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고 있고, 이에,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정세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3국의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경제협력이 지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통의 전략적 목표 부재 및 내재적인 한계와 외부적 환경은 3국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더욱 강경해진 보호무역주의는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는 한중일 3국에 공통된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일방적인 관세 정책과 압박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및 수출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구조적 제약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은 현 상태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3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보편성, 구체성, 자율성, 지속성 수준에서 제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3국은 공통된 외부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고관세 부과나 공급망 통제와 같은 경제적 강압은 각국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그 불확실성과 충격이 일정하게 공유되면서 안정적인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다만 미국의 안보동맹(주둔군,

확장억제), 전략기술(반도체 · AI), 대중 투자 규제와 같이 건드릴 수 없는 레드라인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은 이러한 민감 영역을 피한 의제에서부터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 FTA의 점진적 추진과 역내 무역 활성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2025년 재개된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고관세 부과와 같은 외부 무역 장벽에 대한 역내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3국 간 교역 비중을 높여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반면, 여전히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통상 규범의 수준이 다르고, 산업 구조의 민감 분야의 중첩 문제 등 각국이 FTA 체결로 인한 손익 계산표가 다르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미 · 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의 외부 위협 속에서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3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공통의 분야부터 점진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 로봇 등의 첨단 산업과 관련한 3국의 산업별 강점이 다르므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3국이 에너지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므로 탈탄소 산업 구조의 전환에 필요한 공동 기술개발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관계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되는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정부 협력체,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합의 된 협력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3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한 협의체 운영 중단이나 불참에

다른 제재 규약을 마련하여 협력 활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하다.³⁶⁾ 이는,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다자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한미일 안보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함께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관련 현안이다. 물론, 최근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악화하였으나, 3국은 과거 6자 회담 및 유엔 제재 이행을 공조한 경험이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 및 역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안보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정학적 경쟁에서 벗어나 사이버 안보, 팬데믹 대응,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관리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갖춘 3국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분야에서 협력의 성과를 축적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협력의 장기적 토대 마련을 위해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한중일 3국은 장기적 협력을 대비하여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의 문화·인적 교류의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의 교류는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갈등이 심화할 때도 민간 차원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여 협력의 동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³⁷⁾ 또한, 역사 문제 등 민감도가 높은 사안과 관련해서 한중일 역사 공동 연구 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교과서 개발, 보급 등 공존의 가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특정 국가의 자국 중심주의적 시각과 상충하는 다자적 이해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36) 양동훈, “한중일 3국 협력 현황과 발전 과제 연구,” p. 218.

37) 박진범, “이희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TCS 역량 강화 굳건한 제도화와 홍보 강화가 전제조건 - 한국정부도 TCS 잘 활용해야,” 『한중저널』 통권 20호, (2024), pp. 30-36.

마지막으로, 균형자이자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역내 사정은 녹록치 않다.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와 경제의 분리 전략은 미·중 전략 경쟁이 안보, 경제, 기술, 이념 등을 연계한 복합 위기를 초래하자 점차 한계를 노출했고, 외교적 자율성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차별화 방안이 필요해졌다.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의 논쟁 속에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한일 관계 개선, 중국의 부상과 북·중·러의 위협에 따른 중국 견제 등 다양한 논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이 국익을 우선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3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 균형자이자 중재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자 협력을 통한 개방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히 중재하는 것이 아닌, 3국 협력의 규칙을 제정하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³⁸⁾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하고, 통상, 산업, 기후, 기술 협력을 연계하는 다차원의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상하는 등 의제 설정 역량이 중요하다. 이는 일관된 정책 수행 역량과 후속 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이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파트너’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협력의 성과가 불필요한 정치적, 이념적 논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여야 하며, 동시에 사회·문화적 자원을 통한 외교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중일 협력의 잠재력과 성과를 역내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다. 특히, 3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기술 협력 등

38) 이용욱·하경석, “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 『국가전략』 20집 1호, (2014), p. 10.

다자간 수준에서의 공동 의제를 수립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미·중 전략 경쟁과 트럼프 2.0 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환경 속에서 다자협력에서의 중재자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경제 거버넌스의 설계자로서 위치를 강화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트럼프 2.0 시대의 더욱 강력해지고 일방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한중일 3국 협력의 구조적 제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간 외부 요인으로서 미국의 변수는 한중일의 협력을 제약했으나, 미국의 변화한 경제 안보 정책이 공통의 위협으로 상호 인식될 때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외부 위협을 협력의 촉진 요인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조건과 매개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주목했다.

다만, 협력의 초점이 외부 위협에 있으면, 전략의 한계와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외부 요인인 미국의 정책이 국내 정치적 상황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즉, 협력이 외부 위협에 의존할수록 해당 위협의 변화에 따라 협력의 강도와 방향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협력의 제도화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수동적이고 일시적인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 간의 보다 내재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외부 환경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협력의 레버리지를 높여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이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보편성, 구체성, 자율성, 지속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2.0 시대의 예측 불가능하고 강압적인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은 한중일 3국에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기존의 대미 의존도의 재조정을 절감하게 하는 공동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공동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던 한중일 FTA 논의가 재개되고,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과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 균형자이자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창재 외, 『한·중·일 경제협의회체 구상』,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Allison, Graham,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 Calder, Kent, "U.S. Foreign Policyt in North East Asia," *The Internatioan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Lanham, MD: Rowman and Little field, 2004.
- Keohane, Robert O,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Routledge, 1989, Chapter 1.
- Rozman, Gilbert,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Sc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2. 논문

- 김상규, "한. 중. 일 3국의 위기와 협력에 관한 연구: 비전통 안보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4호 (2018), pp.29-47.

- 문예찬.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6호 (2024), pp.591-608.
- 민병원. “소다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개념, 기능, 효과-.” 『통일연구』 제22권 제2호 (2018), pp.177-218.
- 박진범. “이희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TCS 역량 강화 굳건한 제도화와 홍보 강화가 전제조건 - 한국정부도 TCS 잘 활용해야.” 『한중저널』 통권 20호 (2024), pp.30-36.
- 박창권. “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2015), pp.7-40.
- 박홍석.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정치연구』 제13권 제1호(2010), pp.153-173.
- 양동훈. “한중일 3국 협력 현황과 발전 과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제62호 (2020), pp.207-223.
- 오승렬. “한중일 경제협력 심화와 한반도의 대응과제.” 『국토』 제2013권 제12호 (2013), pp.5-11.
- 이용욱 · 하경석. “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 『국가전략』 제20권 제1호 (2014), pp.5-36.
- 차정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한중일 3국 협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2권 제2호. (2018), pp. 219-255.
- 최영미. “한중일 삼국의 FTA 전략: 미일의 TPP vs. 중국의 RCEP 하 한국의 전략적 선택.” 『新亞細亞』 제21권 제2호 (2014), pp.104-132.
- 홍주연.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중일 3국 협력의 동력과 부침.”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4권 제1호 (2022), pp. 85-128.
- Crawford, Vincent P., Uri Gneezy, and Yuval Rottenstreich. “The Power of Focal Points Is Limited: Even Minute Payoff Asymmetry May Yield Large Coordination Failur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4 (September 2008),

pp.1443-1458.

Jervis, Rober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 (Spring 1982), pp.357-378.

Ruggie, John G. "Multilateralsi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Summer 1992), pp.576-577.

Zhang, Muhui. "Growing Activism as Cooperation Facilitator: China-Japan-Korea Trilateralism and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2 (Summer 2016), pp. 309-337.

3. 보고서

이효영. "경제 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8호 (2022).

전재성.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① 트럼프주의 외교 전략과 세계질서의 미래. 한미관계." EAI Issue Briefing (202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직접투자동향분석." (2025).

4. 인터넷 자료

Trilateral Statistics Hub. "3국협력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2025년 1월, <https://data.tcs-asia.org/ko> (검색일: 2025년 7월 16일)

권수현. "中, 동남아서 결속 강조 "관세도전 맞서 아세안·한중일 뭉치자"." 『연합뉴스』 2025년 7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11114300009?input=1195m>(검색일: 2025년 7월 13일).

- 김민표. ““꺾보는데 참을 수 있나”…거칠어진 일본 이시바 총리의 입.” 『SBS News』 2025년 7월 11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73873(검색일: 2025년 7월 13일).
- 김성진. “한중일 FTA 8개월만에 협상…핵심분야 이견으로 진전 더뎠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034900003>(검색일: 2025년 7월 18일).
- 김은중. “트럼프, 한국·일본부터 콕 집어 거론… “간담이 서늘해지는 메시지.” 『조선일보』 2025년 7월 8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7/08/JRWFODJ2AFFIFK6MR3O6XA2SUM/>(검색일: 2025년 7월 14일).
- 박성민.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지불”(종합2보).” 『연합뉴스』 2025년 7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002252071?input=1195m>(검색일: 2025년 7월 14일).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중, 글로벌 통상의제 공동 대응…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3월 3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158>(검색일: 2025년 7월 15일).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일 FTA.” 『FTA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kfta/lov1/cnjp/1/1/>(검색일: 2025년 7월 17일).
- 아태지역협력과. “한·일·중 3국 협력(Korea-Japan-China Trilateral Cooperation).”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3963/contents.do(검색일: 2025년 7월 16일).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pril 9, 2025.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accessed: July 14, 2025).
- Fox 5 Washington DC. “FULL SPEECH: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s Trump Tariffs on “Liberation Day”.” April 3,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c2bZto8YvEc>(accessed:

May 20, 2025).

Kang, Gusang. “The Return of Tariff Policy: Strategic Responses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KIEP Opinion April 30, 2025.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20308000000&bid=0008&list_no=11818&act=view (accessed: May 5, 2025).

K-stat. “국내통계.”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검색일: 2025년 7월 17일).

Trading Economics. “Indicator.” <https://tradingeconomics.com/indicators> (accessed: July 17, 2025).

United State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K>(accessed: July 13, 2025).

Economic Security and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Trump 2.0 Era

Jeongeun Ah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ecurity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on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aggressive protectionist measures, including high tariffs and supply chain restructuring, which even targeted allied nations, thereby weakening the foundations of the existing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security alliances. In response, the three countries began reassessing their dependence on the U.S.-led economic framework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Drawing on the concept of the “focal point” as its primary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external threats can serve as catalysts for coordinated a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 shared perception of external threats and a deeper understanding of economic interdependence can promot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Importantly, South Korea appears to have a strategic opportunity to serve as a regional mediator. This research offer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by interpreting the Trump-era economic security not just as protectionism but as a strategic shift aimed at

restructuring alliance networks and regional order.

Keywords: Trump 2.0, Economic Security, South Korea-China-Japan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Korea-China-Japan FTA

투고일: 2025.07.21. 심사일: 2025.08.25. 게재확정일: 2025.09.05.

III

한반도의 미래전에 관한 연구

: 평시전 개념의 도입과 전시전 양상의 예측

지효근 (건양대학교)

1. 서론: 한반도 미래전에 대한 재인식
2.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3. 한반도에서의 평시전 양상
4. 평시전 영향 하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시
전쟁수행활동
5. 결론

21세기 전쟁은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사이버 능력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미래전 논의는 전면적 무력충돌에 집중하는 ‘전시전(戰時戰, wartime warfare)’ 중심의 시각에 치우쳐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전략적 행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쟁이 평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평시전(平時戰, peacetime warfare)’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평시전은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과 유사하지만, 공격 주체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평시전의 양상을 재래식 국지도발, 사이버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평시전의 지속성이 전시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한반도의 지형·기상 조건과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이 전시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고,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주제어 | 평시전, 전시전, 상시전, 회색지대 분쟁, 한반도 미래전

1. 서론: 한반도 미래전에 대한 재인식

21세기 전쟁 양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사이버 능력 등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미래전의 모습을 다각도로 전망하게 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 중심의 작전 개념과 전력 구조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방혁신 4.0과 ‘킬체인(Kill Chain)-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MP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의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미래전에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¹⁾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미래전 논의는 전쟁을 전면적 무력충돌 중심으로 이해하는 ‘전시전(戰時戰)’의 관점에 머물며, 둘째, 과학기술 발전이 전쟁 양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과학기술결정론적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시각은 한반도 지정학적 특수성과 비대칭 전력 구조, 그리고 전략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반도는 단순히 ‘전시’ 위협만 겪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북한은 이미 사이버전, 해킹, 서해 GPS 교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사이버전, 심리전, 정보전, 정치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 전쟁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평시와 전시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평시에 전개되는 전쟁 양상을 ‘평시전(平時戰, peacetime warfare)’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무력충돌을 의미하는 ‘전시전(戰時戰, wartime warfare)’과 구분되는 독자적 전쟁체계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시와 평시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과 평시전 개념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전쟁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또 다른 연구목적으로 한다.

1)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p. 35-38.

또한 한반도에서 ‘전시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입하는 국제전 양상을 띠는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과 기상 조건 때문에 과학기술 기반의 전쟁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미래전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를 검토하며, 특히 평시전과 전시전의 개념 구분과 그 함의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평시전 양상을 살펴보면서, 재래식 국지도발, 사이버전, 인지전, 그리고 하이브리드전의 특징과 전략적 의미를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4장에서는 전시전이 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전 양상과 한반도의 지형·기상 조건이 전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미래전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가. 미래전에서 평시전 개념의 도입 필요성

미래전에 대한 예측과 대비는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전 논의가 전쟁양상(warfare)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다루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진화를 의미하며, 전쟁의 수단과 연계된다. 이것은 무엇을 갖고 싸우는가와 관련된 전쟁의 미래(future of war)에 대한 것이다.²⁾ 그러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누구’와 ‘왜’ 전쟁을 하는가 하는 정치적 차원의 미래전(war of future)에 대한 것이다. 또 미래전이 전면전에만 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심리전, 정보전, 정치전, 사이버전, 인지전, 하이브리

2) 지효근, “한반도 미래전쟁에 대한 연구: 정치적 환경과 전장환경의 중요성,” 『군사연구』 제 141집(2016);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제17권 1호(2010).

드전 등과 같은 전쟁양상이 평시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평시전’과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평시전은 전면전이 발생하기 이전에 벌어지는 사이버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등 주로 비물리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전쟁으로 회색지대 분쟁과 유사하다. 그러나 회색지대 분쟁이 전쟁의 문턱(threshold of war) 아래의 공간, 즉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면서 이러한 공격 행위 또는 공격 주체를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회색지대 분쟁은 전쟁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23년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대표적이다. 하마스는 전면전이 아닌 회색지대 분쟁을 시도했지만, 전쟁의 문턱을 넘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대응한 것이다.³⁾

평시전은 전시전과 구분되는 개념이면서 회색지대 분쟁과 유사하지만, 공격 행위 또는 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회색지대 분쟁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4월 알려진 SK텔레콤 해킹사건이 대표적이다.⁴⁾ 해킹사건이 알려진 것은 2025년이지만, 실제 악성코드가 침투한 것은 2021년 8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⁵⁾ 아직 배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배후 세력은 북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⁶⁾ 더 큰 문제는 SKT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이미 ‘평시전’이 전개된 것으

3) 지효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1호(2024), pp. 156-157.

4) 조성미, “SKT 개인정보·IMEI 유출 가능성…3년전 악성코드 설치 추정,” 『연합뉴스』, 2025년 5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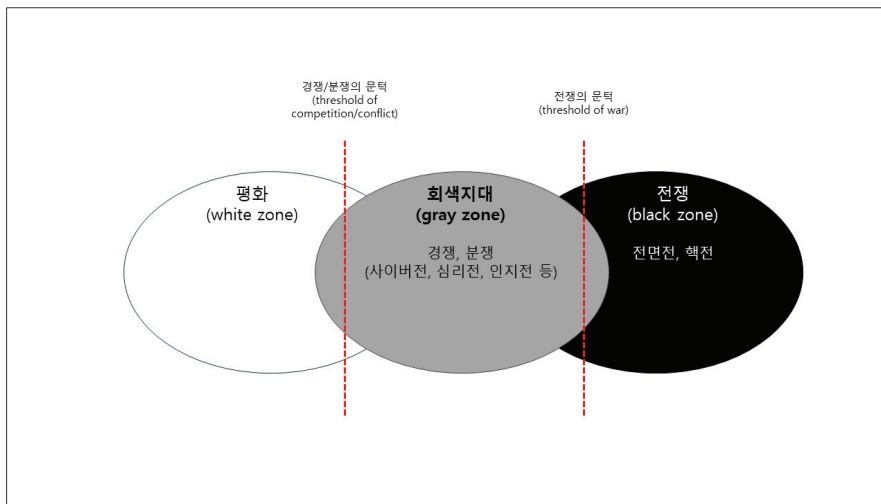
5) “국민 절반 해킹 피해 SKT 과징금 1348억원...역대 최대 이유는,” 『BBC News 코리아』, 2025년 8월 28일(<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vyvxx43jo>, 검색일: 2025. 8. 31).

6) 강필성, “中 혹은 北 소행? SKT 해킹사건, 배후 잡힐까 ... 과거 사례 보니,” 『뉴데일리』, 2025년 5월 23일.

로 간주해야 하고 이것이 ‘회색지대 분쟁’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회색지대 분쟁은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으나 현상변경을 위한 군사적 강압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⁷⁾ 따라서 회색지대 분쟁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고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반면, 평시전은 주로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하고, 사이버 공간, 인지 영역, 상대국가의 정치적 영역 등 비가시적 공간에서 발생하며, 공격의 행위 또는 주체가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행위가 인지되었을 경우 ‘경쟁 / 분쟁의 문턱’에 이르고 회색지대 분쟁의 단계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초한전’ 전략이 평시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⁸⁾

〈그림 1〉 전통적인 전쟁 스펙트럼



※ 출처: 지호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p. 157.

- 7)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3호(2018), p. 93.
- 8)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은 1999년 두 명의 중국군 대령이 제시한 것으로 미래의 전쟁은 반드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며, 국경과 전장의 경계도 무의미해질 것이고, 경제, 금융, 사이버, 테러, 심리전, 법률, 마약, 밀수, 정보 등 모든 영역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전략으로 일종의 간접접근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차오량·왕상수이 저, 이정곤 역, 『초한전: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서울: 교우미디어, 2024).

〈그림 1〉에서 회색지대 내 경쟁과 분쟁이 존재하지만, 평화(white zone)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SKT 사례에서처럼 회색지대 밖의 평화지대에서 사이버 공격이 엄연히 존재했고, 다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회색지대 분쟁과 구별되는 평시전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의 분석틀을 보여주며, 평시전 공간 내에 다양한 전쟁 양상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상을 인지하고 대응할 경우 회색지대 분쟁으로 발전하며, 여기서 물리적·전면적 대응이 이루어지면 전시전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공격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평시전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평시전은 전쟁이 상시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의 개념 역시, 과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던 것에서 벗어나, 평시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보’가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소극적 평화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⁹⁾

평시전은 전시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전쟁의 문턱(또는 경쟁/분쟁의 문턱)을 넘지 않는 공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배후가 밝혀지더라도 물리적 보복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평시전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상시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전에서는 전시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평시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미래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미래전에 대한 논의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또 미래전

9) 현인택, “한반도 평화의 군사안보: 이론적 접근,”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pp. 375-377

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전쟁양상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⁰⁾ 하이브리드전쟁, 인지전 등의 논의가 그것이다.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미래전 논의가 바로 ‘회색지대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미래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RAND(2020) 연구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RAND는 미래전을 예측하면서, 미국이 ‘누구와’ 싸울 것인지, ‘어디서’ 싸울 것인지,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¹¹⁾ 이런 관점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미래의 전쟁’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¹²⁾ 국내에서는 군 관련 기관에서 주로 연구가 이뤄졌으며 외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¹³⁾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미래전쟁이 첨단화되고, 정밀화되며, C4ISR체계가 고도화되어 치명적이고, 단기속결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와 달리 오늘날 전쟁양상을 보면 오히려 장기전의 양상을 띠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⁴⁾ 2022년 발생한 제2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그 예이다. 드론과 같은 게임체인저가 등장하여 미래

10) Raphael S. Cohen et al.,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Santa Monica: RAND, 2020); 조지 프리드먼 저, 권재상 역, 『전쟁의 미래』(고양: 자작, 2001); Kenneth Allard 저, 권영근 역, 『미래전: 어떻게 싸울 것인가』(서울: 연경문화사, 1999); Bruce Berkowitz 저, 문장렬 역, 『새로운 전쟁양상』(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Jeffry R. Barnett 저, 홍성표 역, 『미래전』(서울: 연경문화사, 2000); A. A. 가레예프 저, 전갑기 역, 『러시아 군인이 본 미래의 전쟁』(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6) 등이 있음.

11) Cohen,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pp. 35-67.

12)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로는 지효근, “한반도 미래전쟁에 대한 연구,” pp. 308-309;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pp. 139-143; 손한별,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한국국가전략』 제5권 2호(2020), pp. 111-113 등이 있음.

13) 합동군사대학교 동북아군사연구센터, 『미래의 전쟁 핸드북』(대전: 합동군사대학교 동북아군사연구센터, 2022); 육군대학, 『미래전 양상 연구』(대전: 육군대학, 2009); 이근욱, “육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미래와 전쟁 그리고 정치적 분석의 중요성,” 『2014육군정책연구과제』(2014); 노훈·독고순, 『미래전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손한별,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 『비교한국학』 제31권 1호(2023); 차정미, “신기술과 전쟁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군사-기술혁신 넥서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4-11호(2024); 윤정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난 전장의 진화: 무인화, 기동화, 네트워크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ssue Brief』 제348호(2022); 노훈 외 공저, 『미래전장 스크랩』(서울: 국방연구원, 2008); 육군본부, 『21세기 전쟁양상: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걸프전까지』(계룡: 육군본부, 2002);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이론과 실상, 그리고 우리의 선택』(서울: 법문사, 2008) 등이 있음.

14) Stephen Biddle, “Back in the Trenches: Why New Technology Hasn’t Revolutionized Warfare in Ukraine,” *Foreign Affairs*, Vol. 102, No. 5(2023), pp. 153-159.

전쟁이 첨단화되고 신속히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의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처럼 다시 ‘참호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¹⁵⁾ 같은 맥락에서, 현대의 미래전 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쟁의 본질적 변화 요인으로 간주하는 기술결정론적 관점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은 기술 변화가 군사 전략과 조직, 작전 양상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며, 인간의 전략적 의지나 사회적 맥락보다 기술의 혁신 자체를 핵심 변수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1990년대에 추진한 군사혁신(RMA),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 그리고 최근의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결정론적 시각은 전쟁의 정치적·사회적 본질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전쟁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병력의 사기, 국민의 지지, 정치적 정당성, 연합체계, 정보전 우위, 심리적 억지력 등 비기술적 요인이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쟁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기술은 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회색지대 분쟁에 대한 연구이다. 회색지대 분쟁은 호프만(Frank Hoffman)이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분쟁”, 즉 하이브리드전쟁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¹⁶⁾ 회색지대 분쟁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평시전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전쟁의 문턱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공간에서 분쟁의 강도를 통제하면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분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마자르(Michael Mazarr)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회색지대 분쟁을 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전을 통해 정치적 목적 추

15) Biddle, “Back in the Trenches,” pp. 153–159.

16) 호프만은 개념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 회색지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미국의 ‘4개년 국방태세보고서’(QDR)에서였다.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Washington: U.S. DoD, 2010), p. 73;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Arlington: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pp. 7–8.

17) 이지용,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본 서해·남해 내해화 전략 고찰,” 『한국해양안보논총』 제8권 1호(2025), pp. 162–163; Michael Mazarr,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Washington DC: US Army War College Press, 2015), p. 2.

구, 2) 주로 비군사적, 비물리적 수단 사용, 3) 확전이나 정규전화 하지 않도록 전쟁의 문턱 아래에서 활동, 4) 특정 기간 내 결정적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¹⁸⁾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이러한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¹⁹⁾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회색지대 분쟁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평화와 전쟁의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회색지대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쟁 스펙트럼은 타당한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회색지대 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 국가에서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국가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버전, 인지전, 정보전, 심리전, 가짜뉴스 살포 등과 같은 공격 역시 회색지대 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범주화는 회색지대 분쟁의 본래 정의에서 벗어나며, 전면전이 아닌 모든 분쟁을 회색지대 분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격 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쟁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시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회색지대 분쟁을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규정한다. 즉, 회색지대 분쟁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서 전쟁의 문턱 아래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충돌인 반면, 평시전은 회색지대 분쟁을 포함하여 전시전을 제외한 평시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전쟁 양상을 포괄한다. 평시전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SKT 해킹 사례처럼 공격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가 심대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개념이 물리적 충돌을 의미하고 수행 주체도 지도자와 군인 등으로 제

18) Mazarr, *Mastering the Gray Zone*, p. 58.

19) 반길주, “해저케이블 안보와 회색지대 공세,” 『국가안보와 전략』 제25권 1호(2025); 김정민, “중국 회색지대 전략의 기원과 적용: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40권 3호(2024); 양욱,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전략연구』 제27권 3호(2020); 반길주,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호(2020);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3호(2018).

한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비물리적 충돌, 비가시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수행 주체도 일반 민간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전쟁의 시기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상화되고 있다. 더 이상 전시와 평시를 구분할 수 없고, 전면전만 대비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평시전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전면전에 대한 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시전과 전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미래의 전쟁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미래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방향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비대칭 전력, 사회 심리전, 지형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결정론적 접근은 실효성 없는 군사전략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²⁰⁾

다. 분석의 틀: 평시전과 전시전 구분을 위한 이론적 접근

현대전은 전통적인 전쟁 개념에서 벗어나 평화와 전쟁의 경계가 불분명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무력충돌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적대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전쟁 형태로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²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평시전과 전시전을 구분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먼저, 전쟁의 연속체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전쟁은 일정한 시점에 발생하여 일정한 시점에 종료되는 단절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클라우제비츠가 정의한 바와 같이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보면서도, 일정한 물리적 충돌이 수반되는 군사적 행위로 간주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정보기술의

20) Cohen,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p. 5.

21) 차오량과 왕상수이는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어떠한 목표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장은 어떤 곳에서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상시전’의 개념과 일치한다. 차오량·왕상수이, 『초한전』,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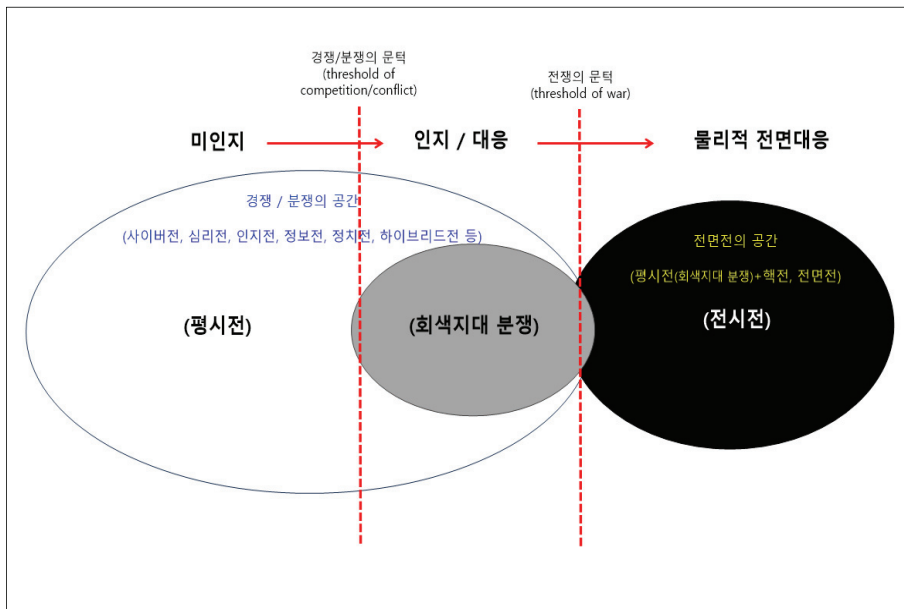
발전과 비정규전, 심리전, 하이브리드전의 확산은 전쟁의 개념을 다시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전쟁은 특정한 시점을 경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평시부터 전시, 그리고 전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의 준비, 수행, 마무리 단계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평시에도 이미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쟁의 연속체 개념은 군사전략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정보,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수단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둘째, 평시전 개념과 분석 범주이다. 전통적인 안보 담론에서 평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며, 군사력은 억지력으로 기능한다.²²⁾ 그러나 평시에도 상대방의 군사적 의도, 정보전, 사이버 활동, 심리전 등이 실제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전략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적극적인 전쟁의 한 형태로 간주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평시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평시전의 주요 양상을 다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 재래식 국지도발이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비무장지대 내 총격, 미사일 발사 등 전통적인 군사 수단을 활용한 저강도 도발을 의미한다. 둘째, 사이버전이다. 정부 전산망 및 금융망 해킹, 군 기밀 탈취, 사회 기반시설 마비 등 정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행위이다. 셋째, 인지전이다. 심리전 방송, 허위정보 유포, 사회 갈등 조장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이다. 넷째, 하이브리드전이다. 앞선 수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결합하여 다층적인 위협을 창출하는 전쟁 방식이다. 이 네 가지는 상호 독립된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사용되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범주는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평시전의 실체를 구체화하는 데에 유용하며, 단순한 비군사적 위협이나 국지도발로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념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²³⁾

22) 현인택, “한반도 평화의 군사안보,” pp. 375-377;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서울: 오름, 2001), pp. 17-21.

〈그림 2〉는 앞에서 제시된 논의를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과 평화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각기 다른 전쟁의 양상이 전시와 평시에 존재할 뿐이다. 전쟁 스펙트럼 상에서 평시전의 갈등이 고조되면, 회색 지대 분쟁 단계를 거쳐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과거에는 평시 국지적인 도발과 충돌이 있었지만, 사이버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등을 전쟁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면 이제 평시에도 늘 전쟁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평시전은 전시전보다 충돌의 물리적 결과는 약할지 모르지만, 전쟁의 범위와 비물리적인 피해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클 수 있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한 대비는 오히려 평시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분석틀: 평시전 개념을 도입한 상시전쟁 스펙트럼



※ 출처: 저자 작성

23) 여기서 제시한 네 가지 전쟁 형태가 평시전의 모든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전쟁 형태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반도에서의 평시전 양상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평시전의 주요 양상을 분석한다. 평시전은 전면적인 무력충돌이나 전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비군사적 수단과 제한적 군사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다층적 갈등 양상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 전쟁 개념인 ‘전시전’과 구별되며,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한반도는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도발을 병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독특한 지정학적·군사적 환경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시전은 단순한 평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충돌과 위협이 공존하는 전쟁의 비가시적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은 재래식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심리전과 정보전을 통한 인지전,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평시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합적 위협은 단일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으며, 군사·비군사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을 요구한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가 기간망과 사회 기반 시설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인지전은 국민 사회 내부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해 국가 통합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이브리드전은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통적 전쟁 양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종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가. 재래식 국지도발과 제한적 무력행사

재래식 국지도발은 한반도의 평시전 양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형태로, 한국에 군사적 압박과 심리적 위협을 가하기 위해 제한적 군사력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국지도발은 전면적인 전쟁 발발을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견제하고, 정치적·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제한전(limited war) 이론에 따르면, 상대국과의 전면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군사행동은 통상 국지도발로 규정되며,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작용한다.²⁴⁾

한반도에서는 1953년 정전 이후 국지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²⁵⁾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있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이 제한적 군사력 사용을 통해 남한에 심리적 충격과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도발한 것이었다.²⁶⁾ 이러한 사건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즉 군사적 긴장과 휴전 상태가 병존하는 환경에서 북한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무력행사를 통해 현상 유지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지도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킨다. 예를 들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사건은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회복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했고, 2017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내 긴장을 극대화시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유발했다.²⁷⁾ 이처럼 재래식 국지도발은 한반도에서 평시전의 주요 전쟁 양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응 측면에서 국지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전 및 심리전과의 연계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수적이며, 다자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적 압박과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24) Robert E. Osgood,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trategy*(Chicago: Chicago University, 1957).

25) 김영준·지효근, “세력균형론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대남 도발원인 연구: 1960년대와 1970년대 도발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36집(2013).

26)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27) 김귀근·이영재, “2명 부상 ‘DMZ 폭발사고’ 北 소행이었다…“北 목함지뢰 설치”, 『연합뉴스』, 2015년 8월 10일.

나. 사이버전과 인지전

한반도 평시전에서 사이버전과 인지전은 핵심적인 비군사적 위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사이버전은 국가의 중요 인프라, 군사 통신망, 민간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 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기능 마비와 혼란을 유발하는 공격 양식이다. 인지전은 사실과 허위 정보를 혼합하여 상대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하고, 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는 심리적·사회적 전쟁 수단으로 정의된다.²⁸⁾ 인지전은 국가 혹은 영향력 있는 조직이 적국 또는 적 국민의 인지 메커니즘을 조작하여 적을 약화시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적을 파괴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²⁹⁾

한반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특히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 등 전문 해커 조직을 동원해 2013년 한국은행 해킹 시도,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2016년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방송사 공격 등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공격들은 물리적 무력 충돌 없이도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은 그 익명성과 비대칭성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공격 주체 규명이 어려워 억지력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金正은은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3대 전쟁 수단으로 간주하였고, 사이버 공격의 낮은 진입 비용, 책임 규명의 어려움, 효과적인 억제력 부족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이버 전력을 핵과 미사일 능력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³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정상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 국가목표를 추구하기 어려운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전력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

28) 송태은, “현대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과 뇌과학의 무기화,” 『SW중심사회』 9월호(2024a), pp. 75-77; 송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4-11』(2024b), pp. 2, 6.

29) 설인효,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66권 2호(2023), p. 83.

30) 김보미·오일석, “金正은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INSS 전략보고』 No.147 (2021), pp. 2-8.

성하려 하는 것이다.

인지전 역시 북한이 집중하는 분야다. 인지전은 정보와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능력·과정을 공격함으로써 표적이 되는 개인, 집단의 인식과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³¹⁾ 인지전의 목적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의도대로 적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도 다양하다. 인지전은 전·평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의 인지 영역에 접근함으로써 의사결정과 정보처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인지 과정을 파괴하고 지혜와 지능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와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능력·과정을 공격함으로써 개인·집단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의사결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쟁이다. 인지전의 특성상 전·평시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전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남 방송,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활용해 남한 사회 내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지속해 왔다. 예컨대, 북한의 선전매체는 한국 정부와 군부를 비난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친북 성향 단체와 연계해 여론 분열을 획책한다. 이러한 인지전은 국가 내부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이버전과 인지전은 단독으로 기능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이며, 재래식 군사 행동과도 결합해 하이브리드전의 한 축을 이룬다. 북한은 제한된 군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 압박을 회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들 비군사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2017년부터 이어진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과 2020년 국방망 해킹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³²⁾

31) 서정순·김학민, “인지전 연구,” 『전략연구』 제31권 2호(2024), p. 348.

32) 임화섭·고현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전 세계 12만건 이상 감염,” 『연합뉴스』, 2017년

이러한 사이버전과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와 함께 민·관·군 협력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제적 탐지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반 보안 기술 도입도 확대해야 한다. 인지전 대응에서는 국민의 정보 식별력 제고와 공공외교 강화, 심리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 규범 마련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적·외교적 제재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시전에서 사이버전과 인지전은 비대칭적 위협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다. 하이브리드전과 복합적 위협

하이브리드전은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독립적, 또는 혼합되어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 범위에서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를 주목표로 하는 새로운 전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³³⁾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은 책임소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격 대상의 취약점을 겨냥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상대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대응을 방해하는 것이다.³⁴⁾ 하이브리드전은 지상, 해상,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 가운데 심리전을 동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최근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러한 공격이 여론 양극화와 사회분열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를 교란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전의 대부분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이버 공격을 중심으

5월 13일; 국방부(2023).

33) 지효근, “하이브리드전 승리요인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 『국방정책연구』 제36권 4호(2021), pp. 12-14.

34) 송태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최근 유럽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31 (2020), p. 1.

로 전개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사이버전 자체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브리드전의 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첫째,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가 기밀 및 첨단산업비밀 유출 및 고위 공직자 및 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및 스파이 활동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심리전 공격 가능성이 있다. 넷째, NLL 수역 등에서 북한과의 저장도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의 위협은 공격대상이 되는 적의 전투 및 대항 의지를 좌절시키고, 공격대상 정부와 제도의 정당성 및 현지 국민 혹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하는 공격 주체는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에 개의치 않고, 특정한 정치적, 이념적 메시지를 전파하려 하나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브리드전은 공격대상 국가의 여론 및 사회분열을 위해 심리전을 빈번하게 동반하고, 궁극적으로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이브리드전의 위협은 결국 전쟁의 모든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수준에서, 모든 형태의 분쟁에 대한 대비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인력, 자원, 기술을 갖춰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북한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및 전술과 공격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자행한 다양한 도발과 반복되는 군사적 위협 발언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³⁵⁾ 북한은 제한된 능력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은 당규약에서 대남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듯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35) 박영택,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실행 가능성과 전개 양상,” 『국방정책연구』 제27권 4호(2011), p. 105.

북한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평시에 노리는 정치적 목적은 한국에서 안보 불안정성을 높이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감행했던 하이브리드전의 사례로는 사이버 공격 및 해킹, 재래식 국지도발, 심리전, 무인기 침투, 위장 탈북 및 공작원 침투, 오물풍선 살포 등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핵무기 및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해킹을 통해 전 세계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어 미국 등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³⁶⁾ 이 외에도 서해상에서 GPS 및 전자기 교란, 2022년 용산 대통령실 상공으로 무인기 침투, 정찰, 2024년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도발은 물리적 수단과 비물리적 수단을 통해 한국의 취약점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보복공격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는 공간에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응은 하이브리드전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단순한 군사력 증강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심리전, 그리고 인지전 등 비군사 영역에서의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법적·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정보 공유와 신속한 위협 분석 능력 배양도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적 대응은 하이브리드전의 특성상, 한 영역에서의 약점이 전체 방어력을 저하시키는 점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한반도 평시전에서 하이브리드전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양상을 대표하는 복합적·비대칭적 위협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36) 김지원, “북한, 석달간 암호화폐 3200억원 훔쳤다...“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조선일보』, 2023년 9월 17일; 김보미,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과 미국의 대응,” 『INSS 전략보고』 No. 191(2022).

4. 평시전 영향 하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시 전쟁수행활동

한반도에서의 전시전은 전면전을 가정한다. 한반도의 전면전은 평시전과 연결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재래식 전쟁뿐만 아니라 핵전쟁 가능성도 포함된다. 또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국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의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한 제한사항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전면전 발생 가능성과 형태

전면전은 전쟁 연구에서 가장 전통적이고도 중대한 군사 충돌 유형 중 하나로, 국가 간 군사력이 총동원되어 직접적인 교전이 이루어지는 극단적 갈등 양상을 가리킨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면전을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폭력을 통한 의지 충돌의 극한 형태”로 정의하면서,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⁷⁾

현대 한반도 안보환경은 과거와 달리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핵·미사일 능력 증대, 그리고 사이버 및 정보전 수단 발달로 인해 전시와 평시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시전을 평시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정하며, 전면전은 군사력의 총력 투입과 대규모 지상·해상·공중 작전이 수행되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또한 평시전에서 발생한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 인지전 등 다양한 전쟁 형태가 전시전에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전면전 발생 가능성을 현실적 위협으로 만든다. 실제

37)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p. 55.

로 김정은은 2023년 12월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이후 2024년 1월 초 군수공장 시찰에선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급기야 김정은은 같은 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을 점령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하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³⁸⁾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태도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임을 보여준다.

한반도는 남북한의 독립과 휴전체제 성립 과정 때문에 태생적으로 분쟁이 국제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반도의 국제화는 역설적이게도 전면전의 발생을 부추기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상황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MAGA(Make Great America Again) 정책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을 부추기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면서 북·중·러 북방 3개국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과거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했다.³⁹⁾ 이와 경쟁하는 한·미·일 남방 3개국의 협력관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군사적 대비태세 역시 잘 갖춰져 있어 북방 3개국과 남방 3개국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상호 대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전면전 발생 이전까지 주변 4개국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억제하겠지만, 일단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주변국의 개입은 물론 전면전의 강도가 더욱

38) 이근평, ““전쟁 불사하겠다”더니 핵심 무기 수출…북한의 아이러니,” 『중앙일보』, 2024년 1월 21일.

39) 하채림, “北 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연합뉴스』, 2024년 11월 12일.

확대될 수 있다.⁴⁰⁾

전면전의 양상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단기속결전이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 당시 ‘6일 전쟁’을 언급한 바 있는데, 김정은은 이를 ‘3일 전쟁’으로 수정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⁴¹⁾ 방사포 등 포병화력과 지상군 및 특수전 부대를 앞세워 남한 전체를 3일 내 점령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선전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전쟁지속능력을 고려했을 때 단기전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선제적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 발의 핵무기를 무기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술핵무기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⁴²⁾ 북한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유사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라는 조건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3 kt 규모의 소형 전술핵무기는 치명적 피해 범위가 수백 미터에 불과하지만, 비행장, 항만, 군사기지 등 전략적 목표를 겨냥할 경우,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반격 능력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한 대응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핵무기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미국의 핵보복 공격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술핵무기는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⁴³⁾

40) 지효근, “한반도 미래전쟁에 대한 연구,” pp. 318, 325.

41) 이현호, “방사포 25만발 쏘고 4개 군단 진격…3일만에 전쟁 끝낸다는 北,” 『서울경제』, 2024년 11월 2일.

4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4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50기로 추정했다. 서혜림, “스웨덴 싱크탱크, 北보유 핵탄두 30 → 50기…90기 조립 가능,” 『연합뉴스』, 2024년 6월 17일.

43) 김보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 전략보고』 No. 182(2022), p. 18.

나. 전면전의 국제화와 다자개입 가능성

현대 전쟁은 전통적인 국가 간 충돌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자적 참여와 영향력 행사가 특징이다. 특히 한반도 전면전 발생 시에는 남북한뿐 아니라 인접 강대국과 주요 국제사회 주체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면전이 단일 국가 간 국지적 분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공간이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군사적·경제적·외교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면전 시 다자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국제법과 다자 안보기구의 역할이 전면전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전면전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익 충돌로 인해 실질적 군사 개입이 제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전면전 시 다자개입은 때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내포한다. 또한, 다자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체계, 예컨대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중 전략경쟁 구도는 전면전 대응체계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전면전의 국제화는 군사적 측면에서 다차원 전투 공간에서의 협력과 경쟁을 수반한다. 지상, 해양, 공중, 사이버 공간은 물론 우주 공간까지 포함하는 ‘다영역 전장(Multi-Domain Battlefield)’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및 정보전 영역에서 강대국들의 개입과 지원은 전면전 수행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 사이버 역량 경쟁은 한반도에서 전쟁 시 전장 정보 우위 확보와 직결된다.

넷째, 전면전의 국제화는 전략적 억제와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외교·경제적 수단의 결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강대국들의 제재, 외교 협상, 경제 지원 및 압박은 전쟁의 지속성과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면전에서의 다자개입은 군사적 작전과 함께 정치·경제적 도구를 총동원하는 복합

적 성격을 띠며, 이는 전쟁 양상을 다층적·복합적으로 만든다.

다섯째, 최근 동북아에서의 안보 환경 변동성과 신흥 위협 요인의 등장도 국제화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예컨대 북핵 문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 군사체계 등이 전면전 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성과 긴장 완화 실패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단순한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가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전쟁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에서 주변국은 전면전의 억제자이면서 촉진자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촉진자로 개입할 경우, 전쟁의 강도가 남북한 간 전쟁에 비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다. 전면전의 제한사항과 전략적 고려사항

미래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 특히 파괴강도는 과거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작전환경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형과 기상의 영향이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쟁 발발 전, 많은 전문가들이 개전 후 2주 이내에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드론, 미사일 등 첨단무기체계가 대거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장기전,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시 참호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⁴⁾ 주 전장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95%가 평지이며, 평균고도가 175m에 불과하다. 겨울 평균기온은 영하 4도~영상 2도, 여름 평균기온은 영상 18도~22도, 강수량은 300~1,600mm이다.⁴⁵⁾ 반면 한반도는 평균 75%가 산악지역이며, 평균고도는

44) Biddle, "Back in the Trenches," pp. 153-164.

45) 우크라이나 기상(<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ukraine/climate-data-historical>,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448m, 겨울 평균기온이 영하 3도~영상 5.4도, 여름 평균기온은 영상 20.4도~27.9도, 강수량은 1,237.4mm이다.⁴⁶⁾ 한반도 지형과 기상은 우크라이나 지역과 확연히 대비되며,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드론의 경우, 과연 한반도 지역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드론은 통신과 GPS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조작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의 산악지형은 이러한 연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의 강수일수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 기준 30년 평균 강수일수가 108.6일로 거의 3일에 한 번 비나 눈이 내리는 악기상을 보이고 있다.⁴⁷⁾ 이러한 기상조건은 항공자산 운용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지작전(ALB), 또는 다영역작전(MDO) 등 지상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전에서 공중자산의 지원이 제한된다면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상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온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6.25전쟁의 사례를 보면 장진호전투에서는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졌고, 다부동전투에서는 영상 37도까지 올라가 기온차가 거의 80도에 이른다. 이러한 기온차는 군수소요를 증가시켜 전쟁지속능력이 우세한 국가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⁴⁸⁾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울창한 산림은 드론과 포병화력의 살상력과 기능발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95%가 평지인 반면, 한반도의 평지는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양상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대부분 산악지

46) 국토지리정보원(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137.php#:~:text=The%20average%20elevation%20of%20the%20Korean%20Peninsula%20is,lower%20than%20that%20of%20East%20Asia%20%28910%20m%29,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서귀포: 국립기상과학원, 2018), p. 7.

47) 강수일수는 일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이며, 강수현상에는 비, 이슬비, 얼음싸라기, 눈, 싸락눈, 진눈깨비, 싸락우박, 우박, 눈보라 등이 포함된 것임.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stcs/grnd/grndRnDay.do?pgmNo=156>,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48) 장진호전투는 가장 추울 때(-37도), 가장 추운 곳에서 치른 전투였으며, 다부동전투 역시 가장 더울 때(37도), 가장 더운 곳에서 치른 전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기상과 지형은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효근, “한반도 미래전쟁에 대한 연구,” pp. 318-320.

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 화력, 기동 등 전장기능이 우크라이나 지역과는 달리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75%의 산악지형 대부분이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다는 점 역시 전장기능 발휘에 많은 제한사항이 될 것이다. 울창한 산림으로 인해 드론, 위성 등의 공중정찰 자산의 관측기능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확한 표적탐지 및 타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밀집된 산림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포병화력의 살상력과 기동부대의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기동로는 크게 서부 축선 2개, 중부 1개, 동부 1개 등 4개 축선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미래전에서도 이러한 공격 축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은 더욱 무성해졌고, 한국에서의 도시화가 다른 공격 축선의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래전은 북한이 예상하는 것과 같은 단기속결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한반도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프리드만(Lawrence D. Freedman)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의 의지’와 ‘전쟁지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⁴⁹⁾

한반도 미래전에서 전략적 고려사항은 주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이다. 먼저, 북한의 전술핵무기 선제사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제가 제공된다고는 하지만 핵보복의 문턱을 넘지 않는 북한의 전술핵 공격은 미국의 핵보복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제공을 명문화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핵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비행장, 항만, 주요 군사시설이 전술핵무기의 우선적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평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핵대응 요령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⁵⁰⁾

49) 프리드만은 군사전략가들이 전쟁을 구상하면서 단기전을 염두에 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전쟁처럼 현대전은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전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Lawrence D. Freedman, “The Age of Forever Wars: Why Military Strategy No Longer Delivers Victory,” *Foreign Affairs*, Vol. 104, no. 3(2025), pp. 108–112.

50) 박휘락,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생존상식 10단계』(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15),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핵무장 또는 잠재핵능력 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반 국민의 71%가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핵무장 시

둘째, 북한의 단기속결전 시도에 대해 한국은 역으로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프리드만이 지적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단기속결전의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 장기전이었다.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쟁의지, 그리고 국가의 전쟁지속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군사전략가 또는 정책입안가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전의 신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다. 첨단 과학기술무기가 넘쳐나는 현대에는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전면전에서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적 전쟁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안보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전면전에 대비한 전쟁비축물자를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동맹국 또는 우방국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3년 넘게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미국, 나토 등 우방국들의 지원과 국민들의 저항의지라고 할 수 있다.⁵¹⁾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은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겠지만, 평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국제적 개입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동맹 및 우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경쟁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한반도 미래전을 평시전과 전시전으로 구분하고, 상시전이라는 개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안보전문가의 65%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훈, “북핵 억제·대응의 쟁점 및 발전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2023), p. 31; 권혁철, “미국 믿을수록 자체 핵무장 선호... ‘뜨아아’ 찾는 한국인의 복잡한 마음,” 『한겨레』, 2024년 9월 17일; 박현주, “한국 자체핵무장을 59 → 71%...日 핵무장도 찬성 17 → 35%,” 『중앙일보』, 2024년 10월 8일.

51) Freedman, “The Age of Forever Wars,” pp. 108–121.

념 아래 평시전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에서 미래전 연구는 전시전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지나치게 과학기술 결정론적이다. 그 결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단기전을 미래전 양상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지형과 기상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래전은 이런 전면전뿐만 아니라 평시전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전시전보다 평시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전, 해킹,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등 비물리적인 충돌이 평시에 이미 시작되었고, 물리적 충돌 못지않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전을 평시전과 전시전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상시전쟁 양상을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시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평시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먼저, 전통적인 전쟁 개념을 확장하여 ‘평시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평시전이 전시전과 함께 ‘상시전’을 구성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평시전은 단순히 전면전의 전단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안보 현상으로서, 재래식 무력 충돌과 비물리적 공격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다. 이는 미래전 연구에 있어서 평시전과 전시전 간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평시전의 개념을 기존의 회색지대 분쟁 개념과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회색지대 분쟁은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모호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충돌로 공격 행위 또는 주체를 인지하고 있지만, 평시전은 그러한 행위 또는 주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인지하게 될 경우 ‘경쟁/분쟁의 문턱’을 넘어 회색지대 분쟁으로 접어들게 되고, 전면적인 물리적 대응을 통해 ‘전쟁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전면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회색지대 분쟁은 평시전의 일부로 포함되며, 전시전의 개념과 대비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차원의 ‘평시전 대응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이 되어 국

방, 정보, 과학기술, 행안, 경찰, 금융위원회가 상설 합동으로 평시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 사이버 침해, 가짜뉴스 선별, 인지영역의 공격행위, 국내외 적대세력의 심리전 행위 등을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이버·인지 통합사령부’를 창설하여 평시전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인지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허위정보에 대한 조기경보, 팩트체크, 심리전 방어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인지방역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민관군 합동으로 정례적인 ‘평시전 종합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격, 인지공격, 국지도발 등 다양한 공격양상에 대비한 국민적 차원의 종합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전시전에 대비한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을 이용하여 단기속결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주요 시설 및 부대에 대한 핵대응태세 및 생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반도 지형, 기상 등의 제한사항을 반영한 실전형 전력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산악지형, 도심지역 등에 적합한 부대구조가 필요하며, 악기상 시 항공지원 제한을 고려한 자체 지원화력, 즉 포병전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 장기전에 대비한 국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연료, 의약, 통신 등 전략물자를 비축하고 예비군 전력을 고도화하고, 민방위 훈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상시전과 평시전 개념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정책 문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전략서, 국방백서 등 국가안보 관련 주요 정책서에 이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훈련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전쟁은 더 쉬워졌고, 전쟁비용은 더 저렴해져 전쟁이 상시화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평시전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실제로 한반도에서 미래전 양상을 예측해 보았다. 본 논문의

이론적·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평시전 개념의 도입으로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화는 소극적 차원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적극적 차원에서는 인간안보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었지만, 평시전의 도입으로 이러한 개념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평시전과 회색지대 분쟁을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공격 행위 또는 주체에 대한 인지 여부를 제시하였는데, 인지하지 못한 행위 또는 주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이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으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보완은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한반도 미래전은 평시전과 전시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안보 현상이며, 이에 따른 다층적 대응 전략과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가레에프, A. A. 저, 전갑기 역. 『러시아 군인이 본 미래의 전쟁』.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6.
-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이론과 실상, 그리고 우리의 선택』. 서울: 법문사, 2008.
-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서귀포: 국립기상과학원, 2018.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 _____.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 노훈 외 공저. 『미래전장 스크랩』. 서울: 국방연구원, 2008.
- 노훈·독고순. 『미래전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 박휘락.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생존상식 10단계』. 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15.
- 육군대학. 『미래전 양상 연구』. 대전: 육군대학, 2009.
- 육군본부. 『21세기 전쟁양상: 제1차 세계대전에서 걸프전까지』. 계룡: 육군본부, 2002.
- 차오량·왕상수이 저, 이정곤 역. 『초한전: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 서울: 교우미디어, 2024.
- 프리드먼, 조지, 메르디스 프리드먼 저. 권재상 역. 『전쟁의 미래』. 고양: 자작, 2001.
- 합동군사대학교 동북아군사연구센터. 『미래의 전쟁 핸드북』. 대전: 합동군사대학교 동북아군사연구센터, 2022.
-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 서울: 오름, 2001.
- Allard, Kenneth 저. 권영근 역. 『미래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서울: 연경문

회사, 1999.

Barnett, Jeffry R. 저. 홍성표 역. 『미래전』. 서울: 연경문화사, 2000.

Berkowitz, Bruce 저. 문장렬 역. 『새로운 전쟁양상』.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 문제연구소, 2008.

Cohen, Raphael S. et al.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Santa Monica: RAND, 2020.

Hoffman, Frank G.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gton: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Mazarr, Michael.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Washington DC: US Army War College Press, 2015.

Osgood, Robert E.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trategy*. Chicago: Chicago University, 1957.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U.S. DoD, 2010.

2. 논문 및 보고서

김보미.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과 미국의 대응.” 「INSS 전략보고」 No. 191(2022).

_____.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 전략보고」 No. 182(2022).

김보미 · 오일석. “김정은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INSS 전략보고」 No.147(2021).

김영준 · 지효근. “세력균형론적 시각에서 본 북한의 대남 도발원인 연구: 1960년대와 1970년대 도발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36집(2013).

김정민. “중국 회색지대 전략의 기원과 적용: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을 중

- 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40권 3호(2024).
- 박영택.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실행 가능성과 전개 양상.” 『국방정책연구』. 제27권 4호(2011).
- 반길주. “해저케이블 안보와 회색지대 공세.” 『국가안보와 전략』. 제25권 1호(2025).
- _____.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호(2020).
- 서정순 · 김학민. “인지전 연구.” 『전략연구』. 제31권 2호(2024).
- 설인효.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66권 2호(2023).
- 손한별.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 『비교한국학』. 제31권 1호(2023).
- _____.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한국국가전략』. 제5권 2호(2020).
- 송태은. “현대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과 뇌과학의 무기화.” 『SW중심사회』. 9월호(2024a).
- _____.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 사이버 인지전: 전개 양상과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4-11』(2024b).
- _____.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최근 유럽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31호(2020).
- 양욱.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전략연구』. 제27권 3호(2020).
- 윤정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난 전장의 진화: 무인화, 기동화, 네트워크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ssue Brief』 제348호(2022).
-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제17권 1호(2010).
- _____. “육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미래와 전쟁 그리고 정치적 분석의 중요성.” 『2014 육군정책연구과제』(2014).

- 이지용.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본 서해·남해 내해화 전략 고찰.” 『한국해양안보논총』. 제8권 1호(2025).
-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3호(2018),
- 조남훈. “북핵 억제·대응의 쟁점 및 발전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2023).
- 지효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1호(2024).
- _____. “하이브리드전 승리요인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
의 중요성.” 『국방정책연구』. 제36권 4호(2021), pp. 7-40.
- _____. “한반도 미래전쟁에 대한 연구: 정치적 환경과 전장환경의 중요성.” 『군사연구』. 제141집(2016).
- 차정미. “신흥기술과 전쟁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군사-기술혁신
맥서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4-11호」(2024).
- 현인택. “한반도 평화의 군사안보: 이론적 접근.”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 Biddle, Stephen. “Back in the Trenches: Why New Technology Hasn’t
Revolutionized Warfare in Ukraine.” *Foreign Affairs*, Vol. 102,
No. 5(2023).
- Freedman, Lawrence D. “The Age of Forever Wars: Why Military
Strategy No Longer Delivers Victory.” *Foreign Affairs*, Vol.
104, No. 3(2025).

3. 뉴스·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강필성. “中 혹은 北 소행? SKT 해킹사건, 배후 잡힐까 ... 과거 사례 보니.”
『뉴데일리』. 2025년 5월 23일.

권혁철. “미국 믿을수록 자체 핵무장 선호... ‘뜨아아’ 찾는 한국인의 복잡한 마음.” 『한겨레』. 2024년 9월 17일.

김귀근·이영재. “2명 부상 ‘DMZ 폭발사고’ 北 소행이었다...“北 목함지뢰 설치.” 『연합뉴스』. 2015년 8월 10일.

김지원. “북한, 석달간 암호화폐 3200억원 흠뻑다...“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 『조선일보』. 2023년 9월 17일.

박현주. “한국 자체핵무장을 59 → 71%...日 핵무장도 찬성 17 → 35%.” 『중앙일보』. 2024년 10월 8일.

서혜림. “스웨덴 싱크탱크, 北보유 핵탄두 30 → 50기...90기 조립 가능.” 『연합뉴스』. 2024년 6월 17일.

이근평. ““전쟁 불사하겠다”더니 핵심 무기 수출...북한의 아이러니.” 『중앙일보』. 2024년 1월 21일.

이현호. “방사포 25만발 쏘고 4개 군단 진격...3일만에 전쟁 끝낸다는 北.” 『서울경제』. 2024년 11월 2일.

임화섭·고현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전 세계 12만건 이상 감염.” 『연합뉴스』. 2017년 5월 13일.

조성미. “SKT 개인정보·IMEI 유출 가능성...3년전 악성코드 설치 추정.” 『연합뉴스』. 2025년 5월 19일.

하채림. “北 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연합뉴스』. 2024년 11월 12일.

“국민 절반 해킹 피해 SKT 과징금 1348억원...역대 최대 이유는.” 『BBC News 코리아』. 2025년 8월 28일(<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vyvvx43jo>, 검색일: 2025. 8. 31).

국토지리정보원(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137.php#:~:text=The%20average%20elevation%20of%20the%20Korean%20Peninsula%20is,lower%20than%20that%20of%20East%20Asia%20%28910%20m%29,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stcs/grnd/grndRnDay.do?pgmNo=156>,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기상(<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ukraine/climate-data-historical>, 검색일: 2025년 2월 27일).

A Study on Futu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onceptualizing Peacetime Warfare and Anticipating Wartime Scenarios

Jee Hyokeun (Konyang University)

The 21st century warfare is undergoing rapid transformation driven by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weapons, and cyber capabilities. However, existing debates remain largely focused on “wartime warfare,” emphasizing full-scale armed conflict and leaning toward technological determinism.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peacetime warfare” to better capture the unique strategic real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North Korea persistently engages in cyber attacks, cognitive operations, hybrid tactics, and limited provocations even outside wartime. Unlike gray zone conflicts, which occur below the threshold of war and typically involve identifiable actors, peacetime warfare encompasses broader phenomena, including covert or unrecognized hostilities. The paper categorizes peacetime warfare in Korea into four patterns—conventional provocations, cyber warfare, cognitive warfare, and hybrid warfare—and examines how these dynamics may escalate into wartime scenarios. It also analyzes how Korea’s geographical and climatic conditions, along with potential interventions by neighboring powers, affect wartime operations. By

doing so, the study presents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future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rives strategic implications that may inform defense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Keywords: peacetime warfare, wartime warfare, perpetual warfare, gray zone conflict, futu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투고일: 2025.07.31. 심사일: 2025.08.22. 게재확정일: 2025.09.05.

IV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적 분석틀을 활용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사례 분석

김근희* (국방부)

금현섭** (서울대학교)

1. 서론

2.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개요

3.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적 분석틀

4. 사례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스라엘군은 과거 아랍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유형자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동기와 사기, 결속력에 기반한 통합전력을 발휘하며 높은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가자지구 전쟁에서는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차원에서 지지와 정당성 약화 문제가 제기되며 전투 성과보다는 정치적 실패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군사적 효과성 이론에 주목한다. 군사적 효과성은 국가가 보유한 물리적·정치적 자원을 활용해 군사적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작전과 전술로 이어지는 수직적 군사활동을 개방체제 이론과 접목하여 군사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다층적 분석틀로 제시한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사례에 다층적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군사활동 수준 간에는 위계관계와 상충관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군비경쟁(arms race) 논리를 넘어 군사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정치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행정,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부문과 군 조직 간의 협력적 대화(collaborative dialogue)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 군사적 효과성, 수직적 군사활동, 다층적 분석틀, 개방체제이론, 민군관계, 협력적 대화

1. 서론

클라우제비츠(Clauswitz)에 따르면,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정책 수단이다.¹⁾ 1948년 독립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전쟁에서 단기속결전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유리한 정치·전략적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2023년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22개월 이상 장기화되었음에도 정치적 목표의 달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가자지구 전쟁의 전개과정은 그간 이스라엘이 지향해온 국가목표 및 안보원칙과 일치하는가? 둘째, 하마스의 완전한 해체를 목표로 한 군사작전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셋째, 전쟁의 장기화는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전투성과나 군사력 규모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한 이념이나 신념에 기초한 논의만으로는 인과구조를 설명하고 타당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나타난 작전·전술적 성과와 정치·전략적 한계 간의 괴리를 ‘군사적 효과성(military effectiveness)’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군사적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군사활동의 인과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국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군 조직의 수직적 활동을 정치·전략·작전·전술 수준에서 검토하고,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1) Carl von Clausewitz, *O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 86–88.

2.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개요

2023년 10월 7일, 유대교 명절인 초막절(Sukkot)에 하마스(Hamas)의 대규모 기습공격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납치되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IDF)은 하마스 파괴와 인질 귀환을 목표로 약 17만 명의 정규군과 35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동원해 가자지구를 전면 포위하고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가자지구 황폐화와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어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말 가자 북부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개시했고, 같은 해 11월 휴전협정이 파기된 후 12월에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Khan Younis)를 포위하고 지상공격을 시작했다.²⁾

2024년 초,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학살 방지³⁾와 즉각적인 휴전, 인질 석방을 요구⁴⁾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외신들은 네타냐후가 우파 연립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라파(Rafah) 침공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⁵⁾ 2025년 초, 단기 휴전이 성립했지만, 곧 무산되며 전투가 재개되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광범위한 군사작전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점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자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했다.⁶⁾ 유엔의 거듭된

2) Bassam Massoud and Ibraheem Abu Mustafa, "Israeli forces storm Khan Younis in south Gaza, killing scores of Palestinians," *Reuters* December 6, 202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srael-intensifies-southern-gaza-offensive-us-un-urge-civilian-protections-2023-12-05/>(accessed: July 20, 2025).

3) Patrick Kingsley et al., "U.N. Court Orders Israel to Prevent Genocide, but Does Not Demand Stop to War," *New York Times* Jan 26, 2024, <https://www.nytimes.com/2024/01/26/world/middleeast/icj-israel-gaza-genocide.html>(accessed: July 20, 2025).

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28(202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9586th meeting, on 25 March 2024,"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42189?v=pdf#files>(accessed: July 13, 2025).

5) Nadeen Ebrahim, " Hamas has offered a ceasefire deal. Here's why that won't bring an immediate end to the war in Gaza," *CNN* May 8, 2024, <https://edition.cnn.com/2024/05/06/middleeast/hamas-ceasefire-offer-gaza-war-mime-intl>(accessed: July 20, 2025).

6) UN News, "UN General Assembly adopts Gaza ceasefire resolution by overwhelming majority," June 12, 2025, <https://news.un.org/en/story/2025/06/1164346>(accessed: July 20, 2025).

후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졌으며, 목표달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확산되었다.⁷⁾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군사작전을 벌임으로써 일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5년 8월 현재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가자지구에서만 6만여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희생되었으며 주거, 의료, 포함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재앙 수준의 기아와 영양실조가 발생하는 등 가자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자지구 전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차원의 군사력 보다는 군사적 효과성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개념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수직적 군사활동의 다층적 분석틀과 개방체제이론을 접목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적 분석틀

가. 군사적 효과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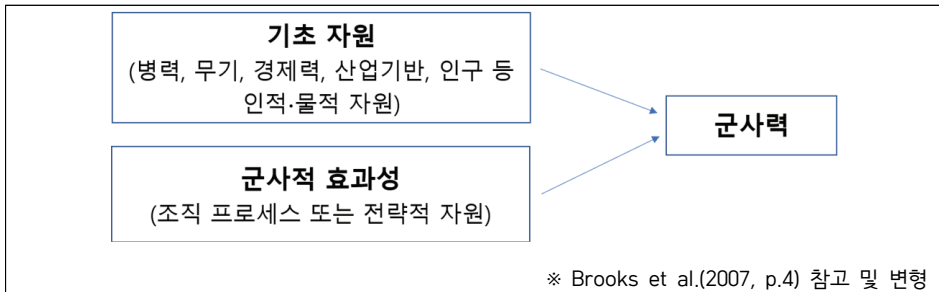
군사적 효과성(military effectiveness)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먼저, 브룩스(Brooks) 등에 따르면, 군사적 효과성은 ‘물리적, 정치적으로 가용한 유·무형의 자원을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기술 또는 역량’을 의미한다.⁸⁾ 따라서, 자원의 보유 수준을 넘어 활용방식이 중요하며 이 과

7) Oren Liebermann and Dana Karni, “Battered but not beaten, Hamas embraces guerilla tactics with deadly force,” *CNN* July 12, 2025, <https://edition.cnn.com/2025/07/12/middleeast/hamas-guerilla-tactics-gaza-attack-intl>(accessed: July 20, 2025).

8) Risa Brooks, Elizabeth Stanley, and Timothy Hoyt, *Creating Military Power: The Sources of Military Effectiveness*(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9–15.

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무형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기초 자원, 군사적 효과성, 군사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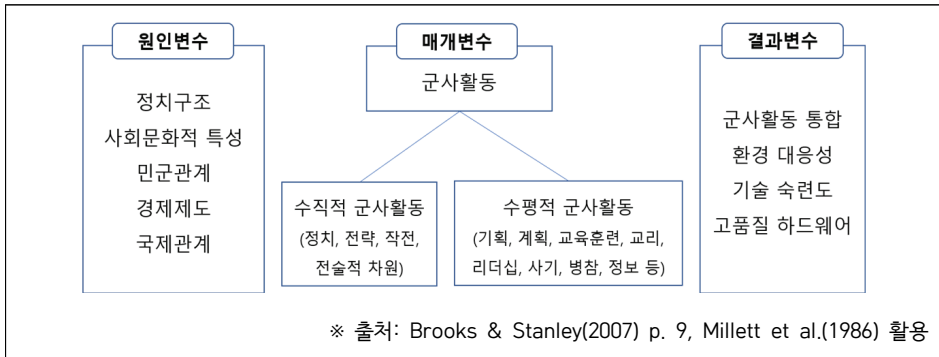
한편, 많은 선행연구는 군 조직의 행태 및 의사결정 역학(dynamics)에 따라 군사적 성과가 좌우된다고 설명한다.⁹⁾ 이에 따라 군사적 효과성 이론은 국가가 전·평시에 군사력을 창출하는 과정과 절차를 분석하며 어떠한 조건과 특성을 갖출 때 상대국보다 우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또한,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에서는 자원의 관리·활용을 통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역량을 강조하며, 특히 다른 국가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전략적(strategic) 자원의 구축을 중시한다.¹⁰⁾

이처럼 군사적 효과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밀렛 등은 인과적 구조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¹¹⁾ 즉,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적 특성, 민군관계, 국제관계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군사적 효과성이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은 군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군사활동에 의해 매개된다. 수직적 차원에서는 국가안보정책과 연계된 정치적 수준에서부터 하부조직의 전술적 실행에

9) Cesar Gabriel Cedeno, "Organizing Military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ulture, Military Effectiveness, and Military Pow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2022), p. 17.
 10) Jay B. Barney, "Strategic Factor Markets: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Vol. 32, No. 10(Oct. 1986), p. 1231.
 11) Allan R. Millett, Williamson Murray, and Kenneth H. Watman,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1, No. 1(Summer 1986), pp. 37-71.

이르기까지 목적-수단 관계가 조정·통합되어 일관성을 갖춰야 하며, 수평적 차원에서는 기획, 계획, 교육훈련, 교리, 병참, 정보, 리더십과 사기 등 다양한 군사활동이 상호 결합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군사적 효과성의 인과적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군사적 효과성의 인과적 구조



나. 선행연구 검토

군사적 효과성에 관한 분석연구는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논의에서 군사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정치체제, 경제발전, 민군관계, 조직문화, 지휘체계, 리더십 등이 제안되었다. 먼저,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결집, 선거제도와 언론의 자유, 정보역량, 주도권과 리더십의 발휘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¹²⁾ 또한, 경제 선진국은 기술 인프라, 생산 효율성, 조직 운영관리의 전문성 등 군사적 효과성에 유리한 특성을 갖춰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며¹³⁾ 조화로운 민군관계는 첨단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고,¹⁴⁾ 전략평가, 지휘통제, 리더십

12) Dan Reiter and Allan C. Stam, "Democracy, War Initiation, and Vict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2(1998), pp. 377-379.

13) Michael Beckley, "Economic Development and Military Effectivenes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3, No. 1(2010), pp. 58-59.

14) Stephen Biddle and Robert Zirkle, "Technology, Civil-Military Relations, and

발휘 등 주요한 군사활동 영역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¹⁵⁾ 그리고, 군내 상호신뢰와 존중, 개방적인 조직 분위기는 높은 결속력을 통해 대응성을 제고하는 반면,¹⁶⁾ 집단적·권위적·폐쇄적 조직문화는 기계적 학습(rote learning), 정보 왜곡 등에 따른 작전·전술적 실패와 무능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¹⁷⁾

한편, 분산되고 경쟁적인 지휘체계는 자원·권위에 대한 갈등을 촉발하며 통합과 대응성 측면에서 군사적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¹⁸⁾ ‘임무형 지휘(Auftragstaktik)’로 재량과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연하고 분권화된 지휘체계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 군사적 효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본다.¹⁹⁾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지휘관의 리더십은 전투 효과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²⁰⁾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국가·사회의 제반 요소들이 군대 조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분석하고 있지만, 영미권에 치중된 연구의 특성상 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보다 일반화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²¹⁾ 또

Warfare in the Developing World,”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19, No. 2(1996), pp. 172-175.

15) Risa Brooks, “An Autocracy at War: Explaining Egypt’s Military Effectiveness, 1967 and 1973,” *Security Studies* Vol. 15, No. 3(2006), p. 411.

16) Nora Kinzer Stewart, “South Atlantic conflict of 1982: A case study in military cohesion,” 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pril 1988. <https://apps.dtic.mil/sti/tr/pdf/ADA193790.pdf/> (accessed: July 20, 2025).

17) Michael J. Eisenstadt and Kenneth M. Pollack, “Training Better Arab Armies,” *Parameters* Vol. 50, No. 3(Autumn 2020), pp. 98-99.

18) Risa Brooks, Elizabeth Stanley, and Timothy Hoyt, *Creating Military Power: The Sources of Military Effectiveness*(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71-73.

19) Ryan D. Grauer, “Commanding Military Power: Organizational Sources of Victory on the Battlefiel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1), pp. 51-54.

20) Dan Reiter and William A. Wagstaff, “Leadership and military effectivenes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4, No. 4(October 2018), pp. 490-511.

21) 한국을 비롯해 20세기 후반 민주화를 경험한 비서구사회 후발국가 민주주의의 특징은 서구 선발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2000), pp. 71-72).

〈표 1〉 군사적 효과성 분석연구의 주요 내용

변수	분석내용
정치체제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결집, 선거와 언론의 자유, 정보역량, 주도권과 리더십 발휘 등 군사적 효과성 제고에 유리 ¹²⁾
경제발전	경제 선진국은 기술 인프라, 데이터 분석력, 생산 효율성, 운영관리 전문성 등 군사적 효과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 ¹³⁾
민군관계	우호적인 민군관계가 조성되면 안정적인 군부 리더십을 기초로 전략·전술적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첨단무기 활용 ¹⁴⁾ , 전략평가·지휘통제 역량 등 군사적 효과성 발휘에 유리 ¹⁵⁾
조직문화	상호신뢰·존중, 유연한 문화는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나 ¹⁶⁾ , 집단·권위·폐쇄적 조직문화는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행동 양식을 양산하며 군사적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¹⁷⁾
지휘체계	분열되고 경쟁적인 통제형 지휘체계는 군사활동의 통합 및 대응성을 약화하나 ¹⁸⁾ , 유연·분권화된 임무형 지휘체계는 주도성·대응성 등 군사적 효과성 발휘에 유리한 요소임 ¹⁹⁾
리더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독일군은 전투성과가 저조한 지휘관을 교체하며 전장에서 군사적 효과성을 향상시킴 ²⁰⁾

한, 기존 연구는 개별 사례의 특정 변수에 제한된 논의에 치중함으로써 수직적 군사활동 수준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개방체제이론을 접목한 다층적 분석틀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 분석방법

(1) 수직적 군사활동의 평가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렛은 군 조직활동을 정치적,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으로 분류해 군사적 효과성을 각각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²⁾

22) Millett et al.,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Organizations,” p. 38.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네 가지 수준은 목적과 수단의 순차적 위계관계(hierarchy)를 형성한다. 가장 상위에 있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실패는 국가적 재앙(catastrophe)을 초래하는 반면, 전술적 수준의 실패는 군사적 실패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한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군사활동이 다른 수준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상충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근접 전투의 전술적 효과가 높은 상황에서 병력손실에 따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와 같이, 어떠한 군사활동이 모든 수준에서 동시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²³⁾ 따라서, 수직적 군사활동의 다층적 분석을 통해 수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효과성과 상호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정치, 전략, 작전, 전술적 수준의 군사적 효과성 평가 기준

수준 (주체)	정의 및 평가 기준
정치 (민·군)	(정의) 민간(정치, 행정, 시민사회)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활동에 필요한 유·무형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 (기준) 군사 활동에 대한 도덕적·실천적 정당성 확보, 필요 자원(예산, 인력, 산업·기술) 획득 및 접근성
전략 (민·군)	(정의) 정치 리더십에 의해 정의된 국가목표를 군사력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는 능력 (기준) 전략목표의 분석 및 선택, 지속작전·우발계획으로 전략목표(수단)를 국가의 정치목표(목적)와 연결
작전 (군)	(정의) 전장에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병력을 운용하는 제도적 개념 또는 교리의 분석·선택·개발 (기준) 지휘관의 전문성과 성실성(리더십), 부대 운영·전투무기·지원활동 등의 통합 및 결합
전술 (군)	(정의)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전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술 (기준) 병력 이동, 적군·목표물의 파괴, 병참 지원 배치, 교육훈련, 사기와 결속력 등 전투 영향요인 통합

※ 출처: Millett et al.(1986) 참고 및 재작성

23) James W. Wright, “Military Effectiveness in the Long War,” (AMSP Monograph,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Kansas, May 24, 2007), p. 15.

먼저, 최상위에 있는 ‘정치적 수준’의 효과성은 군 조직운영에 필요한 유형(물리적), 무형(정치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전략적 수준’의 효과성은 정치 지도층(국가정책 결정)과 군부 지도층(군사전략목표 설정)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해내는 군의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작전적 수준’의 효과성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군대를 운영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민군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정치·전략적 수준과는 달리 군사작전 수행과정의 대부분은 군 자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전술적 수준’의 효과성은 교전·전투의 승리에 집중하는 소부대 군사활동으로, 작전적 수준과 구분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전술적 관행(practices)은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군사조직을 비교하는 명확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²⁴⁾

이처럼 군사활동의 효과성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폭넓은 군사적 효과성의 연구범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서 살펴볼 수 있고, 군사활동 수준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유용하다.²⁵⁾

(2) 개방체제 이론

군은 국가·사회 환경으로부터 투입된 유·무형의 자원을 군 조직 내부 군사활동을 통해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절차)을 통해 군사적 성과를 창출하는 역동적·유기적인 조직이므로, 체제이론 관점 역시 유용하다.²⁶⁾

개방체제 이론(Open System Theory)에 따르면, 조직은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화된 사회적 집합으로, 유기체와 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차별화, 정교화, 조직화를 통해 변화·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투입(input), 전환(throughput), 산출(output) 및 환류(feedback)를 통한 조정과정은 해당 조직

24) Millett et al.,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Organizations,” pp. 60–61.

25) James W. Wright, “Military Effectiveness in the Long War,” p. 23.

26) 우종범·임정우·노명화, “군 상부지휘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0권 1호, (2013), pp. 8–9.

의 안정성 유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²⁷⁾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군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물질적·재정적·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에 따르면, 군 조직은 국가의 사회적·정치적·제도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구조(정당성)와 제도(행정)적 역량은 군대의 성과를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군대 내 관료제와 실적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대규모 군사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⁸⁾

(3) 연구의 분석틀

앞서 살펴본 군사적 효과성의 인과적 구조(〈그림 2〉 참조)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군사적 효과성의 주요 원인변수(〈표 1〉 참조), 수직적 군사활동의 수준별 평가기준(〈표 2〉 참조) 및 개방체제이론의 논리구조(투입-전환-산출-환류)를 활용해 본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정치적 수준’의 효과성은 물리적,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는 성과와 관련되므로 국내 정치체제와 민군관계, 경제발전 및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국내정치 상황과 정부의 적절한 행정역량, ‘국민의 군대(people’s army)’로서 시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군 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 확립을 통한 우호적인 민군관계 구축²⁹⁾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직업군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우수한 인력의 모집·유지와 직결되며, 경제성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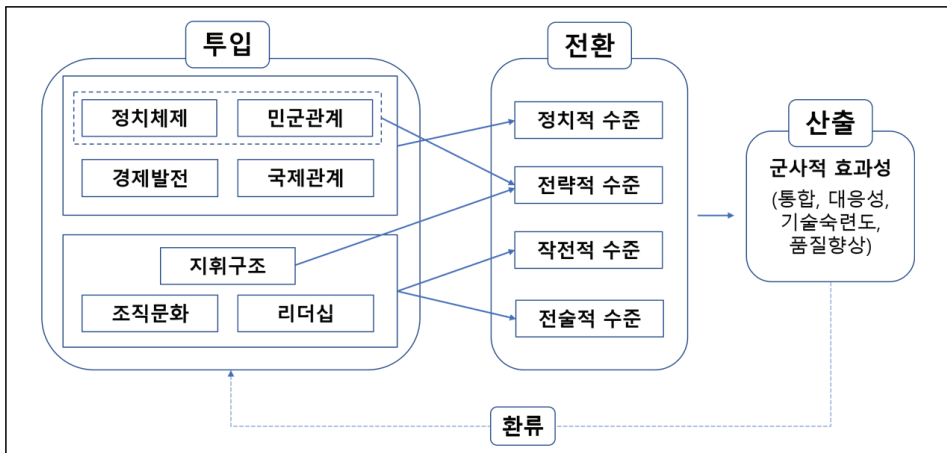
27) Fremont E. Kast and James E. Rosenzweig, “General systems theory: Applications fo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15, No. 4(Dec 1972), pp. 447-465.

28) Francis Fukuyama,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pp. 110-119.

29) 헌팅턴(Huntington)이 ‘객관적인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군 전문직업주의’는 군대의 전문역량과 자율영역에 대한 인정과 수용, 외교·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민간 정치 리더십에 의한 효과적인 군대 종속(subordination)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및 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amuel P. Huntington, “Armed Forces and Democracy: Reforming Civil-Military Relations,”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4(October 1995), pp. 9-10).

생산력, 국제기구·동맹·여론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국내외 방산 협력 수준 또한 가용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획득 능력에 차이를 만든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치적 수준에서의 군사적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전략적 수준’의 효과성은 군 조직의 군사전략목표가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이는 정치 지도층과 군부 지도층 간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치체제와 민군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군 조직의 전략목표와 행동 방침은 군사력의 규모 및 구조와 일치해야 하므로, 군 지휘구조(군정·군령 기능배분 및 수직·수평적 지휘관계)와 부대구조·편성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는 육·해·공군의 3군 병립을 기초로 한 합동군제를 채택하면서 군정(military administration)은 각 군 참모총장, 군령(military command)은 합동참모의장이 수행한다. 이러한 합동군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권한 분산을 통해 문민통제를 유지하면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전력을 통합적으로 발휘하기 어렵고 합동작전·교리발전이 지연되며, 군 간 경쟁에 따

른 조직·자원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³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전적 수준’과 ‘전술적 수준’의 효과성은 군 조직문화, 지휘구조, 그리고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다. 군의 조직문화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방식과 직결되며, 특히 조직문화의 적응성과 유연성이 높을수록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작전·전술적 수준의 군사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³¹⁾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군 리더십의 핵심 원리인 ‘임무형 지휘(Auftragstaktik)’는 독립적이고 분산된 소부대 지휘구조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통제형 지휘(Kontrolltaktik)’와 구별된다. 임무형 지휘에서는 장병 개개인에 목표달성 수단과 방법 선택의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위임으로 작전·전술적 차원에서 높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병력의 동기(motivation)와 사기(morale)를 고양하고 군사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제복 입은 시민(citizen in uniform)’의 개념으로 설명되듯이, 군인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을 중시하는 ‘내적 리더십(Innere Führung)’ 원칙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³²⁾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적 분석틀인 군사적 효과성 차원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밀렛이 제안한 정치, 전략, 작전 및 전술적 수준에서의 군사적 효과성 평가 기준(〈표 2〉 참조)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질문 1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사례에서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구조(정치·전략·작전·전술 수준)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정치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30) 우종범 외, “군 상부지휘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p. 13-14.

31) Williamson Murray, “Does Military Culture Matter?,” *Orbis* Vol. 43, No. 1(1999), p. 34.

32) Werner Widder, “Battle Command: Auftragstaktik and Innere Führung: Trademarks of German Leadership,” *Military Review* Vol. 82, No. 5(Sep/Oct 2002), pp. 2-9.

연구질문 2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사례에서 군사적 효과성의 상·하위 수준 간 위계관계(hierarchy) 및 상충관계(trade-off)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연구질문 3 : 가자지구 전쟁 분석 결과는 한국 국방전략 수립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4. 사례분석

가. 정치적 수준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발생하기 전인 2022년 말부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스라엘 사회 내 분열 현상이 심화되었다. 네타냐후의 개혁안은 공식적인 성문헌법(written constitution)이 없는³³⁾ 이스라엘에서 기본법(basic laws)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 자문 체계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시위가 이스라엘 예비군 복무·훈련 거부 등 군사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졌으며³⁴⁾ 적대세력에게 안보취약 요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참모총장, 국방장관 모두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총

33)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 수립 이래 성문헌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 남용 방지, 기본권 및 소수집단의 권리 보호, 정교분리 보장과 함께 주권 영토의 한계를 명시한 성문헌법의 부재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결함을 초래했다(Dahlia Scheindlin, “The Fight for a New Israel: To End the War and Build a Lasting Peace, the Country Must Reinvent Its Own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103, No. 6(Nov/Dec 2024), p. 95).

34) Emily Rose, “Hundreds of Israeli reservists vow to refuse service if judicial overhaul passes,” *Reuters* July 20, 202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hundreds-israeli-reservists-vow-refuse-service-if-judicial-overhaul-passes-2023-07-19/>(accessed: July 20, 2025).

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하마스 침공 전 다수의 사전 징후 및 첩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보기관,³⁵⁾ 군, 행정부 등 이스라엘 관료제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었다.³⁶⁾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시민들은 단결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의 지배적 담론을 활용해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나간다고 공언했다.³⁷⁾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질 석방이 지연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 정치·정부 불신과 분열 현상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³⁸⁾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거리시위와 전쟁 내각에서의 불화는 이스라엘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균열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³⁹⁾

또한,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변하면서, 이스라엘 병력 다수를 차지하는 예비군의 경제활동 중단이 길어져 국가·가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⁴⁰⁾ 전쟁이 시작된 이래 부상자의 66%가 예비군이며,

35)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군사정보국(AMAN), 국내정보 담당 신베티(Shin bet), 해외정보 담당 모사드(Mossad)로 구성되며, 국내외 안보위협 관련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외성(redundancy) 관점에서 유사·중복기능을 허용하고 있다. 아만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 위주의 정보수집, 신베티는 가자 및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관련 사항, 모사드는 이란과 국제 테러리즘에 집중하면서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6) Aluf Benn, “Israel’s Self-Destruction: Netanyahu, the Palestinians, and the Price of Neglect,” *Foreign affairs* Vol. 103, No. 2(Mar/Apr 2024), p. 53.

37) Zeb Stub, “Netanyahu says Hamas ‘exactly’ like the Nazis, vows Israel ‘will never surrender’,” *The Times of Israel* April 23,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netanyahu-says-hamas-exactly-like-the-nazis-vows-israel-will-never-surrender/ (accessed: July 20, 2025).

38)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대중 신뢰(public trust)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5월) 결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서 이스라엘 국민 77%(유대계 74%, 아랍계 93%)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서 이스라엘 국민 72%(유대계 66%, 아랍계 94%)는 총리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쟁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46%(유대계 53%, 아랍계 15%)는 목표를 완수하거나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지만, 47%(유대계 41%, 아랍계 72%)는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https://www.inss.org.il/publication/survey-may-2025/> accessed: July 15, 2025).

39) “Widening Mideast Crisis Political Divisions Over Conduct of War Roil Israel,” *New York Times* May 24, 2025, <https://www.nytimes.com/live/2024/01/19/world/israel-hamas-news> (accessed: July 20, 2025).

40) Eve Young, “Unprecedented reserves call up slams Israel’s labor market - IDI,” *The*

이들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인원들이 상당수로, 장기화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병력의 대체 충당이 어려워지면서 군사적 취약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의 복무 면제에 대한 분노와 정부 신뢰의 저하는 예비군 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 병력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⁴¹⁾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군사활동은 미국의 재정적·군사적 지원에 의존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반세기 넘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강력한 양자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1,740억 달러에 이르는 양자원조와 미사일 방어 자금을 제공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과 정치·사회단체로부터 미국의 원조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⁴²⁾

한편, 유럽은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방산수출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스라엘 소비재 수입의 대부분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경제규모가 작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며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 특성상 유럽을 비롯해 국제관계에서 지지기반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⁴³⁾

또한, 지역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등 아랍 국가와의 관계 회복에도 난항이 예상되며,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목표인 ‘세계

Jerusalem Post November 4, 2024, <https://www.jpost.com/israel-news/article-827495>(accessed: July 20, 2025).

41) Deborah Danan, “As IDF raises reservist call-up cap to 450,000, weary troops decry low Haredi enlistment,” *The Times of Israel* May 30,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as-idf-raises-reservist-call-up-cap-to-450000-weary-troops-decry-low-haredi-enlistment/>(accessed: July 20, 2025).

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Foreign Aid to Israel: Overview and Developments since October 7, 2023,” *CRS Report* May 28, 2025, p. 2.

43) Tamir Hayman, “Achieving the War’s Objectives and Improving Israel’s Long-Term Security: Recommended Policy for Ending the War with a Victory,” *INSS Policy Paper* June 9, 2025, p. 7.

적·지역적 통합을 통한 국가 안정성 보장’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⁴⁴⁾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정치적 차원에서 분석하면,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었고, 이는 이스라엘의 도덕적(moral) 정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전쟁의 장기화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전쟁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실천적(pragmatic) 정당성의 논리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은 국내 분열과 민군 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적 비난을 가중시키며, 대규모 예비군 동원과 군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과적 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나. 전략적 수준

이스라엘의 국가 비전은 ‘세계·지역과 평화적으로 연결된 유대국가 건설’이다. 국가안보 위협요소인 지역적 적대감(hostility)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군사 전략을 통해 실행되는 방어적 안보 지향’을 추구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안보원칙은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이 제시한 ‘억제, 사전경보, 결정적 승리’의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사일, 로켓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원칙이 추가되었다.⁴⁵⁾

안보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적 측면에서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하나,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안보 대전략(grand strategy)이 부재한 상태에서 안보정책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⁴⁶⁾ 즉, 팔레스타인 문제를 장기·전략적 관점에서보다는 위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다루면서 근시안적, 임시방편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44) Maha Yahya, “The Fatal Flaw of the New Middle East,” *Foreign affairs* Vol. 104, No. 2(Mar/Apr 2025), pp. 55–56.

45) Shimon Arad, “Israel’s National Security Concept: Functional Incoherence and the October 7 Disaster,” *INSS Strategic Assessment* March 2025, p. 105.

46) Assaf Orion, “Israel’s Grand Strategy Ripples Begin at Home,” *A Hoover Institution Essey from the Caravan Notebook* May 11, 2021, <https://www.hoover.org/research/israels-grand-strategy-ripples-begin-home> (accessed: August 27, 2025).

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안보원칙과 안보전략, 군사전략 간의 제도적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군사 전략 목표는 국가안보 차원의 상위지침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 리더십은 군사전략을 감독 및 통제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안보 체계의 상호 불일치와 제도적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전략평가 보고서는 국가안보의 대 전략 부재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안보·군사전략의 불일치를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⁴⁷⁾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안보원칙의 첫 번째 목표인 ‘억제력(deterrence)’은 물리적 군사력 차원을 넘어 정치적·군사적 역량과 의지, 내부 결속력과 회복력, 국제적 지원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적대세력의 인식(perception) 측면의 평가에 달려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하기 전,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분열이 격화되고, 정치-군사 지도층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의견 충돌양상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하마스의 기습공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억제력 실패의 결과로 이어졌다.⁴⁸⁾

또한, 하마스의 기습공격은 이스라엘 안보원칙의 두 번째 목표인 ‘사전경보(advance warning)’ 실패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마스를 상대로 억제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한 이후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자국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하마스의 군사적 역량·의지를 과소평가하며 사전 징후를 무시했다. 군(IDF)과 정보기관(Shin Bet) 간 협조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관계 정상화 추진에 따른 지역 내 세력균형 변화를 전략적 문제로 주의 깊게 다루지 못한 실책도 언급되고 있다.⁴⁹⁾

47) Shimon Arad, “Israel’s National Security Concept: Functional Incoherence and the October 7 Disaster,” pp. 108–109.

48) Patrick Kingsley, Ronen Bergman, and Natan Odenheimer, “How Netanyahu Prolonged the War in Gaza to Stay in Power,” *New York Times* July 11, 2025, <https://www.nytimes.com/2025/07/11/magazine/benjamin-netanyahu-gaza-war.html>(accessed: July 20, 2025).

세 번째 안보원칙인 ‘결정적 승리(decisive victory)’는 억제와 사전경보가 실패해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규군과 예비군의 공격적인 지상 기동을 통해 전장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억제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규모 병력투입이 불필요하다는 가정 아래 지상군 규모를 감축하고 국경 지역의 방어선을 축소하며 이를 공중 방어로 보완해나가는 군사전략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정치 지도층과 심층적인 논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국경 기습공격 당시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충분한 정규군이 배치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⁵⁰⁾

한편, 민군관계 차원에서 정치 리더십과 군부 지도층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자지구 전쟁 진행 중인 2024년 11월, 가자지구 철수를 주장한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전(前)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상호신뢰 부족’을 이유로 해임되었으며, 후임으로는 강경우파로 분류되는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 외무장관이 취임했다.⁵¹⁾ 헤르지 할레비(Herzi Halevi) 전(前) 이스라엘 방위군(IDF) 참모총장은 2025년 3월, 자신의 이임식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한 책임은 군(IDF)과 정보기관(Shin Bet)의 군사적 실패에 한정할 수 없으며, 국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²⁾

49) Emanuel Fabian and Toi Staff, “Shin Bet probe: Oct. 7 would have been prevented if we’d acted differently,” *The Times of Israel* March 4,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shin-bet-probe-oct-7-would-have-been-prevented-if-wed-acted-differently/>(accessed: July 20, 2025).

50) Shimon Arad, “Israel’s National Security Concept: Functional Incoherence and the October 7 Disaster,” pp. 113–114.

51) Emanuel Fabian and Toi Staff, “Katz formally replaces Gallant as defense minister, holds assessment with security chiefs,” *The Times of Israel* November 8, 2024, <https://www.timesofisrael.com/katz-formally-replaces-gallant-as-defense-minister-holds-assessment-with-security-chiefs/>(accessed: July 20, 2025).

52) Emanuel Fabian, “Eyal Zamir takes over from Herzi Halevi as IDF chief, vows victory over Hamas,” *The Times of Israel* March 5,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eyal-zamir-takes-over-from-herzi-halevi-as-idf-chief-vows-victory-over-hamas/>(accessed: July 20, 2025).

또한, 2025년 7월 에알 자미르(Eyal Zamir) 참모총장은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위협과⁵³⁾ 팔레스타인 민간인 강제이동에 대한 문제를 들어 가자지구 작전 확대와 ‘인도주의적 도시(humanitarian city)’ 계획에 반대하며 네타냐후 총리와 충돌양상을 보였다.⁵⁴⁾

가자지구 전쟁의 전략적 수준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안보원칙·안보전략·군사전략 간 정합성이 결여된 국가안보체계의 제도적 한계, 국내정치 갈등과 민군관계의 분열, 정치·군사적 목표의 불일치는 안보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결집을 약화시키며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저하시켰다.

다. 작전 및 전술적 수준

가자지구 전쟁 초기,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 실패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대한 ‘잔디깎기(mowing the grass)’와 같은 제한적인 표적 군사작전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철의 검(Swords of Iron, 가자지구 전쟁의 이스라엘 작전명)’의 전면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억제력을 회복하고 국가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⁵⁵⁾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국가안보의 실패 원인을 군사작전 수준의 담론에 집중시키면서 정치적 실패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대두되는데, 정치·전략적 수준에서의 평가 없이 작전·전술적 수준에 대한 분석만으로 안보·군사목표 달성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⁵⁶⁾

53) Toi Staff, “IDF chief said to warn ministers further fighting in Gaza endangers hostages,” *The Times of Israel* July 1,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idf-chief-said-to-warn-ministers-further-fighting-in-gaza-endangers-hostages/> (accessed: July 20, 2025).

54) Nick Beake, “Outrage builds over plan to force all Gazans to southern city,” *BBC* July 11,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9dgv7v1d06o> (accessed: July 20, 2025).

55) Eitan Shamir, “The End of Mowing the Grass: If Israel Wants to Continue to Exist, It Must Uproot Hamas from Gaza,” *BESA* October 22, 2023.

56) Shimon Arad, “Israel’s National Security Concept: Functional Incoherence and the October 7 Disaster,” p. 104.

가자지구에서의 광범위한 전면전은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테러리스트와 민간인의 구별이 불가능한 가자지구 특성상 군사작전이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수반되며, 국제적 고립, 비난과 제재 등 막대한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와 사회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죽음과 고통에 무관심한 모습은 선악의 구도를 바꿔놓고 있으며, 일부 전술적 승리에 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전략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⁵⁷⁾

한편, 정보기술혁명의 영향으로 저비용의 비대칭(asymmetric) 무기체계를 활용한 전술을 통해 테러리즘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이용한 매복 공격은 이스라엘 공습작전의 효과성을 감소시켰다. 하마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에 불리한 내러티브를 생산해내며 인지전(cognitive war)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⁵⁸⁾

2025년 8월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마스의 지휘통제체계는 무너지고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남은 소수 병력이 게릴라전을 벌이는 수준으로 붕괴됐다.⁵⁹⁾ 그러나,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하마스는 무장 세포조직(militant cells)으로 남아 유지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에서 가자지구 통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하마스의 세력 약화는 하마스를 대체하는 또 다른 무장단체들이 하마스의 공백을 장악하는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비무장화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⁶⁰⁾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손실교환비율(loss exchange rate)’과 같은 작전·전술 수준의 군사적 지표에서 명확한 우위를 보였지만, 이러한 성과는 국

57) Audrey Kurth Cronin, “How Hamas Ends: A Strategy for Letting the Group Defeat Itself,” *Foreign Affairs* Vol. 103, No. 4(Jul/Aug 2024), pp. 52–54.

58) Audrey Kurth Cronin, “Hamas’s Asymmetric Advantage: What Does It Mean to Defeat a Terrorist Group?,” *Foreign Affairs* Vol. 103, No. 1(Jan/Feb 2024), pp. 31–34.

59) Rushdi Abualouf, “Hamas security officer says group has lost control over most of Gaza,” *BBC* July 7,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k79xlzwoj>(accessed: July 20, 2025).

60) Oren Liebermann and Dana Karni, “Battered but not beaten, Hamas embraces guerilla tactics with deadly force,” *CNN* July 12, 2025.

가안보와 정치적 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군사적 효과성은 정치·전략적 수준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소결

가자지구 전쟁은 22개월 이상 지속되었지만, 인질 석방과 하마스 해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국내외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 측면에서 상위 목표의 결함은 군사적 성과가 정치적 효과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제약하였고, 장기 소모전으로 변모한 전쟁은 이스라엘 안보의 불안정을 증대시켰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과거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으로 활약하고 주미대사, 이스라엘 총리를 역임한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은 제한적인 무력 사용을 강조하고, 군사정책은 정치적 고려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¹⁾ 그러나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양상은 ‘공격적 군사교리로 방어적 안보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안보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적 분석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에서 군사활동 수준 간 위계와 상충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장기적인 안보·군사전략 없이 대응적 무력사용에 의존할 경우, 국내외 갈등이 심화되고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군사적 효과성은 국내외 정치요인과 민군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한국 국방에 적용하면,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충족하는 정

61) Efraim Inbar, “Yitzhak Rabin and Israel’s National Secur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0 No. 2(1997), p. 31.

치·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작전·전술적 성과를 넘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 과정에 정치·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 및 자원·정보공유는 갈등을 완화하고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간·부문 간 협력은 군사력 운용 환경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PMESII’⁶²⁾나 ‘DIMEFIL’(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금융, 첩보, 법 집행)과 같은 분석틀은 이러한 협력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안보 증진을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시의성을 확보하였지만, 다양한 한계 역시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주요 외신과 해외논문, 보고서 등 제한된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전개 상황을 예측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인터뷰 등 1차 자료의 수집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과 비대칭 위협 등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군사적 효과성의 영향요인으로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효과성의 다층적 수준 간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논리와 방법론 역시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전략적 수준에서의 군사적 효과성에 주목해 국내외 정치 환경과 민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군 내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지휘구조와 조직문화, 리더십 등과 같은 요인이 작전·전술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의 상호작용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면서 학문적 논의와 실천적 적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이해는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62) ‘PMESII’ 개념은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 및 인프라를 통칭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가능케 한다(조관행 외,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PMESII 체계분석과 DIME 능력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7권 2호, (2020), p. 67).

참고문헌

1. 단행본

- Carl von Clausewitz. *O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Francis Fukuyama.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 Risa Brooks, Elizabeth Stanley, and Timothy Hoyt. *Creating Military Power: The Sources of Military Effectivenes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2. 논문

- 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2000), pp. 69-86.
- 우종범 · 임정우 · 노명화. “군 상부지휘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0권 1호 (2013), pp. 1-29.
- 조관행 · 김영수 · 서석민 · 홍규덕.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PMESII 체계분석과 DIME 능력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7권 2호 (2020), pp. 67-109.
- Aluf Benn. “Israel’s Self-Destruction: Netanyahu, the Palestinians, and the Price of Neglect.” *Foreign affairs* Vol. 103, No. 2 (Mar/Apr 2024), pp. 44-55.
- Allan R. Millett, Williamson Murray, and Kenneth H. Watman.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1, No. 1 (Summer 1986), pp. 37-71.

- Audrey Kurth Cronin. “ Hamas’s Asymmetric Advantage: What Does It Mean to Defeat a Terrorist Group?.” *Foreign Affairs* Vol. 103, No. 1 (Jan/Feb 2024), pp. 30–35.
- Audrey Kurth Cronin. “How Hamas Ends: A Strategy for Letting the Group Defeat Itself.” *Foreign Affairs* Vol. 103, No. 4 (Jul/Aug 2024), pp. 50–61.
- Cesar Gabriel Cedeno. “Organizing Military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ulture, Military Effectiveness, and Military Pow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2022).
- Dan Reiter and Allan C. Stam. “Democracy, War Initiation, and Vict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2 (1998), pp. 377–389.
- Dan Reiter and William A. Wagstaff. “Leadership and military effectivenes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4, No. 4 (October 2018), pp. 490–511.
- Dahlia Scheindlin. “The Fight for a New Israel: To End the War and Build a Lasting Peace, the Country Must Reinvent Its Own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103, No. 6 (Nov/Dec 2024), pp. 92–107.
- Efraim Inbar. “Yitzhak Rabin and Israel’s National Securi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0 No. 2 (1997), pp. 25–40.
- Fremont E. Kast and James E. Rosenzweig. “General systems theory: Applications fo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15, No. 4 (Dec 1972), pp. 447–465.
- Jay B. Barney. “Strategic Factor Markets: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Vol. 32, No. 10 (Oct. 1986), pp. 1231–1241.

- James W. Wright. “Military Effectiveness in the Long War.” (AMSP Monograph,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Kansas, May 24, 2007).
- Michael Beckley. “Economic Development and Military Effectivenes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3, No. 1 (Feb. 2010), pp. 43–79.
- Michael J. Eisenstadt and Kenneth M. Pollack. “Training Better Arab Armies.” *Parameters* Vol. 50, No. 3 (Autumn 2020), pp. 95–111.
- Maha Yahya. “The Fatal Flaw of the New Middle East.” *Foreign affairs* Vol. 104, No. 2 (Mar/Apr 2025), pp. 52–60.
- Risa Brooks. “An Autocracy at War: Explaining Egypt’s Military Effectiveness, 1967 and 1973.” *Security Studies* Vol. 15, No. 3 (2006), pp. 396–430.
- Ryan D. Grauer. “Commanding Military Power: Organizational Sources of Victory on the Battlefiel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1).
- Samuel P. Huntington. “Armed Forces and Democracy: Reforming Civil–Military Relations.”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4 (October 1995), pp. 9–17.
- Stephen Biddle and Robert Zirkle. “Technology, Civil–Military Relations, and Warfare in the Developing World.”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19, No. 2 (1996), pp. 171–212.
- Werner Widder. “Battle Command: Auftragstaktik and Innere Führung: Trademarks of German Leadership.” *Military Review* Vol. 82, No. 5 (Sep/Oct 2002), pp. 2–9.
- Williamson Murray. “Does Military Culture Matter?.” *Orbis* Vol. 43, No.

1 (1999), pp. 27-42.

3. 보고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Foreign Aid to Israel: Overview and Developments since October 7, 2023.” *CRS Report* May 28, 2025.

Eitan Shamir. “The End of Mowing the Grass: If Israel Wants to Continue to Exist, It Must Uproot Hamas from Gaza.” *BESA Center Perspectives Paper* October 22, 2023.

Shimon Arad. “Israel’s National Security Concept: Functional Incoherence and the October 7 Disaster.” *INSS Strategic Assessment* March 2025.

Tamir Hayman. “Achieving the War’s Objectives and Improving Israel’s Long-Term Security: Recommended Policy for Ending the War with a Victory.” *INSS Policy Paper* June 9, 2025.

4. 뉴스 · 기사 및 인터넷 자료

Assaf Orion. “Israel’s Grand Strategy Ripples Begin at Home.” *A Hoover Institution Essey from the Caravan Notebook* May 11, 2021. <https://www.hoover.org/research/israels-grand-strategy-ripples-begin-home>(accessed: August 27, 2025).

Bassam Massoud and Ibraheem Abu Mustafa. “Israeli forces storm Khan Younis in south Gaza, killing scores of Palestinians.” *Reuters* December 6, 202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srael-intensifies-southern-gaza-offensive-us-un-urge-civil>

ian-protections-2023-12-05/(accessed: July 20, 2025).

Deborah Danan. “As IDF raises reservist call-up cap to 450,000, weary troops decry low Haredi enlistment.” *The Times of Israel* May 30,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as-idf-raises-reservist-call-up-cap-to-450000-weary-troops-decry-low-haredi-enlistment/>(accessed: July 20, 2025).

Emily Rose. “Hundreds of Israeli reservists vow to refuse service if judicial overhaul passes.” *Reuters* July 20, 202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hundreds-israeli-reservists-vow-refuse-service-if-judicial-overhaul-passes-2023-07-19/>(accessed: July 20, 2025).

Emanuel Fabian. “Eyal Zamir takes over from Herzi Halevi as IDF chief, vows victory over Hamas.” *The Times of Israel* March 5,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eyal-zamir-takes-over-from-herzi-halevi-as-idf-chief-vows-victory-over-hamas/>(accessed: July 20, 2025).

Emanuel Fabian and Toi Staff. “Katz formally replaces Gallant as defense minister, holds assessment with security chiefs.” *The Times of Israel* November 8, 2024. <https://www.timesofisrael.com/katz-formally-replaces-gallant-as-defense-minister-holds-assessment-with-security-chiefs/>(accessed: July 20, 2025).

Emanuel Fabian and Toi Staff. “Shin Bet probe: Oct. 7 would have been prevented if we’d acted differently.” *The Times of Israel* March 4,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shin-bet-probe-oct-7-would-have-been-prevented-if-wed-acted-differently/>(accessed: July 20, 2025).

Eve Young. “Unprecedented reserves call up slams Israel’s labor market -

- IDI.” *The Jerusalem Post* November 4, 2024. <https://www.jpost.com/israel-news/article-827495>(accessed: July 20, 2025).
- INSS. “Swords of Iron Survey Results-May 2025.” June 5, 2025. <https://www.inss.org.il/publication/survey-may-2025/>(accessed: July 15, 2025).
- Ione Wells and David Gritten. “Israeli defence minister plans to move Gaza’s population to camp in Rafah.” *BBC* July 8,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8rp31lk7mzo>(accessed: July 20, 2025).
- Nadeen Ebrahim. “ Hamas has offered a ceasefire deal. Here’s why that won’t bring an immediate end to the war in Gaza.” *CNN* May 8, 2024. <https://edition.cnn.com/2024/05/06/middleeast/hamas-ceasefire-offer-gaza-war-mime-intl>(accessed: July 20, 2025).
- Nick Beake. “Outrage builds over plan to force all Gazans to southern city.” *BBC* July 11,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9dgv7vld06o>(accessed: July 20, 2025).
- Nora Kinzer Stewart. “South Atlantic conflict of 1982: A case study in military cohesion.” 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pril 1988. <https://apps.dtic.mil/sti/tr/pdf/ADA193790.pdf>(accessed: July 20, 2025).
- Oren Liebermann and Dana Karni. “Battered but not beaten, Hamas embraces guerilla tactics with deadly force.” *CNN* July 12, 2025. <https://edition.cnn.com/2025/07/12/middleeast/hamas-guerilla-tactics-gaza-attack-intl>(accessed: July 20, 2025).
- Patrick Kingsley, Ronen Bergman, and Natan Odenheimer. “How Netanyahu Prolonged the War in Gaza to Stay in Power.” *New York Times* July 11, 2025. <https://www.nytimes.com/2025/07/11>

1/magazine/benjamin-netanyahu-gaza-war.html(accessed: July 20, 2025).

Patrick Kingsley et al. “U.N. Court Orders Israel to Prevent Genocide, but Does Not Demand Stop to War.” *New York Times* Jan 26, 2024. <https://www.nytimes.com/2024/01/26/world/middleeast/icj-israel-gaza-genocide.html>(accessed: July 20, 2025).

Rushdi Abualouf. “ Hamas security officer says group has lost control over most of Gaza.” *BBC* July 7,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k79xlzwjo>(accessed: July 20, 2025).

Toi Staff. “IDF chief said to warn ministers further fighting in Gaza endangers hostages.” *The Times of Israel* July 1,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idf-chief-said-to-warn-ministers-further-fighting-in-gaza-endangers-hostages/>(accessed: July 20, 2025).

UN News. “UN General Assembly adopts Gaza ceasefire resolution by overwhelming majority,” June 12, 2025. <https://news.un.org/en/story/2025/06/1164346>(accessed: July 20, 202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28(202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9586th meeting, on 25 March 2024.”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42189?v=pdf#files>(accessed: July 13, 2025).

Zeb Stub. “Netanyahu says Hamas ‘exactly’ like the Nazis, vows Israel ‘will never surrender’.” *The Times of Israel* April 23,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netanyahu-says-hamas-exactly-like-the-nazis-vows-israel-will-never-surrender/(accessed: July 20, 2025).

A Multilayered Framework for Analyzing Military Effectiveness: The Case of the Israel-Gaza War

Kim, Geunhe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um, Hyunsub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military effectiveness, defined as the ability to generate favorable military outcomes from available physical and political resources. Military effectiveness provides an analytical lens for understanding how states pursue sustainable national security while navigating security dilemmas arising from material power competition.

To this end, the study develops a multilayered framework that evaluates military effectiveness across political,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s. The framework incorporates Open System Theory, highlighting the interactions between military organizations and their broader national and social environments.

Applying this framework to the Israel-Gaza war reveals both hierarchical linkages and trade-offs across different levels of military activity.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beyond the discourse of an arms ra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critically shape military effectiveness.

Finall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dialogue between civilian sectors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civil society) and the

military in achieving strategic objectives.

Keywords: Military effectiveness, Hierarchical military activities, Multilayered framework, Open System Theory, Civil-military relations, Collaborative dialogue

투고일: 2025.07.25. 심사일: 2025.08.22. 게재확정일: 2025.09.05.

북한 전략무기 기술 수준과 군사전략 간 관계 분석

: 상호 구성적 접근

장재규 (영남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 목표 기술 수준 기반 군사전략
4. 현 기술 수준 기반 군사전략
5. 결론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ICBM, 극초음속 활공체, 전술핵무기, 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며 군사전략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무기 개발이 북한 군사전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기술 수준과 전략 선택 간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주목하고, ‘기술-작전 기능-군사적 능력-전략적 효과-군사전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연계 구조를 이론적 틀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무기 6종에 대해 목표 기술 수준과 현 기술 수준을 각각 설정하고, 각 수준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 북한은 대미 핵 보복과 대남 제한핵전을 양측으로 한 복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는 평시 정권 안정과 유사시 무력 기반의 한반도 질서 재편이라는 전략 목표로 수렴된다. 반면, 현 기술 수준에서는 대미 상징적 보복 능력과 대남 핵 타격 능력에 기반하여, 평시 체제 안전보장과 유사시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한적 전략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이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와 기술 중심의 비대칭 상쇄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전략무기 기술 수준을 토대로 비공개 국가의 군사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구조화된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북한, 전략무기, 군사전략, 기술성숙도, 기술-전략 연계, 상호 구성적 접근

1. 서론

북한은 최근 고도화된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정찰 위성, 핵무인수중공격정 등 전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무기체계의 개발 목표가 제시되었다.¹⁾ 이후 이들 무기체계의 시험발사와 공개는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북한이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와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한국의 억제 전략과 작전개념에도 구조적 조정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고도화, 고위력 정밀 타격 자산 확보, 감시·정찰 및 C4ISR 강화 등 복합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행동양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론 기반의 분석 틀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무기체계 및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위성영상, 시험발사 분석, 기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술 수준과 개발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²⁾ 둘째,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북한의 정치 담론, 무력 도발 사례, 전략무기 운용 방식을 통해 전략적 의도와 행위 양식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였다.³⁾ 셋째, 과학기술과

1) 홍민 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 p.11.

2) 홍민,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23-36, (2023. 12. 20); 홍민, “북한의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23-40, (2023. 12. 20); Vann H. Van Diepen,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38 North, (November 28, 2023).

3) 김태현, “북한의 ‘독자적’ 군사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군사』, (2022); 김태현, “북한 김정은의 기회주의적 군사전략,” 『국가전략』, (2024); 이강경·설현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2024); 이동찬,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연구,” 『통일전략』, (2022); 이흥석, “역사적 맥락을 적용한 북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2020).

군사전략 간의 연계성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일부가 기술 발전과 비대칭 전략 간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⁴⁾ 기술-기능-전략 간의 인과 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북한이 설정한 전략무기 개발 목표에 내재한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상적 군사전략과 현실적 군사전략을 구조적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특히 기술이 전략의 수단이면서 전략을 규정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상호 구성적 관계(co-constitutive approach)’의 관점에서, 기술-작전 기능-군사적 능력-전략적 효과-군사전략의 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전략 도출의 이론적 경로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는 전략-능력-기술 간의 구조적 연계성에 주목함으로써, 북한과 같이 전략 문서 접근이 제한된 국가의 전략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데 이론적 유용성을 가진다.

연구 방법은 기존 문헌과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무기체계에 내재한 기술정보를 전략 추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기술 기반 전략 추론’ 방식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술이 제공하는 작전적 기능과 군사적 효과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능력과 전략 선택을 유추하는 ‘기능-능력-전략’의 분석 틀을 적용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군사전략과 과학기술 간의 이론적 연계와 기술-능력-전략 간의 구조적 관계를 논의하고,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북한의 전략무기를 대상으로, 기술 요소-작전 기능-군사적 능력-군사전략의 순서로 목표 기술 수준의 군사전략을 추론한다. 4장에서는 북한의 현실적 기술 수준과 제약 요인을 반영하여 현 기술 수준의 군사전략을 도출한다. 5장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4) 김진무,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능력과 대남 군사전략 변화,” 『주간국방논단』, (2006); 류인석,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전략연구』, (2025).

2.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가.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의 관계

군사전략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의 운용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전략 환경, 군사력 구성, 국가의 전략 의지와 같은 거시적 요인 중심으로 분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기술 집약화는 과학기술이 전략 형성과 수행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략학, 군사 사회학, 과학기술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전략적 선택의 구조와 범위를 형성하는 핵심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과학기술과 군사전략 간의 관계는 다음 네 가지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단-전략 연계론’은 기술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관점이다. 그레이는 “전략은 수단의 제약 속에서 형성되며, 기술은 수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⁵⁾ 둘째, ‘기술결정론’은 기술 자체가 전략 구조를 선도적으로 규정한다는 관점으로, 특히 군사혁신이나 핵전략 분야에서 강조되었다. 예컨대 Posen은 군사혁신의 주요 계기로 기술 발전을 지목하며, 정찰위성이나 C4ISR 체계가 전쟁 수행 방식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였다.⁶⁾ 셋째, ‘상호 구성적 관계론’은 군사전략과 과학기술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Murray & Knox는 기술 조건이 전략 형성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전략적 필요가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군사혁신론’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교리, 조직, 전술, 전략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⁷⁾ Biddle은

5)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24-27.

6) Stephen Peter Rosen, *Winning the Next War: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 20-25.

7) W. Murray and M. Knox, (Eds.),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329.

기술의 효과는 그것이 기존의 조직 및 교리와 어떻게 통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하였다.⁸⁾

이러한 접근 중 상호 구성적 관계론은 북한의 목표 군사전략과 현실적 전략을 추론하려는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이론적 틀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은 전략적 필요에 의해 유도되고 있으며, 반대로 현실의 군사전략은 기술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⁹⁾ 다만 북한은 외부 기술교류가 제한되고 폐쇄적인 체제이므로 기술이 전략을 선도하는 기술결정론적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특정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시험발사나 열병식 등 기술적 신호가 전략 추론의 핵심 단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술결정론의 통찰을 보완적으로 반영하되 기술과 전략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상호 구성적 접근을 유지한다. 이는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기술과 전략 간 제약·피드백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분석 틀이다.

이 이론은 세 가지 전제를 따른다. 첫째, 과학기술은 전략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군사전략의 선택지를 실질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극초음속 활공체나 고체연료 ICBM 보유 여부는 억제 전략의 범위와 신뢰성을 크게 변화시킨다.¹⁰⁾ 둘째, 군사전략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적 필요를 정의하며, 이는 다시 기술적 요구 조건으로 구체화된다. 예컨대 최소 억제를 위한 전략적 보복 능력은 기동형 발사체, 고체연료 추진체, 정밀 유도체계 등의 기술 확보를 전제로 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성숙 수준은 전략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를 진단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로 작용한다. 북한의 경우 전략 문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발사나 무기체계 전시와 같은 기술적 신호를 통해 전략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8) Stephen. Biddle,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p. 37-39.

9) Murray and Knox,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 pp. 1-3.

10) Gray, *Modern Strategy*, pp. 24-27.; Biddle,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p. 37-39.

나. 기술-능력-전략의 구조적 관계

기술이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인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는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구성하는 ‘능력(capability)’이라는 구조적 매개가 존재한다. 능력은 기술의 물리적 속성과 군사적 운용 방식이 결합한 결과로, 어떤 전략이 선택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Biddle은 전력 효과 이론에서 무기의 단순 보유가 아닌 통합 운용 능력이 전략적 성과를 결정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¹¹⁾ 그레이 역시 “전략은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능력을 전략 형성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였다.¹²⁾

능력은 단순한 기술의 보유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정찰, 타격, 생존성, 지휘 통제 등과 같은 작전 기능으로 통합되어 발휘되는 실제적인 실행력이다. 기술은 센서, 플랫폼, 무기체계, 통제 체계 등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전략적 효과를 산출할 수 없다. Posen은 군사혁신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작전개념과 조직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능력 기반의 혁신이라고 분석하였다.¹³⁾ Rosen 또한 기술 변화가 전략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군사 조직 내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⁴⁾

요컨대 기술은 전략적 효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전략적 효과는 기술이 작전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기능이 통합되어 군사적 능력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예컨대,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이동식 ICBM, 정밀 유도체계, 생존성 높은 발사 플랫폼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보유가 아니라 ‘제2적 능력’이라는 전략적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억제, 강압, 위신 확보 등 다양한 전략 옵션의 조건

11) Biddle,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 37.

12) Gray, *Modern Strategy*, p. 24.

13)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pp. 16-17.

14) Stephen Peter Rosen, *Winning the Next War: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 20-25.

이 되며, 전략적 선택의 범위와 한계를 구조화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기술-능력-전략 간의 연계는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기술 → 작전 기능 → 능력 → 전략적 효과 → 전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략에서 기술의 가치는 그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어떤 작전 기능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어떤 전략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다. 분석의 틀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북한이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2021-2025)』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당시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완성을 위한 전략무기 개발과 국방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천명하였으나, 계획의 공식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¹⁵⁾ 그러나 북한의 언론 발표, 열병식 공개 무기, 무기 시험, 지도자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전략무기 관련 구상을 다음의 3개 중핵적 구상과 5개 전략적 과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⁶⁾ 즉,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및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추진잠수함 및 SLBM 확보, 군사정찰위성 운용, 500km 전방 중심 무인 정찰기 운용 등 총 8개 항목이다.¹⁷⁾

그러나 이들 항목은 전략적 목표 또는 기술 개발 과업 수준에서 제시된 것으로, ‘기술-능력-전략’ 간 구조적 연계성을 분석하기에는 분절적이고 중복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항

15) 홍민 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U.S. DIA, *North Korea Military Power: A Growing Regional and Global Threat* (Washington, D.C.: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21).

16) 홍민 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p. 22.

17) 홍민 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p. 22.

목을 실제 운용되는 ‘무기체계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즉, 해당 항목이 독립적인 기술적·작전적 무기체제로 구분 가능한지, 기술 구성과 운용 방식이 전략적 효과의 차이를 갖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하고, 추상적인 항목은 명확한 무기체계 단위로 정리하였다. 예컨대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ICBM 개발’, ‘ICBM의 명중률 제고’는 모두 ICBM이라는 단일 체계의 구성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전략적 목표(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확보)에 귀속되므로 하나의 무기체제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한 북한의 6개 전략무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 목표로 하는 북한 핵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액체연료 기반 대형 ICBM, 고체연료 기반 이동식 ICBM, 초대형 핵탄두 탑재 기술을 포함한다. 둘째, 극초음속 활공체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이 가능한 재래식 또는 핵탄두 탑재 활공체로, 탄도미사일의 부스터와 결합해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이 가능하다. 셋째, 전술핵무기로, 소형·경량화된 전술 핵탄두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단거리 운반 수단을 포함한다. 넷째, 핵추진잠수함 및 SLBM으로, 핵무기의 생존과 기습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수중 기동성과 은밀성을 통해 제2격 능력을 실현한다. 다섯째, 정찰위성으로, 타격 수단의 정확성 향상 및 핵·미사일 운용의 실시간 상황 인지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궤도 진입·영상전송 등 기반 기술이 관건이다. 여섯째, 고고도 무인정찰기(High-Altitude Long-Endurance Unmanned Aerial Vehicle, HALE UAV)로, 500km 이상 작전반경, 장기체공 능력, 고고도 침투 운용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제공하는 무기체계이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전략무기 분류는 북한 전략 구상의 구체성과 기술-전략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보다 적합한 구조를 제공한다.

(2) 분석 절차와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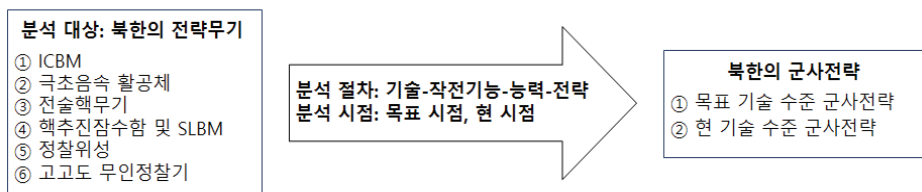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북한의 전략무기를 ‘기술-작전 기능-군사적 능력-전략적 효과-군사

전략'이라는 다섯 단계의 구조로 분석함으로써, 무기체계의 기술적 구성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략적 의미 간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장기적 기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분석 과정에서는 '목표 수준'과 '현 수준'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식 발언은 대체로 이상적 수준의 전략 능력을 전제하지만, 실제 기술 수준은 제약적이며, 일부 무기체계는 실전 배치에 이르지 못하거나 실증적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각 단계의 분석은 목표 수준과 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북한 전략 기획과 현실적 군사 능력 간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진단한다. 첫째, 각 전략무기를 구성하는 기술 요소를 구분한다. 이때 목표 수준에서는 북한이 지향하는 기술구조를 중심으로, 현 수준에서는 각 기술 요소의 기술성숙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둘째, 기술 요소에 대응하는 작전 기능을 연결한다. 목표 수준에서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 작전 기능을 식별하고, 현 수준에서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결손된 작전 기능을 현실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식별된 작전 기능들의 결합을 통해 무기체계의 군사적 능력을 설정한다. 목표 수준에서는 작전 기능의 완전한 결합을 전제한 이상적 능력을, 현 수준에서는 부분적 기능 수행에 기반한 제한된 능력을 도출한다. 넷째, 설정된 군사적 능력으로부터 전략적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북한의 군사전략을 추론한다. 이때 목표 수준에서는 전략무기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전략 효과를 기준으로 이상적 군사 전략을, 현 수준에서는 제한된 전략 효과에 기초한 현실적 전략을 추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3. 목표 기술 수준 기반 군사전략

가. 전략무기별 기술 요소 구분

북한이 개발 중인 전략무기는 각기 다른 작전 기능과 운용환경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요소 역시 다르게 구성된다.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기술 요소는 일반적으로 추진, 유도, 탄두, 생존, 정밀성, 통신 및 정보처리 등으로 분류되며, 이는 물리적 구조와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포함하는 기술적 단위이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공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세부 요소가 중복되거나 작전적 기능과의 연결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무기체계의 전략적 목적과 운용 개념에 따라, 기술 요소를 작전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능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재구성하였다. 전략무기별 주요 기술 요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⁹⁾

<표 1> 기술 요소 구분

전략무기	주요 기술 요소
ICBM	① 고위력 핵탄두 기술-수백 kt급 출력의 핵탄두 설계 기술 ② 다단계 추진체 및 고체연료 기술-장거리 비행용 다단 추진·연료 기술 ③ 항법 및 유도 기술-궤도 유지 및 목표 유도 제어 기술 ④ MIRV 기술-다탄두 독립 분리·비행 기술 ⑤ 재진입체 기술-대기 재진입 시 열·충격 방호 기술
HGV	① 비행체 설계 기술-극초속 활공체 형상·구조 설계 기술 ② 유도 및 자세 제어 기술-비행 중 방향·자세 조절 제어 기술 ③ 고온 환경 대응 기술-고속 비행 시 열 보호 구조 기술

18) U.S. DIA, *North Korea Military Power: A Growing Regional and Global Threat*, pp. 53-57.;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3* (London: Routledge, 2023), pp. 260-265.

19) 전략무기별 주요 기술 요소의 구분은 다음의 출처를 참고하였다.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의 『북한 군사력 보고서(North Korea Military Power Report, 2021)』,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의 『The Military Balance, 2023』,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산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Missile Defense Project),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Panel of Experts Report, 2023) 등이다.

전략무기	주요 기술 요소
전술핵무기	①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경량 · 소형 핵기폭장치 설계 기술 ② 운반체 통합 기술-탄두와 미사일의 일체형 통합 기술 ③ 핵 기폭 제어 기술-기폭 시간 · 위치 정밀 제어 기술
핵추진잠수함 및 SLBM	① 원자력 추진 시스템 기술-장기 잠항을 위한 원자로 추진 기술 ② 수직 발사 시스템 및 수중 발사 기술-잠수함 내 미사일 수직 사출 기술 ③ 다단계 고체 추진체 기술- 수중 발사용 다단 고체 연료 기술
정찰위성	① 발사체 기술-위성 궤도 진입용 로켓 추진 기술 ② 위성체 설계 및 궤도 비행 기술-본체 구조 및 안정적 궤도 운영 기술 ③ 영상 획득 기술-고해상도 영상 센서 수집 기술 ④ 위성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술 -지상 간 실시간 자료 전송 기술 ⑤ 지상 통제 기술-궤도, 센서, 데이터의 운영 통제 기술
고고도 정찰 무인기	① 고고도 장기체공 기체 설계 기술-고고도 · 장기체공 기체 구조 설계 ② 센서 기술-다대역 정밀 표적 감지 센서 기술 ③ 원격 운용 기술-실시간 원격 제어 및 데이터 처리 기술

나. 전략무기별 기술 요소와 작전 기능 매칭

전략무기의 기술 요소는 어떤 작전 기능(operational function)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군사적 가치가 결정된다. 작전 기능은 기술이 전장에서 어떻게 군사적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연결고리이다. 일반적으로 작전 기능은 6개로 구분되지만,²⁰⁾ 전략무기의 다양한 기술 요소를 일률적으로 6개의 작전 기능으로만 연결하는 방식은 기술의 실제적 작용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 작전 기능의 범주를 고려하되, 기술 요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작전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략무기별 주요 기술 요소와 작전 기능을 연결하면 <표 2>와 같다.

20) 6대 작전 기능은 정보(Intelligence),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기동(Movement and Maneuver), 화력(Fires), 방호(Protection), 지속지원(Sustainment) 등이다(U.S. JCS, *Joint Operations. Joint Publication 3-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January 17, 2020); NATO, *Allied Joint Doctrine for the Conduct of Operations. AJP-3* (Brussels: NATO Standardization Agency, 2010).

〈표 2〉 기술 요소와 작전 기능 매칭

전략무기	기술 요소	작전 기능
ICBM	고위력 핵탄두 기술	전략 표적 대량 파괴
	다단계 추진체 설계 및 고체연료 기술	장거리 타격, 발사 신속성·생존성
	항법 및 유도 기술	정밀 타격
	MIRV 기술	다중 목표 동시 타격
	재진입체 기술	타격 실효성
극초음속 활공체	비행체 설계 기술	방공망 회피
	유도 및 자세 제어 기술	정밀 타격
	고온 환경 대응 기술	고속 침투
전술핵무기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	운용 유연성
	운반체 통합 기술	투발 수단 다양화
	핵 기폭 제어 기술	타격 효과 극대화
핵추진잠수함 및 SLBM	원자력 추진 시스템 기술	장기 은밀작전
	수직 발사 시스템 및 수중 발사 기술	기습 타격
	다단계 고체 추진체 기술	장거리 타격
정찰위성	발사체 기술	위성체 배치
	위성체 설계 및 궤도 비행 기술	위성체 운영
	영상 획득 기술	표적 탐지
	위성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술	실시간 정보 제공
	지상 통제 기술	임무 통제
고고도 무인정찰기	고고도 장기체공 기체 설계 기술	장기 공중 감시정찰
	센서 기술	표적 탐지
	원격 운용 기술	실시간 정보 제공, 항공기 통제

다. 전략무기별 군사적 능력과 전략적 효과

무기체계는 구성 기술이 특정한 작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여러 작전 기능이 결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군사적 능력은 다수의 작전 기능이 전술·작전·전략 차원에서 통합 운용될 때 성립한다.²¹⁾ 반면, 전략적 효과는 군사적 능력이 상대국의 의사결정, 전략 판단, 혹은 위기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

21) NATO, *Allied Joint Doctrine for the Conduct of Operations*, p. 1-6-1-7, 2-3.

치·전략적 결과를 의미하며,²²⁾ 이는 억제, 강압, 동맹 약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효과는 단지 전투력 행사 그 자체보다, 그 전투력이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기대 효용에 의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인식적 차원의 조건도 포함된다.²³⁾

작전 기능이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특정 임무나 전장 효과를 지향하는 기능 간 목적성, 해당 기능들의 통합 운용 가능성, 시간·공간적 상호보완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²⁴⁾ 또한, 군사적 능력이 전략적 효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해당 능력이 전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정합성, 전략 환경 내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로 고려되는 전략적 의미성, 상대방이 그 능력을 전략 상황의 변수로 인식할 수 있는 인지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²⁵⁾

이러한 기준에 따른 전략무기별 군사적 능력과 전략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BM의 군사적 능력은 ‘미 본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장거리 타격, 정밀 타격, 다중 목표 동시 타격 등의 작전 기능이 결합하여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동시에 전략 표적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고, 발사의 신속성과 생존성, 타격 실효성 등의 작전 기능이 결합하여 핵 타격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세 가지의 전략적 효과를 유도한다. ①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함으로써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② 미국의 본토 피해 우려는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③ 이러한 상황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 약화로 이어져 한미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전략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22) Stephen Biddle and Ivan Oelrich,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 no. 1(2016), pp. 7-10.; Mearsheimer, John J.,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13-18.

23)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p. 2, 35-36, 69-70, 121-123.

24) Gray, *Modern Strategy*, pp. 24-27, 131-134.; U.S. JCS, *Joint Operations*, pp. II-1-II-6, III-1-III-4.

25) Lawrence Freedman, *Strategy: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Talmadge, Caitlin, *The Dictator's Army: Battlefield Effectiveness in Authoritarian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0).

둘째, 극초음속 활공체의 군사적 능력은 ‘한미동맹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핵 타격 능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속 침투, 정밀 타격, 방공망 회피의 작전 기능이 결합하여, 한미 연합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고, 의도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 신뢰성 있는 대남 핵 타격, 한국의 안보 불안 심리 심화 등의 전략적 효과를 유도한다.

셋째,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능력은 ‘대남 선택적·정밀 핵 타격 능력’이다. 운용 유연성 작전 기능은 핵무기의 사용을 전략적 차원뿐 아니라 전술적 차원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투발 수단 다양화 작전 기능은 지상·해상·잠수함 발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기습성과 생존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여 타격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타격 효과의 극대화 작전 기능은 전술핵 사용으로도 한국의 주요 전략 및 작전자산이나 지휘통제 시설 등에 결정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3가지의 전략적 효과를 유도한다. 첫째, 제한적 충돌 상황에서도 핵 사용 가능성을 높여 확전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유사시 정밀 핵 타격은 북한이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미국의 핵 문턱을 넘지 않는 선택적·제한적 전술핵 사용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약화할 수 있다.

넷째, 핵추진잠수함 및 SLBM의 군사적 능력은 ICBM과 동일한 ‘미 본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장기간 수중 은밀작전과 기습 타격, 장거리 타격 등의 작전 기능이 결합할 경우, 핵 타격의 신뢰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ICBM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대미 핵 보복 능력의 신뢰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이것의 전략적 효과는 ICBM과 다르지 않다.

다섯째, 위성체 배치와 운영, 표적 탐지, 실시간 정보 제공, 임무 통제 등 정찰위성의 작전 기능 결합은 ‘우주 기반 전략적 감시정찰 능력’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전략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작전적 타격 수단의 정밀도와 실시간 대응성을 보장하여 핵 타격의 실

효성을 강화한다. 둘째, 독자적 우주 감시정찰 수단의 확보는 한미의 정보 우위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여섯째,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장기 공중 감시정찰, 표적 탐지, 실시간 정보 제공, 항공기 통제 등의 작전 기능의 결합은 ‘고고도 장기 감시정찰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는 정찰위성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전략적 효과는 정찰위성의 것과 다르지 않다.

라. 군사전략 추정

북한의 전략무기별 군사적 능력은 상호보완적 조합을 통해 대상별로 통합적 군사 능력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첫째, 미국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핵 보복 능력’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선제 핵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상 및 해상 기반의 미 본토 핵 타격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즉, 생존과 기습이 가능한 이원화된 투발 체계와 함께, 실시간 표적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 감시정찰 체계는 미국의 핵 사용 결정을 억제하는 신뢰성 있는 보복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한국에 대한 ‘제한핵전 수행 능력’이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전략적 수준이 아닌 전구 작전 수준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되 미국의 핵 보복 임계점을 넘지 않고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한국 또는 한미동맹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핵 타격 능력, 타격 표적과 효과를 전략적 목적에 따라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핵 타격 능력, 그리고 우주 및 공중 기반 감시정찰 능력의 결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전략적 효과를 대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핵 보복 능력은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개입 억제와 평시 대미 협상력 강화의 전략적 효과를 유도한다. 둘째, 한국에 대한 제한핵전 수행 능력은 유사시 절대적 군사적 우위와 평시 안보 불안 심화의 효과를 만든다. 셋째,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능력은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 나아가 한미동

맹의 균열 가능성으로 수렴될 수 있다.

군사전략은 일반적으로 목표, 방법, 수단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정의되며, 이 세 요소의 일관성과 정합성은 전략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²⁶⁾ 즉, 군사전략은 목표를 중심으로, 수단과 방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전략의 수단에 해당한다. 전략에서 방법은 주어진 수단을 어떻게 운용하여 전략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경로 또는 작동 방식으로 정의된다. Lykke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방법은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⁷⁾ 그레이 또한 전략은 ‘수단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설계’라고 강조한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서 도출된 전략적 효과는 군사적 능력이라는 전략 수단의 운용을 통해 의도된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작동 경로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전략적 효과는 수단의 효과적 배치와 활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구조적 변화를 강요하거나 의도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며, 전략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의 목표는 전략의 수단과 방법으로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의미하며, 전략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군사적 능력이라는 수단과 전략적 효과라는 방법을 결합하여 북한의 전략 목표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시에는 ‘대미 협상력 강화’,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 ‘한미동맹 균열’, ‘한국 내 안보 불안 심화’ 등의 전략적 효과를 통해 전략 환경을 구조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재편하고, 이를 통해 ‘정권과 체제의 안정성 확보’라는 전략 목표로 수렴된다. 반면 유사시에는 ‘절대적 대남 군사적 우위 확보’, ‘미국의 한반도 개입 억제’ 등의 전략적 효과를 통해 전장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무력 기반 한반도 질서 재편’이라는 전략 목표로 귀결된다

26) Arthur F. Lykke, “Defining Military Strategy,” In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edited by Arthur F. Lykke, Jr.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1989), pp. 3-8.; Gray, *Modern Strategy*, pp. 17-27, 131-134.

27) Lykke, “Defining Military Strategy”, pp. pp. 3-4.

28) Gray, *Modern Strategy*, pp. 24-27, 131-134.

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북한 군사전략은 <표 3>와 같다.

<표 3> 목표 기술 수준 군사전략

구분	평시	유사시
목표	정권과 체제 안정성 확보	무력 기반 한반도 질서 재편
방법	대미 협상력 강화,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 한미동맹의 균열, 한국의 안보 불안 심화	절대적 대남 군사적 우위 확보, 미국의 한반도 개입 억제
수단	신뢰성 있는 대미 핵 보복 능력, 대남 제한핵전 수행 능력	

4. 현 기술 수준 기반 군사전략

앞선 논의는 북한 전략무기의 기술이 목표 수준에 도달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전 기능, 군사적 능력, 전략적 효과, 군사전략을 순차적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은 목표 기술에 비해 다양한 제약과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군사적 능력과 전략적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기술 수준의 군사전략 도출을 위해서는 전략무기별 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를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작전 기능, 군사적 능력, 전략적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가. 전략무기별 기술성숙도 평가

기술성숙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TRL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TRL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미 국방부 등에서 표준화하여 사용하는 평가 척도로서, 특정 기술이 실제 운용환경에서 적용되기까지의 단계를 1단계에서 9단계까지로 구분한다.²⁹⁾

29) TRL 1단계는 과학적 기초 원리가 관찰되고 보고된 수준이며, 2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개념과 응용 가능성이 정성적으로 정립된 상태이다. 3단계에서는 개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 실험과 분석이 수행되는 수준이며, 4단계는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요소 수준의 검증이

그러나 공개 자료에 기반한 간접 평가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TRL의 9개 단계를 정량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를 정성적 수준으로 재구성한 기준을 활용한다. 즉, TRL 1-2를 ‘개념 정립 수준’, TRL 3-4를 ‘실험실 검증 수준’, TRL 5-6을 ‘환경 검증 수준’, TRL 7-9를 ‘운용 성숙 수준’으로 구분하고,³⁰⁾ 각 전략무기의 기술 요소는 이 네 단계 중 하나로 분류하여 성숙도를 평가한다. <표 4>는 북한이 개발 중인 여섯 가지 전략무기를 대상으로, 각각의 주요 기술 요소별 성숙도와 전체 통합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공개자료 기반 전문가 분석과 주요 전문 기관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출된 것이다.³¹⁾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5단계에서는 관련 환경에서 구성품이 검증되고 제한된 통합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6단계에서는 시스템 또는 시제품이 실제 운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연되어 기술의 작동 가능성이 검증되는 상태이다. 7단계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시제품 시연으로 구성품 간 통합성과 운용 적합성이 평가되는 수준이며, 8단계에서는 최종 시스템이 완성되고 통합시험을 통해 요구 성능이 입증되는 상태이고, 9단계는 기술이 실제 임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완전한 실용화가 이루어진 수준이다.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NASA Space Technology Roadmaps and Priorities: Restoring NASA's Technological Edge and Paving the Way for a New Era in Space*,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2); U.S. GAO,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Guide: Best Practices for Evaluating the Readiness of Technology for Use in Acquisition Programs and Projects* (GAO-20-48G), (Washington, DC: GAO, 2020).

30) U.S. GAO,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Guide*.

31) 주요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UN Panel of Experts,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627* (2022), S/2023/171, (March 7, 2023);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Hypersonic Weapons: North Korea,” CSIS, (November 2023);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Claims and Capabilities,” CSIS, (April 15, 2024);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and Capabilities,” CSIS, (March 2024); CSIS, “Missile Threat: Hypersonic Threats,” CSIS, (Accessed July 4, 2025); CSIS, “Missile Threat: Missiles for HALE UAVs,” CSIS, (Accessed July 4, 2025); Bruce W. Bennett, “Did North Korea Really Test a Hypersonic Missile?,” RAND Commentary, (April 9, 2024); Bruce W. Bennett, “Why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Capabilities Remain Limited,” RAND Commentary, (April 2024); Van Diepen,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 Vann H. Van Diepen, “North Korea Tests New Solid ICBM Probably Intended for MIRVs,” 38 North, (November 5, 2024); Vann H. Van Diepen, “North Korea’s Nuclear Powered Missile Submarine: A Mystery Wrapped Around a Riddle and an Enigma,” 38 North, (March 21, 2025);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April 2023).

〈표 4〉 기술성숙도

전략무기	기술 요소별	통합 운용
ICBM	고위력 핵탄두 기술(운용 성숙), 다단계 추진체 설계 및 고체연료 기술(환경 검증), 항법 및 유도 기술(실험실 검증), MIRV 기술(실험실 검증), 재진입체 기술(환경 검증)	환경 검증 수준
극초음속 활공체	비행체 설계 기술(실험실 검증), 유도 및 자세 제어 기술(실험실 검증), 고온 환경 대응 기술(실험실 검증)	실험실 검증 수준
전술핵무기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운용 성숙), 운반체 통합 기술(운용 성숙), 핵 기폭 제어 기술(환경 검증)	초기 운용 성숙 수준
핵추진잠수함 및 SLBM	원자력 추진 시스템 기술(개념 정립), 수직 발사 시스템 및 수중 발사 기술(환경 검증), 다단계 고체 추진체 기술(환경 검증)	실험실 검증 수준
정찰위성	발사체 기술(운용 성숙), 위성체 설계 및 궤도 비행 기술(환경 검증), 영상 획득 기술(실험실 검증), 위성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술(실험실 검증), 지상 통제 기술(환경 검증)	환경 검증 수준
고고도 무인정찰기	고고도 장기체공 기체 설계 기술(환경 검증), 센서 기술(환경 검증), 원격 운용 기술(실험실 검증)	실험실-환경 검증 수준

나. 전략무기별 군사적 능력과 전략적 효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 요소의 성숙도는 해당 기술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군사 기술의 경우, 운용환경에서의 성능 검증 여부와 체계 통합 운용 가능성까지를 포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성숙도에 따른 작전 기능 수행 수준을 ‘정상 발휘’, ‘부분 발휘’, ‘발휘 불가’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 기술성숙도가 운용 성숙 수준인 경우는 ‘정상 발휘(Full Operational Capability)’ 수준으로 간주한다. 이 수준은 실제 운용환경에서의 시스템 시험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련 작전 기능을 제약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기술성숙도가 환경 검증 수준인 경우는 ‘제한적 발휘(Limited Operational Capability)’ 수준으로 분류한다. 이 단계는 유사 운용환경에서의 부분 시스템

시험 또는 시범 운용이 완료되었으나, 전체 시스템 통합과 실전 운용 경험은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기술성숙도가 실험실 검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휘 불가(Non-Operational)’로 평가한다. 이 범주는 개념 정립, 초기 기술 개발, 실험실 수준의 검증 단계에 머무는 기술로서,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앞서 평가한 기술성숙도를 기준으로 전략무기별 작전 기능의 발휘 수준을 구분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작전 기능 발휘 수준

전략무기	정상 발휘	제한적 발휘	발휘 불가
ICBM	전략 표적 대량 파괴	장거리 타격, 발사 신속성 · 생존성, 타격 실효성	정밀 타격, 다중 목표 동시 타격
극초음속 활공체			방공망 회피, 정밀 타격, 고속 침투
전술핵무기	운용 유연성, 투발 수단 다양화	타격 효과 극대화	
핵추진잠수함 및 SLBM		기습 타격, 장거리 타격	장기 은밀작전
정찰위성	위성체 배치	위성체 운영, 임무 통제	표적 탐지, 실시간 정보 제공
고고도 무인정찰기		장기 공중 감시정찰, 표적 탐지	실시간 정보 제공, 항공기 통제

전략무기의 군사적 의미는 개별 기술 요소의 성숙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합하여 실제 작전 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 작전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성숙도가 높지 않더라도 일부 작전 기능이 제한적으로 구현된다면, 해당 무기체계는 일정 수준의 현실적인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작전 기능 간의 결합 수준과 그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결국 그러한 군사적 능력이 상대국에 미치는 전략적 효과는 협상력, 억제력, 동맹 신뢰 등 정치 · 심리적 차원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략무기별 군사적 능력과 전략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ICBM의 기술성숙도에 따라 각 작전 기능의 발휘 수준은 상이하게 평가된다. 전략 표적 대량 파괴 기능은 고위력 탄두와 일정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 확보를 통해 정상 발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거리 타격, 발사 신속성 및 생존성, 타격 실효성과 같은 기능은 제한된 시험 운용과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제한적 발휘 수준에 해당하며, 정밀 타격과 다중 목표 동시 타격 능력은 유도·항법 및 다탄두 분리 운용 기술의 미비로 인해 발휘가 불가하다. 이러한 작전 기능의 결합은 북한 ICBM이 전략적 정밀성 및 다중 목표 대응 능력이 결여된 채, 고위력 단일 목표 타격만 가능한 제한적 핵 타격 수단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미국 본토에 대한 일정 범위의 타격 가능성은 확보하였으나, 실질적인 억제 혹은 선제 능력 확보에 필수적인 통합 작전 능력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미국 본토에 대한 제한적 핵 타격 능력”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① 대미 협상력 제고는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위협 보장 능력이 부족해 중간 수준의 전략적 효과로 평가된다. ② 미군의 한반도 개입 억제 효과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 수준의 심리적·정치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③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내 신뢰 약화 역시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한미 간 고위급 전략대화, 전략 자산 순환 배치와 같은 대응 조치들로 인해, 제한적 수준의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기술성숙도가 실전 운용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방공망 회피, 정밀 타격, 고속 침투 등 핵심 작전 기능은 모두 발휘 불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이 극초음속 기술을 활용한 독립적인 핵 타격 수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된 군사적 능력을 전제로 할 때, 다음의 전략적 효과들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발현되기 어렵다. ①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는 고속 기동성과 저고도 활공 능력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방어체계의 우회나 무력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② 대남 핵 타격 신뢰성 확보 역시 정밀 유도 기술과 운용 안정성의 부족으로 인해 전략적 신뢰로 이어지기 어렵다. ③ 한국의 안보 불안 심화는 무기체

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위협 인식의 강도를 크게 증폭시키기 어려우며, 전략적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 전술핵무기의 기술성숙도는 일부 핵심 작전 기능에서 실전 운용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 유연성과 투발 수단의 다양화는 반복된 시험 발사와 이동식 플랫폼 기반 운용 등을 통해 정상 발휘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전술핵의 배치와 사용 가능성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타격 효과 극대화는 탄두 정밀도, 기폭 제어 안정성, 관통력 확보 등 일부 기술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작전 기능의 결합은 북한이 일정 조건에서 전술핵 사용이 가능한 실질적 전장 억제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확전 우위 확보는 국지적 충돌 시 전술핵 위협을 통해 군사적 행동의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전장을 전략적 국면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실효성을 부여한다. 다만, 확전으로 전개될 경우, 북한이 감수해야 할 정치·군사적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전략 효과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② 유사시 전장 주도권 확보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전술핵으로 상쇄함으로써 초기 국면에서 작전 통제력과 기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전술핵이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체제로 평가되고, 한국이 비핵국가라는 구조적 비대칭성에 기반하므로, 그 전략적 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는 북한의 전술핵이 실전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될 경우, 한국 내에서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ICBM과 같이 한미동맹의 신뢰성 강화 조치를 고려할 때, 이 효과는 제한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넷째,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및 SLBM 전력의 기술성숙도는 핵심 작전 기능의 일부에서 제한된 수준의 발휘가 가능하나, 통합적 운용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습 타격과 장거리 타격 기능은 반복적인 SLBM 시험발사와 잠수함 플랫폼 개발 시도의 결과, 제한적 발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 은밀작전 수행 능력은 원자로 추진체의 안정성, 저소음 운항 기술, 지휘통신 체계 등의 미비로 인해 아직 발휘 불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작전

기능의 결합은 북한이 잠수함 기반의 핵 타격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 제약이 크며, 기습과 은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한적 수준의 해상 기반 핵 타격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① 대미 협상력 제고는 일정 수준에서 가능하나, 전력의 신뢰성과 생존성 확보가 불충분하여 중간 수준의 전략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② 미군의 한반도 개입 억제 효과는 해상 발사 플랫폼의 실전 운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미국 본토 또는 전개 병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따라서 전략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③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 효과는 해상 기반 전력의 불완전성과 이에 따른 전력 지속성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 수준의 영향력에 머무를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북한 정찰위성의 기술성숙도는 일부 작전 기능에서 실전 운용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정보 획득 및 활용 능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위성체의 궤도 진입 및 배치 능력은 반복적인 발사 성공과 궤도 안착을 통해 정상 발취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성체 운영 및 임무 통제 능력은 데이터 전송 지연, 전파교신의 안정성 부족, 궤도 유지 문제 등으로 인해 제한적 발취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표적 탐지 및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은 해상도, 영상처리 기술의 미비로 인해 발취 불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작전 기능의 결합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우주 기반 감시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시간 표적 정보 획득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기초 수준의 전략 감시 능력만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① 핵 타격 실효성 강화는 사전 표적 탐지 및 피해 평가 기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나, 현재 수준의 정찰 능력으로는 목표 식별·지속 감시가 제한되므로 전술적 효과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② 한미의 정보 우위 완화는 상징적 차원의 정보 자산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으나, 실질적인 정찰·감시 능력 격차를 줄이기에는 부족하여 구조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여섯째, 북한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일부 감시정찰 기능에서 제한적인 성과

를 보이고 있으나, 실시간 정보수집 및 전장 통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 공중 감시정찰 및 표적 탐지 기능은 고고도 비행 플랫폼의 운용 성공 사례와 일부 촬영 능력 확보 등을 근거로 제한적 발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 제공과 항공기 통제 기능은 고속 데이터 링크, 정밀 영상처리 기술의 부재로 인해 발휘 불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작전 기능의 결합은 북한이 고고도 무인기를 활용한 일정 수준의 독립적 감시 능력은 갖추었으나,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와 작전 통제 연계에는 한계가 뚜렷한, 제한적 감시정찰 능력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① 핵 타격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핵 투발 수단과 연계된 사전 표적 식별 및 피해 판정 기능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작전 효과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② 한미의 정보 우위 완화 효과는 고고도 UAV의 상징적 운용 성과가 북한의 정보 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감시 범위와 정확성의 한계로 인해 구조적 수준의 정보 균형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 효과로 평가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군사적 능력과 전략적 효과

전략무기	군사적 능력	전략적 효과
ICBM	미국 본토에 대한 제한적 핵 타격 수단	대미 협상력: 중간 미군 개입 억제: 제한 확장억제 신뢰 약화: 제한
극초음속 활공체	실질적 전력화 미흡	미사일방어 무력화 · 대남 신뢰성 · 한국 안보 불안 심화 모두 제한
전술핵무기	전장 억제 · 사용 가능 전술 자산	확전 우위: 중간 전장 주도권: 높음 확장억제 약화: 제한
핵추진잠수함 및 SLBM	제한적 해상 기반 핵 타격	대미 협상력: 중간 개입 억제 · 확장억제 영향: 제한
정찰위성	기초 수준의 우주 기반 감시	핵타격 실효성 강화: 낮음 정보우위 완화: 제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제한적 감시정찰 자산	핵타격 지원: 낮음 정보우위 완화: 제한

다. 군사전략 추정

북한의 전략무기 전체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능력은 주로 ICBM, 핵추진잠수함 및 SLBM 등과 같은 전략핵 전력에 기반한다. 지상 기반 ICBM은 고위력 탄두와 일정 수준의 장거리 추진체와 재진입체 기술을 통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제한적 핵 타격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일정 수준의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상 기반 전략무기인 SLBM 역시 기습과 생존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나, 장기 은밀작전 능력의 부재와 기술성숙도 한계로 인해 미 본토를 겨냥한 실질적 억제력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극초음속 활공체는 방공망 회피, 고속 침투, 정밀 타격 등 핵심 작전 기능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군사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찰위성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직접적 타격 수단은 아니나 핵무기의 실효적 운용을 보조할 수 있는 기초적 감시정찰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의 대미 군사적 능력은 지상 및 해상 기반의 제한적 핵 타격 수단에 근거한 ‘상징적 수준의 핵 보복 능력’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주로 전술핵무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술핵무기는 반복된 시험과 운용 경험을 통해 운용 유연성과 다양한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전장 환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군사적 능력은 국지적 충돌 상황에서 핵 사용을 위협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각각 기초 수준의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과 제한적 전술 감시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핵무기 운용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감시정찰 자산은 실시간 정보 제공과 표적 식별의 정밀도가 부족하여 통합작전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극초음속 활공체 역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핵 타격 수단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적 능력은 일정 수준의 전술핵 운용 역량과 제한

적 감시정찰 수단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반복된 전술핵 운반체 시험발사, 이동식 발사 플랫폼의 운용 경험, 다양한 투발 수단 확보 등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실제 핵 타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대미 ‘상징적 수준의 핵 보복 능력’과 대남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은 전략적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략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전략적 효과로, ICBM과 SLBM의 보유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해 이론적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핵 협상이나 제재 완화를 둘러싼 전략대화에서 일정 수준의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극초음속 활공체, 정찰위성 등 기타 수단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실전 신뢰성이 결여되어 미군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둘째, 한국에 대한 전략적 효과로, 전술핵무기의 실전 운용 가능성은 제한적이거나 확전 우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수단으로서 전술핵은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전장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셋째,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북한의 전략무기 체계가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도전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술핵의 운용 가능성이 일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정치적·심리적 신뢰가 흔들리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확장억제 대화, 정보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정 부분 완충되고 있으나, 북한의 능력 고도화가 지속될 경우 동맹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 환경에 압박 요인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제한적 수준의 영향에 그치지만, 동맹 신뢰성 저해 가능성은 상시적인 전략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3장의 논리를 적용하여 북한의 군사전략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의 수단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인 대미 상징적 수준의 핵 보복 능력, 대남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이며, 전략의 방법은 전략적 효과인 대미 협상력 제고, 부분적 확전 우위 확보, 초기 단계의 전장 주도권 확보 등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

과 방법의 조합을 전제로 할 때, 평시 군사전략의 목표는 군사력 사용 없이 핵전력을 통해 억제력을 발휘하고, 외교적 협상에서 지위를 강화하며, 체제 내부의 정당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은 대미 상징적 수준의 핵 보복 능력과 대남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이다. 전자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전략 자산 전개를 사전에 제약함으로써 외교적 협상의 지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후자는 국지적 충돌의 확산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평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전략 환경은 북한이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결국 평시 전략 목표는 “정권과 체제의 안전보장”으로 수렴된다. 반면, 유사시 북한 군사전략의 목표는 핵 능력을 활용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전장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적 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은 대남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이며, 이는 전술핵 운용을 통해 국지적 확산 가능성을 제기하고, 초기 전장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전략 효과는 초기 국면에서 충돌의 강도와 방향을 북한에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협상 전환을 위한 지렛대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유사시 북한 군사전략의 목표는 “유리한 협상 환경의 조성”으로 수렴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현 기술 수준의 군사전략

구분	평시	유사시
목표	정권과 체제 안전 확보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방법	대미 협상력 제고	초전 전장 주도권 확보, 확산 우위
수단	상징적 수준의 대미 핵 보복 능력, 대남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 제시된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전략무기의 기술 수준이 군사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임을 전제로 하여, 기술과 전략의 상호 구성적 관계론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의 완전성을 가정한 목표 기술 수준에서는 북한이 대미 신뢰성 있는 핵 보복 능력과 대남 제한핵전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평시에는 정권과 체제의 안전보장, 유사시에는 무력을 통한 한반도 질서 재편이라는 포괄적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현 기술 수준에서는 대미 상징적 수준의 핵 보복 능력과 대남 신뢰성 있는 핵 타격 능력에 기초하여, 평시에는 동일하게 정권과 체제의 안전보장, 유사시에는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이 전략 목표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북한 전략무기 개발의 최종 지향점을 추론함과 동시에, 현 기술 수준이 군사전략의 범위와 성격에 실질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향후 전략적 행보에 대한 전망으로, 북한은 전략무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대미 보복 능력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진입체 기술, MIRV 기술,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 정찰위성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자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밀착된 북러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전망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은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과 전략 환경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첫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전략과 둘째,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중심의 비대칭 상쇄전략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전략은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 자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바탕

으로, 억제 메시지의 명확성, 군사적 대응 태세, 연합 훈련 및 전략 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한국 사회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한편, 기술 중심의 비대칭 상쇄전략은 비대칭적 기술 우위를 통해 북한의 전략무기를 무력화하거나 그 효과를 제한하는 전략으로,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전자전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이 두 전략은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동시에 무력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수단이며, 복합적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구는 기술 중심의 비대칭 상쇄 전략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상쇄 전략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립하고, 전략·작전·기술 간의 연계 구조를 체계화하는 분석 틀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특정 전략기술의 무력화가 상대의 전략적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있는 이론 구조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군사전략에 상쇄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례 기반의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이 상쇄 전략의 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전략무기와 군사전략 분석이 폐쇄적 정보환경으로 인해 추론적 성격을 지님을 인정하며, 향후 위성영상·다국적 정보자료·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교차검증(cross-verification)으로 분석의 신뢰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홍민 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

Biddle, Stephen.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Freedman, Lawrence. *Strategy: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Gray, Colin S.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The Military Balance 2023*. London: Routledge, 2023.

Mearsheimer, John J.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Murray, W. and M. Knox, Eds.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NATO. *Allied Joint Doctrine for the Conduct of Operations*. Brussels: NATO Standardization Agency, 2010.

Posen, Barry R.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Rosen, Stephen Peter. *Winning the Next War: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Talmadge, Caitlin. *The Dictator's Army: Battlefield Effectiveness in Authoritarian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0.
- UN Panel of Experts.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627* (2022), S/2023/171, March 7, 2023.
-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DIA). *North Korea Military Power: A Growing Regional and Global Threat*. Washington, D.C.: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21.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Guide: Best Practices for Evaluating the Readiness of Technology for Use in Acquisition Programs and Projects* (GAO-20-48G). Washington, DC: GAO, 2020.
-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Operations, Joint Publication 3-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January 17, 2020.
-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NASA Space Technology Roadmaps and Priorities: Restoring NASA's Technological Edge and Paving the Way for a New Era in Space*.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2.

2. 논문

- 김진무.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능력과 대남 군사전략 변화.” 『주간국방논단』, (2006).
- 김태현. “북한의 ‘독자적’ 군사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군사』, (2022).
- 김태현. “북한 김정은의 기회주의적 군사전략.” 『국가전략』, (2024).
- 류인석.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전략

연구』, (2025).

이강경 · 설현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2024).

이동찬.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연구.” 『통일전략』, (2022).

이흥석. “역사적 맥락을 적용한 북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2020).

Biddle, Stephen and Ivan Oelrich.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 no. 1, (2016).

Lykke, Arthur F. “Defining Military Strategy.” In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edited by Arthur F. Lykke, Jr., 3-8.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1989.

3. 기타

홍민.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23-36(2023. 12. 20).

홍민. “북한의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23-40(2023. 12. 20).

Bennett, Bruce W. “Did North Korea Really Test a Hypersonic Missile?.” RAND Commentary(April 9, 2024).

Bennett, Bruce W. “Why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Capabilities Remain Limited.” RAND Commentary(April 2024).

CSIS. “Missile Threat: Hypersonic Threats.” Washington, DC: CSIS. Accessed July 4, 2025.

CSIS. “Missile Threat: Missiles for HALE UAVs.” CSIS(Accessed July

4, 2025).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Hypersonic Weapons: North Korea.”
CSIS(November 2023).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Claims and Capabilities.” CSIS(April 15, 2024).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and Capabilities.” CSIS(March 2024).

Van Diepen, Vann H.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38 North(November 28, 2023).

Van Diepen, Vann H. “North Korea Tests New Solid ICBM Probably
Intended for MIRVs.” 38 North(November 5, 2024).

Van Diepen, Vann H. “North Korea’s Nuclear-Powered Missile
Submarine: A Mystery Wrapped Around a Riddle and an
Enigma.” 38 North(March 21, 2025).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April 2023).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 Technology and Military Strategy: A Co-constitutive Approach

Jang Jaekyu (Yeungnam University)

North Korea's Five-Year Plan for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2021–2025) signals a structural shift in its military strategy through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strategic weapons such as ICBMs, hypersonic glide vehicle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reconnaissance satellites. This study analyzes how these developments shape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by theorizing the co-constitutiv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maturity and strategic choice. To this end, it establishes a multi-stage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technology, operational functions, military capabilities, strategic effects, and military strategy. Applying this framework, the study identifies both the target and current technological levels of six key strategic weapon systems and derives the corresponding military strategies for each level. The analysis finds that if North Korea achieves its target technological levels, it would be capable of pursuing a dual-track strategy combining credible nuclear retali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limited nuclear operations against South Korea, ultimately aimed at securing regime stability in peacetime and enabling a force-based reordering of the Korean Peninsula in wartime. In

contrast, under current technological limitations,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is likely to be constrained to symbolic retaliatory capabilities toward the U.S. and credible strike options against the South, with corresponding strategic goals of preserving regime security and shaping favorable conditions for negotiation. Policy-wise,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outh Korea to pursue a dual approach: reinforcing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U.S.-ROK alliance, and advancing a technology-driven asymmetric offset strategy. Theoretically, the study contributes by offering a structured framework for inferring the military strategies of closed states based on the maturity of their strategic weapons programs.

Keywords: North Korea, Strategic Weapon Systems, Military Strategy,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Technology-Strategy Linkage, Co-constitutive Approach

투고일: 2025.07.07. 심사일: 2025.08.25. 게재확정일: 2025.09.05.

김정은 시대 심야 열병식에서 나타난 북한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연출과 전략적 모호성

박정수* (고려대학교)

장석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북한 심야열병식의 연출구조: 사회적 퍼포먼스로서의
구조적 분석
4. 전략적 수용을 위한 이중 퍼포먼스: 대내외 이중
‘관객(audiences)’ 구조와 전략적 모호성 설계
5.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심야 열병식’의 정치적·군사적 함의를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의 문화실천이론에서 제시된 ‘사회적 퍼포먼스’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열병식을 군사력 과시나 정권 선전 도구로 국한해온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심야 열병식이 퍼포먼스의 연극적 구조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을 보완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연출하는 이중적 장치임을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알렉산더의 퍼포먼스 구성요소—배경 상징, 각본, 행위자, 관객, 상징 생산 수단, 무대 연출—의 작동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심야’라는 비일상성과 조명, 장면 통제를 활용한 연출은 김정은의 신격화와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며, 무기 공개 방식은 전략적 모호성을 제도화한다. 본 연구는 심야 열병식을 대내적 정당성 연출과 대외적 억지력 강화를 통합하는 독자적 군사 퍼포먼스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북한 열병식을 단순한 군사 이벤트가 아닌 상징적 통치 전략으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열병식의 시간성, 상징성, 전략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틀을 제공하고, 북한 정권의 연출 전략과 향후 정책 대응에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주제어 | 북한, 권위주의, 열병식, 정당성, 전략적 모호성, 사회적 퍼포먼스

1. 서론

북한에서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적 행사를 넘어 정치적 상징 행위로 오랜 시간 기능해 왔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신격화와 정권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과시하고, 대내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통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기존 주간 열병식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심야열병식’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였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점으로 실시된 이 심야열병식은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조명, 군사 퍼레이드 연출 방식, 무기체계의 등장 순서 및 노출 강도를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열병식을 선보였다. 특히 고도로 통제된 연출 아래 치밀하게 기획된 전략 무기 체계의 노출 강도와 더욱 상징화된 방식으로 연출된 최고지도자의 등장은 기존 열병식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상징성과 전략적 효과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간대 변경이나 연출의 형식적 차별성에 그치지 않는다. ‘심야’라는 시간성은 통치 권위의 초월성과 통제성을 상징하는 상징적 시간 구조로 기능하며, 이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를 넘어서서 통치 체제가 원하는 감정의 구조를 조직하고, 수용자의 해석을 조율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어둠 속에서 조직된 질서, 조명에 의해 강조되는 지도자의 이미지, 신형 무기체계의 등장 방식은 모두 감각적 통제와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는 연출적 전략의 일부이다. 또한, 심야 시간대는 정보의 차단과 통제, 불확실성의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즉 심야 열병식은 단순한 시간적 선택이 아니라, 북한 권위주의 체제가 설계한 정치적 연출의 핵심 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2020년 처음 개최된 심야 열병식이 반복적이

* 제1저자

** 교신저자

고 제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상의 실험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심야열병식이 단순한 군사적 과시나 대내외적 선전을 넘어 정권의 정치 전략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치적 퍼포먼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열병식이라는 반복된 의례적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시간성과 연출 전략에서 새로운 변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상징 정치의 강화된 변형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군사력 과시, 대외 선전, 국내 정치 결속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구체적으로 서유석(2012)은 열병식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며, 체제의식 고양과 군사력 과시를 그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였다.¹⁾ 노재범(2025) 또한 김정일 시대 이후 열병식의 형식 변화에 주목했으나, 이 역시 반복적 통치 관행의 연장선에서 해석되었다.²⁾ 한편 송치만·조은진(2015)은 열병식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호학적·담화적 접근을 시도해 북한 열병식이 일종의 집단적 몸짓의 기호체계임을 입증하였으며,³⁾ 김승래(2023) 또한 담화적 접근을 시도하며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문에 나타난 담화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정권의 상징적 위계질서를 포착한 바 있다.⁴⁾ 열병식이 군사적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분석에 집중하여 열병식을 북한의 군사력 과시 수단으로 해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신종우(2020), 이무현(2022), 양욱(2023), 장양규(2024) 등이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기체계에 주목하여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였다.⁵⁾ 그

1) 서유석, “북한 열병식 개최의 역사와 성격변화,” 『국방연구』 제55권 2호, (2012), pp. 77-101.

2) 노재범·김용현, “김정일시대 ‘우리식 열병식’의 형성과 변천: 정치·군사·이념적 의미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제81권 2호, (2025), pp. 239-268.

3) 송치만·조은진, “북한의 집단적 몸짓 기호의 의미작용 연구,” 『통일인문학』 제62집, (2015), pp. 171-206.

4) 김승래, “김정은 정치 담화에 대한 비판적 담화 연구: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23).

5) 신종우, “환골탈태 북한군 열병식.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나?: 노동당 창건

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주간열병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반복된 심야열병식이라는 형식적 전환의 정치·전략적 함의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 심야열병식의 등장과 그 형식적 특징에 주목한 바 있다. 홍민(2020, 2022), 고재홍(2021), 김보미(2021)는 열병식이 야간에 개최된 배경과 ‘심야’ 시간대에서 극대화할 수 있던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며 일정 부분 새로운 형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였다.⁶⁾ 그러나 이들 분석은 대체로 현상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심야’라는 비일상적 시간대 선택이 지니는 상징성과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에는 장석준·윤희수(2025)가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심야열병식의 감정 정치 효과와 전략적 기만 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 역시 사례 기술적 접근에 머물러 이론적 확장성과 개념 정교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⁷⁾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열병식의 형식 변화, 특히 ‘심야’라는 비일상적 시간대에 개최 및 연출된 열병식이 북한 체제에서 수행하는 복합적 기능을 이론적으로 구명(究明)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심야열병식을 단순한 군사적 이벤트가 아닌 고도로 연출된 정치적 퍼포먼스로 규정하고, 그 속에 담긴 상징적·전략적 함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열

75주년 열병식 공개자료 분석,” 『국방과 기술』 제502호, (2020), pp. 136-143; 이무현, “북한 열병식 무기 공개의 특징과 의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양욱, “2023년 북한 열병식, ICBM 말고는 보여줄 게 없었다,” 『이코노미 조선』 제482호 (2023), pp. 1-4; 장양규,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 변화와 확대 의도,” 『국방정책연구』 제40권 1호 (2024), pp. 35-72.

6) 홍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0-26 (2020), pp. 1-8; 홍민,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11 (2022), pp. 1-10; 고재홍,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열병식의 특징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ssue Brief」 제110호 (2021), pp. 1-14; 김보미,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 조용한 자축의 의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ssue Brief」 제287호 (2021), pp. 1-4.

7) 장석준·윤희수, “김정은시대 심야열병식의 정치·군사적 의도와 특징,” 『북한학연구』 제21권 1호 (2025), pp. 85-130.

병식이 하나의 연극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의 문화실천이론(Cultural Pragmatics)에서 제시한 사회적 퍼포먼스(social performance) 개념을 이론적 분석틀로 채택하여 심야열병식이 수행하는 상징 정치의 구조를 분석한다. 열병식의 배경 상징(background representation), 각본(script), 행위자(actors), 관객(audiences), 상징 생산 수단(means of symbolic production), 무대 연출(mise-en-scène) 등 공연 구성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여 북한 권위주의 체제가 심야열병식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체제 정당성을,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열병식을 단순한 선전이나 군사행위로 축소해온 기존 해석을 넘어, 북한 정치의 연출성과 전략성을 포착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가.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열병식

권위주의 체제는 제도적 경쟁과 권력의 행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구조적으로 결여된 통치 체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은 정당성의 기반을 제도적 절차나 다수의 동의에서 추구하기보다 상징적 통치와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 구축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⁸⁾ 그 중에서도 열병식은 권위주의 정권이 가장 선호하는 통치 장치 중 하나로, 단순한 군사력 과시를 넘어 정권의 정당성과 지도자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집합적 의례로 기능해 왔다. 열병식은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질서 정연

8) Edelman, M. J.,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Kertzer, David I., *Ritual, Politics, and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Wedeen, Lisa, *Ambiguities of Domination: Politics, Rhetoric, and Symbols in Contemporary Syr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하게 작동하는지 실물로 보여주는 무대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정권은 군과 민(民), 국내와 국외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권위의 상연(performance of authority)을 실연한다.

열병식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갖는 의미는 다층적이다. 첫째, 열병식은 군사 역량의 과시를 통해 억지력(deterrence)을 상징적으로 시현하는 수단이다.⁹⁾ 무기체계의 종류, 행진에 참여하는 부대의 편성, 행사의 시기와 장소 등은 모두 정권이 외부 세계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를 구성한다. 둘째, 열병식은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위상과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시각화하는 통치 퍼포먼스이다.¹⁰⁾ 관제된 군중의 환호, 지도자의 연설, 군대의 일률적이고 정렬된 행진 등은 통치자가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자라는 인식을 유도한다. 셋째, 열병식은 정권 정당성의 내면화를 촉진하고 상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¹¹⁾ 이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시위 및 쿠데타를 억제하는 정치적 장치로도 기능할 수

-
- 9) Joshi, Manoj, "China's Military Came Out on Parade But the Real Action Will Be in the Se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September 4, 2015, <https://www.orfonline.org/research/chinas-military-came-out-on-parade-but-the-real-action-will-be-in-the-sea>(accessed: June 30, 2025)
- 10) Tian, Xinl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 Reports—Based on the Guardian News Report of China's Military Parade to Mark the 70 Years of Second World War,"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Vol. 8, No. 4(Spring 2018), pp. 433–444; Alkatiri, Zeffry and De Archellie, Reynaldo, "National Patriotic Day Parade: The Politics of Historical Memory and Reconstruction of the Russian Identity During Putin Era," *Cogent Arts & Humanities* Vol. 8, No. 1(October, 2021), pp. 1–16; 물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열병식이 개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기념이나 군 홍보를 넘어, 특정 맥락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위상 강화와 통치 정당성의 시각화를 동반하는 '통치 퍼포먼스'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열병식이 권위주의적 연출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2025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육군 창설 250주년 퍼레이드는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과 결합되어 권위주의적 이미지 연출이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례다. Kamarck, Elaine and Muchnick, Jordan, "Army parade fuels debate over power, politics, and pride," *Brookings*, June 12, 2025,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rmy-parade-fuels-debate-over-power-politics-and-pride/>(accessed: June 26, 2025).
- 11) Liu, Yiben and Zhou, Shuhua, "Evolving Chinese Nationalism: Using the 2015 Military Parade as a Case," *East Asia* Vol 36, No. 3(June, 2019), pp. 255–270; Pörzgen, Yvonne, "Parades in Russian Memory Culture," in *the Memory of the Second World War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Oxford: Routledge, 2021), pp. 229–246; Kuever, Erika, "Performance, Spectacle, and Visual Poetry in the Sixtieth Anniversary National Day Para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udies in Ethnicity and Nationalism* Vol. 12, No. 1(April, 2012), pp. 6–18.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열병식은 이렇듯 군사력, 지도력, 사회통합의 세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는 복합적 장치이며, 반복성과 의례성에 기반한 통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병식의 기능은 상징 정치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에델만(Murray J. Edelman)과 커처(David I. Kertzer)는 정치권력이 언어와 이미지, 열병식과 같은 세레모니(ceremony), 그리고 슬로건 등의 정치적 반복 행위를 통해 구성되며 이러한 상징적 실천은 권위의 정당화와 통치 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러한 측면에서 열병식은 권위주의 통치에서 정치적 의미가 체화되는 시각적 장치이자 정당성을 반복 생산하는 사회적 기술인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실천의 전형적 사례는 20세기 권위주의 정권들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나치 독일의 뉘른베르크 당대회와 반복적으로 개최된 대규모 열병식은 전체주의 국가가 정치적 행사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 공동체의 신화를 생산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히틀러는 대규모 군대 행진의 중심에서 신적 존재로 연출되었으며, 이는 리펜슈탈(Riefenstahl)이 제작한 영화 ‘의지의 승리(Triumph des Willens)’를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되었다. 열병식은 나치 체제의 질서, 기술, 권위, 민족주의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대표적 의례였던 것이다.

중국의 국경절 열병식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부터 정권의 안정과 인민해방군의 충성을 상징적으로 반복하는 주요 의례였다.¹³⁾ 중국에서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지도자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의례 공간이었으며, 대중의 참여를 통해 집단주의와 애국주의를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시대 들어서도 이러한 열병식의 전통은 더욱 정교하게 재현되고 있다.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

12) Edelman, M. J, 1985, 참조; Kertzer, David I, 1988, 참조.

13) Brady, A. M, *Marketing Dictatorship: Propaganda and Thought Work in Contemporary China*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2008)

식에서는 첨단 무기의 공개, 군중 편성, 미디어 편집 방식이 체계적으로 기획되어 중국의 부상과 당의 통제력을 내외부에 과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동평(DF)-17, 스텔스 정찰드론 우전(WZ)-8, 초대형 무인잠수정 HSU-008 등 최첨단 무기체계의 공개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로서 열병식이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현대 러시아 역시 열병식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의 승전서사를 국가 정체성 재구축에 활용하며, 특히 소련의 ‘대조국전쟁 승리’에 대한 기억은 현대 러시아에서 민족정체성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승절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적 과시를 넘어 ‘구소련의 영광을 계승하는 주체로서의 러시아 국가’라는 상징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¹⁵⁾ 2020년 이후 러시아는 2021년과 2022년 전승절 77주년을 기념하여 열병식을 개최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인 2024년 전승절 79주년과 2025년 전승절 80주년에도 기념 열병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 러시아의 중요 정치·사회적 행사가 개최되는 붉은 광장(Red Square)에서 열린 2025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소련의 승리 상징인 제150소총사단 깃발이 먼저 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력 1만 1000명과 최첨단 핵심 무기체계가 등장하였다.¹⁶⁾ 즉 러시아에서 열병식은 국가적 기억의 의례적 재현으로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상징적 연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권위주의 체제에서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행사를 넘어 복합적인 정치적 장치이자 정당성 생산 기제 및 대외 전략 메시지 전달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심야열병식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14) 장석준·윤희수, “김정은시대 심야열병식의 정치·군사적 의도와 특징,” p. 92.

15) Marples, D. R., *Heros and Villains: Creating National History in Contemporary Ukraine*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7); Laurelle, M.,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London: Routledge, 2009).

16) 제150소총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4월 30일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의 제국 의회 건물(Reichstag)의 꼭대기에 낮과 망치가 그려진 붉은 깃발을 게양한 부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붉은 군대)의 승전을 상징하는 정치·군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류한수,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붉은 군대 전투 역량의 실상과 허상,” 『슬라브연구』 제33권 3호 (2017), p. 32.

있다. 북한의 열병식은 김일성 시대부터 수령 중심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이후 김정일 시기부터는 강성대국의 완성을 시각적으로 재현해온 정권의 중요한 통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심야’라는 시간성과 첨단 무기 노출 방식 및 조명, 미디어 편집이 결합된 고도화된 정치적 퍼포먼스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앞서 논의한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열병식이 수행하는 통치적 기능의 ‘강화된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권위주의 퍼포먼스 정치의 정점을 구성하는 것이다.

나. 문화실천이론(Cultural Pragmatics)과 사회적 퍼포먼스 (Social performance)

권위주의 정권에서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행사 이상의 정치적 의례(ritual)로 기능한다. 특히, 북한에서의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를 넘어 정치적 정당성,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 체제의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의례적 형식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사회적 행위가 하나의 연극적인 퍼포먼스로 수행된다는 관점에서 정치 행위의 형식성과 상징성을 조명한 알렉산더의 문화실천이론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북한사회에서는 정치 행위가 자발적 감응이 아니라 고도의 연출을 통해 수용자의 ‘진정성’을 획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극적 요소들의 재융합(refusion)이 퍼포먼스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¹⁷⁾

알렉산더는 사회적 퍼포먼스를 여섯 가지 구성요소로 분석한다. 첫째, 배경 상징(Background Representation)은 행위자가 소환하는 역사적·민족적 신화나 사회 정체성의 토대로서, 퍼포먼스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¹⁸⁾ 둘째, 각본(Script)은 연설, 행동, 이미지, 상징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메시지 구조로,

17) Alexander, J. C, “Cultural pragmatics: Social Performance Between Ritual and Strategy,” *Sociological Theory* Vol. 22, No. 4 (2004), pp. 527-573.

18) Alexander, J. C, 2004.

행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를 설계하는 것이다. 셋째, 행위자(Actors)는 단순한 연극의 배우가 아닌, 퍼포먼스의 수용자(관객)의 감정적 동일화를 유도해야 하는 카리스마적 존재로 등장하며, 실제 인물이 ‘역할’에 몰입하는 연극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넷째, 관객(Audiences)은 퍼포먼스의 수용자이며, 이들의 반응이 곧 정치적 퍼포먼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다섯째, 상징 생산 수단(Means of Symbolic Production)은 조명, 음악, 의상, 공간 배치 등 기술적 장치를 포함하며, 퍼포먼스의 감각적·미학적 효과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무대 연출(Mise-en-scène)은 앞선 모든 요소들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조율하는 종합적 연출로서, 퍼포먼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수용되게 만든다.

본래 전근대 사회에서 융합된 형태로 작동했던 여섯 가지 요소는 현대사회에서는 분화된 상태에서 다시 전략적으로 재융합(refusion) 되어야만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권위와 퍼포먼스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은 이러한 재융합의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퍼포먼스가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정교함과 함께 관객이 그를 진실처럼 느끼는 심리적 동일화(psychological identification)를 유도해야 한다. 알렉산더는 사회적 퍼포먼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미학적 진실성(aesthetic verisimilitude)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출된 상징체계가 현실의 사실성과는 무관하게 관객에게 감정적 설득력과 상징적 일관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 지도자는 특정 서사(script)와 배경 상징 속에서 자신을 ‘구원자’ 혹은 ‘영웅’ 같은 역할로 재현하며, 이와 같은 연출과 감정적 공명은 퍼포먼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하지만 퍼포먼스는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관객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계층적이고 이질적인 해석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상징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조건화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퍼포먼스도 일부에게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일부는 그것을 선전이나 허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불확실성은 퍼포먼스를 설득력있게 만들기 위한 연출적

요소들, 즉, ‘감정의 극대화’, ‘반복 노출’, ‘집단 동원’ 등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며, 정서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전략이 병행되기도 한다.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은 근본적으로 복잡하고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퍼포먼스의 성공이란 상징적 요소들 간의 ‘재융합(re-fusion)’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배경 상징, 각본, 행위자, 관객, 상징 생산 수단, 무대라는 구성요소들이 분리(de-fusion)된 상태에서 시작된 퍼포먼스가, 다시 하나의 통합된 감정적 경험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성과 설득력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전제는 대체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해석 공동체, 즉 민주주의적 공론장이 존재하는 사회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권위주의 체제에의 직접적 적용에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해석 공동체의 자율성과 표현의 다양성이 제약받는 동시에, 연출이 일방향적이고 위계적으로 설계된다. 관객은 행위자와 상호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기보다는, 사전에 연출된 상징 질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위치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사회적 퍼포먼스의 핵심 요소들 간의 자연스러운 융합보다는,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재배열’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진정성(authenticity)의 조건이 변형된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 구조 속에서도 권위주의 정권은 여전히 감정적 몰입과 체제 정당성의 시각화를 위해 고도로 연출된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실천이론의 핵심인 퍼포먼스 구성 요소 간의 통합 가능성은 여전히 분석적 효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심야 열병식 사례는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이 지닌 적용 범위와 이론적 한계를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단서를 제공한다. 기존 이론이 하나의 통합된 해석 공동체를 중심으로 퍼포먼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했다면, 북한의 열병식은 대내 관객과 대외 관객이라는 서로 다른 해석 공동체를 전제로 복합적 메시지를 기획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등장, 집단적 환호, 감정의 고조, 신비화된 조명 연출을 통해 강력한 감정적 융합을 추구하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야간이라는 불확정적 시간

대, 제한된 정보 공개, 무기체계의 선별적 노출 등을 통해 전략적 모호성과 긴장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설계한다. 이는 단일한 상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층위를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퍼포먼스의 성공 조건을 ‘관객별 상이한 효과’라는 다층적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데 이른다.

이처럼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사회적 퍼포먼스의 성공이 반드시 전체 관객의 감정적 융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화된 관객 구조 내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의미가 구성되고 수용되는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실천이론은 북한 사례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의 특수한 퍼포먼스 조건을 포착하며, 동시에 기존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제시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퍼포먼스의 성공은 통합적 감정 형성이 아닌, 전략적 연출을 통한 이질적 해석 공동체에 대한 차별적 효과 유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경험적 외연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3. 북한 심야열병식의 연출구조: 사회적 퍼포먼스로서의 구조적 분석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심야 열병식은 단순한 무기 과시나 군사 의례를 넘어서, 권위주의 통치의 연극적 본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퍼포먼스로 기능한다. 특히 야간이라는 비일상적 시간대를 적극 활용한 연출 방식은 열병식을 연극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며, 정권의 권위와 무력 과시를 상징적으로 통합하는 시각적 장치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알렉산더의 문화실천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북한의 심야열병식이 정치적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즉 어떻게 ‘설계된 퍼포먼스’로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알렉산더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퍼포먼스가 단순한 의례나 상징 기호의 반복이 아닌, 다층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성된 의미 생산의 실천이라고 주장한다.¹⁹⁾ 그는 효과적인 퍼포먼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경 상징, 각본, 행위자, 관객, 상징 생산 수단, 무대 연출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가 전략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들이 ‘진정성’을 확보할 때 관객의 감정적 동일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심야 열병식은 단순한 시간대의 변주가 아니라 주간 열병식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독창적 성격을 갖는다. 심야라는 비일상적 시간성은 퍼포먼스에 대한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감정적 융합을 촉진하는 전략적 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행사라기보다, 사회적 퍼포먼스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배경 상징, 각본, 행위자, 관객, 상징 생산 수단, 무대 연출)이 고도로 조직된 형태로 작동하는 사례로서, 단순한 군사적 행사 이상의 통치 전략이 투사된 상징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배경 상징’의 측면에서 열병식은 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적인 상징적 유형들을 통해 북한은 대중들로 하여금 최고지도자의 정치권력을 신성화하고 미화하는 비합리적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는 것이다.²⁰⁾ 이에 따라 열병식은 대체로 북한 정권 수립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월 25일), 건군절(2월 8일), 그리고 전승절(7월 27일)에 개최되는데, 이들은 체제 수립의 정통성과 외세에 대한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신화적 기원을 환기시키는 ‘정치적 기념일’로, 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재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장소 역시 김일성광장과 금수산태양궁전처럼 정권의 상징

19) Alexander, J. C, 2004.

20)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은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미란다(Miranda, 찬미)’를 비합리적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는 뛰어난 정치기술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그 방식으로 정치집단의 ▲ 각종 기념일, ▲ 공공장소와 기념물, ▲ 권력을 찬미하는 음악, ▲ 통일성을 갖게 하는 것발·훈장·조각, ▲ 일화·역사의 미화나 왜곡, ▲ 집단적 의례, 군중 시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Charles E. Merriam, *Political Power* (New York: Colier Book, 1964), pp. 110-111; 김종원,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pp. 17-18.

이 응축된 장소에서 개최되며, 공간적 구성 또한 권위의 시각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설정은 열병식을 단순한 행사가 아닌,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권위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무대로 전환시킨다. 특히 ‘심야’라는 시간대는 일상의 리듬과 분리된 이질적 시간성을 제공함으로써, 통치 권위가 일상으로부터 초월된 질서를 대표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어둠 속에서 통제되고 배열된 광장, 조명, 군대의 일률적이고 통합적인 행진은 질서와 통제, 신비와 절대성을 동시에 시현하는 감각적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구성된 ‘각본’은 감정의 흐름을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적 서사를 구조화함으로써 퍼포먼스의 진정성과 감정적 융합을 동시에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퍼포먼스는 전형적인 감정곡선인 ① 긴장(tension)의 축적 → ② 고조(intensification) → ③ 절정(climax) → ④ 전환(release) → ⑤ 정체성 재확인(identity reaffirmation)에 따라 구성된다.²¹⁾ 이 감정곡선 속에서 구호(Slogan)는 중요한 연출 장치로 작동한다. 집단적으로 외쳐지는 구호는 긴장과 고조 단계에서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절정의 순간에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도록 설계된다. 일례로, 이전의 심야 열병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최강의 군력, 자주, 위대한 당’(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심야열병식, 2020.10.10.),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건군절 75주년 심야열병식, 2023.2.8.), ‘김정은 결사옹위! 백두혈통 결사보위!’(건군절 75주년 심야열병식, 2023.2.8.)와 같은 구호들이 반복적으로 동원되었다.²²⁾ 이러한 구호는 자발적 반응이라기보다 정권이 사전에 각본화한

21) 여기서 감정곡선 구조는 Alexander(2004)의 융합 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분석 도식으로, 연극학과 정치사회학의 기존 이론들에서 제시된 감정 전개 단계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Schechner(2006)는 공연의 감정적 긴장과 해소 구조를 강조하였으며, Goodwin et al.(2001)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감정의 전환 지점이 집합행동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Schechner, R,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06); Goodwin et al., *Passionate Politics: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22) 김아진, “리설주는 자고 있었나…새벽 열병식 불참, 9개월째 안 보인다,” 『조선일보』, 2020년 10월 11일,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11/OCMZWXKU3BFP7E37>

상징적 장치로, 심야라는 비일상적 시간성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한 집단적 몰입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창출한다. 심야라는 휴식의 시간대에 동원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장면은 일상의 리듬을 중단시키며, 통치 권위를 초월적 질서로 각인시킨다. 이때 구호는 환호와 무기 행진과 결합해 정서적 몰입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호와 환호, 무기 행진이 맞물려 하나의 정서적 곡선을 형성하는 과정은 심야 열병식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심야열병식은 암전 속 정적에서 시작하여 불꽃놀이, 김정은의 등장, 지도자 연설, 무기체계의 공개, 그리고 군중의 환호로 이어지는 정서적 호흡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장면 전개는 알렉산더가 강조하는 감정적 융합(fusion)의 조건 중 하나인 ‘서사의 일관성’과 감정의 융합을 충실히 구현한다. 즉, 김정은의 등장은 단순한 지도자의 출현이 아니라, 극적으로 고조된 감정의 절정에서 구현되는 영웅적 인물로의 연기이며, 무기 공개는 이후 이어지는 정서적 이완과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국가적 담론 완성을 시각화하여 감정의 전환을 유도하는 서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각본은 감정의 조직 구조를 통해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감각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전략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연출된 감정 흐름은 퍼포먼스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 구성 역시 열병식 퍼포먼스의 중심적 요소이다. 열병식의 핵심 행위자인 김정은은 군 통수권자, 인민의 수령 등 다양한 정치적 역할을 집약적으로 수행한다. 김정은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고, 열병식 초반에 연설자로서 권위적 언어를 구사하며, 동시에 감정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등의 장면을 통해 일종의 감정적 이중성, 즉 카리스마와 인간성을 연기한다. 사회적 퍼포먼스 개

LH4JPJ3AL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5년 8월 28일); 강국진, “북한 심야 열병식서 신형 ICBM 행렬, 전술핵운용부대 과시,” 『서울신문』, 2023년 2월 9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9500191&wlog_tag3=naver(검색일: 2025년 8월 28일); 김세로, “떠들썩한 열병식 키워드는 ‘백두혈통’?,” 『MBC』, 2023년 2월 11일,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454206_29114.html(검색일: 2025년 8월 28일).

념에 따르면, 행위자는 특정한 사회적 역할에 몰입함으로써 퍼포먼스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며, 역할 수행의 설득력이 곧 퍼포먼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2023년 건군절에서 김정은과 함께 등장한 김주애는 열병식이라는 정치 공간에 ‘백두혈통의 계승’이라는 새로운 상징코드를 삽입함으로써, 김씨 일가의 혈통성과 체제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이는 행위자의 상징화가 단순히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정권과 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집약하는 기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지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상징 구조는 조명, 음향, 색채, 영상 촬영 기법 등 다양한 ‘상징 생산 수단’을 통해 감각적으로 구현된다. 심야열병식의 경우, 어둠 속에서 구현되는 조명은 ‘빛의 통제’라는 상징을 통해 절대 권위의 시각적 표현으로 작동하며, 각 장면에 맞추어 조명의 색상과 강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감정의 흐름을 유도한다. 김정은의 등장 시에는 주로 푸른 계열의 조명을 통해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후 무기 공개와 군대의 행진 등 본격적인 행사 시점에서는 붉은 색과 강한 음향 효과가 결합되어 정서적인 긴장감과 흥분도를 고조시킨다.²⁴⁾ 이러한 감각적 요소들은 퍼포먼스의 감정적 설득력을 높이며, 연출된 장면이 관객에게 ‘사실로 느껴질 수 있는’ 미학적 진실성을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열병식의 영상은 정면 고정 카메라만이 아니라 드론 촬영, 클로즈업, 빠른 전환 등의 편집 기술이 적용되며, 이는 퍼포먼스를 군사적 과시가 아닌 시각적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무대 연출은 공간과 시간의 통제 속에서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하는 총합적 연출 장치로 기능한다. 북한에서 열병식은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 광장, 주석단 등 최고지도자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공간에서 진행된다. 또한, 무기체계의 진입 방향, 군부대 편성, 김정은의 위치, 대외 사절단의 좌석, 군중

23) 이상현, “‘김정은 딸’ 김주애, 건군절 열병식서도 포착… 軍행사 ‘단골,’” 『연합뉴스』, 2023년 2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062200504>(검색일: 2025년 7월 3일); 장슬기, “열병식에도 참석한 김주애, 백두혈통 보위에 핵심적 역할 맡나,” 『데일리NK』, 2023년 2월 10일, <https://www.dailynk.com/20230210-5/?tztc=1>(검색일: 2025년 7월 3일).

24) 장석준·윤희수, “김정은시대 심야열병식의 정치·군사적 의도와 특징,” pp. 107-108

의 배치 등 모든 공간적 요소가 철저히 계산되어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개최된 심야열병식은 일반 대중이 일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최대한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점에서, 수용자로 하여금 감정적 공명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사회적 퍼포먼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징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재조합되어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이와 같은 정서적 서사 구조, 시공간 통제, 감정의 상승·전환·완화 구도를 모두 갖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심야열병식은 사회적 퍼포먼스의 연극적 기반으로 정권의 정당성과 상징적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하는 복합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실천이론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퍼포먼스의 구성 요소들이 고도로 융합되어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는 퍼포먼스의 감정적 효과와 정치적 메시지가 전략적으로 기획된 통치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심야라는 비일상적 시간성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 정치가 감정, 공간, 권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출하고 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권력의 상징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권위주의 체제에서 열병식이 수행해온 통치적 기능의 강화된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전략적 수용을 위한 이중 퍼포먼스: 대내외 이중

‘관객(audiences)’ 구조와 전략적 모호성 설계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상징적 구조와 감정의 연출을 통해 지도자의 권위를 극대화하고, 체제 정당성을 시각화하는 정치적 드라마로 기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퍼포먼스는 단지 연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사회적 퍼포먼스는 단지 상징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그것이 특정한 해석 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의미로 융합

될 때 실현되기 때문이다.²⁵⁾ 즉 퍼포먼스의 수용자인 ‘관객’의 해석구조, 다시 말해 이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따라 성립하거나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때 관객은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집단은 동일한 퍼포먼스를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심야 열병식 사례는 알렉산더가 전제한 사회적 퍼포먼스 개념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퍼포먼스는 성공 여부를 대체로 하나의 내적 공동체, 즉 단일한 ‘사회 내부의 관객’을 전제로 한 융합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관객의 이질성이나 해석의 다양성은 퍼포먼스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내부 관객과 외부 관객이라는 이중적 해석 공동체를 동시에 상정하고 기획된 퍼포먼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대내적 관객에게는 감정적 몰입과 정체성 동원,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비감을 자아내는 연극적 연출이 중심이 되는 반면, 대외적 관객에게는 불확실성 자체가 설계된 퍼포먼스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특히 심야라는 시간성과 조명, 무기 노출 방식 등을 통해 실체를 가리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연출함으로써 해석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퍼포먼스는 ‘해석의 불확실성’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전략적 기획 요소로 전유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문화실천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다중 관객 체계와 전략적 연출의 문제로 확장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전략적 수용을 위한 사회적 퍼포먼스의 수용자인 ‘관객’을 이중 구조로 구분하여 대내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5) Alexander, J. C, 2004, p. 531.

26) Alexander, J. C, 2004, pp. 535-537.

가. 대내적 측면

심야열병식은 북한 정권의 대내적 상징 정치를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대내 관객의 감정적 몰입과 신념의 재확인을 통해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야열병식은 단지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면의 반복이 아니라, 체제의 중심인물인 최고지도자를 신격화하고, 그 권위가 초월적·초인간적 차원에서 자연화 되도록 연출되는 일종의 감정의 무대로 볼 수 있다. 특히 열병식이 심야에 진행된다는 시간적 특수성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주를 가능하게 하며, 대내 관객에게 지도자 권위의 비일상적 신성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어둠 속에서 조명과 음악, 정렬된 군대의 행진, 쉽게 접할 수 없는 무기체계의 공개가 결합되는 연출은 관객의 감각과 감정을 통제하며, 사회적 퍼포먼스가 요구하는 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

대내 관객은 북한의 전체 주민뿐 아니라 인텔리, 군 및 당 간부 등 엘리트로 구성된 권위주의 체제 하의 내부 정치 공동체로 상정된다. 이들에게 심야열병식을 단지 지도자에 대한 찬양이나 체제 과시의 장면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담론의 실현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정권의 정통성과 백두혈통의 혈통성을 내면화하는 감정적 훈육의 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감정적 동일화는 무대 위의 퍼포먼스가 대내 관객에게 ‘진정하게 받아들여졌을 때’만 성공하며, 이는 곧 정치적 효과의 현실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백두혈통인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나란히 등장했는데, 이는 그 상징성을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²⁷⁾ 이어 2023년 정권 수립일(9·9절) 열병식에서도 김주애는 주석단 특별석에서 김정은의 우측에 앉아, 백두혈통의 후계 정당성을 대내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천명하는 인물로 연출되었다. 특히, 이는 ‘백두혈통’의 계승자로서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으

27)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75주년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는 아버지 김정은이 위치한 뒤편 귀빈석에 어머니 리설주와 당 비서들과 함께 자리하였다.

로 퍼포먼스의 감정 구조를 재배치하며, 대내 관객으로 하여금 단지 지도자를 응시하는 것을 넘어 ‘위계와 혈통에 기반한 질서’를 감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열병식 중 눈물을 흘리며 연설하거나, 감정적으로 군중과 ‘공명’하는 장면이다. 이는 강압적 리더십의 형상화를 넘어, ‘부드럽고 인간적인 수령’의 이미지와 ‘초월적 권위’가 동시에 설게되는 장면이다.²⁸⁾ 이러한 연출은 단일한 이미지의 강요가 아닌 복수의 감정 구성을 통해 수용자, 즉 대내 관객의 감정적 내면화 경로를 다양화하며, 사회적 퍼포먼스가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닌 ‘믿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형상을 추종하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정치 방식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침수 피해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김정은의 실지(實地) 모습은 인민에 대한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대중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를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²⁹⁾ 따라서 북한은 ‘진정성’의 감정적 효과를 구성하는 전형적 방식의 하나로 심야열병식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야 열병식은 조명, 음악, 군 동선, 카메라 편집 등의 연출 수단을 통해 정권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장면은 단순한 시각적 연출을 넘어 관객의 감정적 리듬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김정은의 절제된 등장, 군의 행진, 무기 전시, 군중의 환호로 이어지는 흐름은 대내 관객의 감정을 일정한 곡선으로 유도하며, 긴장과 고조, 절정을 거쳐 체제 정당성의 감정적 재확인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감정 곡선은 단지 연출자의 통제가 아닌, 수용자

28) 극장국가에서 “왕은 제작자(겸 주연), 사제는 연출, 백성들은 조연이자 무대보조원, 그리고 관객이었다. 수천수만 명이 동원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기념행사(장례식, 기념식, 순례 등)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자 바로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였다.”라는 점을 비추어보아 북한 역시 최고지도자를 위해 대중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연출을 보여주려는 모습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lifford Geertz,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 15.

29) 정영철, “북한의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2호(2024), p. 132.

의 내부 감정 구조 속으로 정권의 상징을 내면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한다. 즉, 수령에 대한 충성이 단지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닌, 퍼포먼스를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간-시간-감정이 융합되어 형성된 감정적 습관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연출과 수용 구조 속에서 심야열병식은 대내 관객에게 ‘권위’를 외부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체제의 정당성을 감정적으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연극적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강제된 충성이 아니라, 감정적 동일시와 반복된 의례를 통한 내면적 동일화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며, 심야열병식은 이러한 감정의 반복을 체화시키는 중심 무대이다. 김정일의 등장, 김주애의 배치, 그리고 정밀하게 통제된 공간-시간-시청각 연출은 모두 수용자에게 지도자와 체제의 정당성을 감각적으로 ‘사실처럼’ 체험하게 만들며, 이는 곧 정치적 퍼포먼스의 성공 조건이 된다.

나. 대외적 측면

북한의 심야열병식은 단지 대내적 권위의 시각화에 그치지 않고, 외부 세계를 향한 전략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복합적 퍼포먼스로도 기능한다. 그러나 이 퍼포먼스는 대내 관객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외 관객에게 수용되지 않는다. 북한이 상정하는 대외 관객은 국제사회, 특히 정보수집기관, 군사전문가, 동맹국 및 적성국의 정책결정자로 구성된 다층적 해석 공동체이다. 이들에게 열병식은 감정적 몰입이나 정치적 동일화를 유도하는 장면이 아닌, 위협 판단, 억지력 해석, 정책 조율의 기초 정보로 수용되는 상징적 신호 체계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장면 및 연출구조가 대외 관객에게는 대내 관객과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수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이를 전제로, 퍼포먼스를 다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각각의 해석 공동체에 차별적인 정치적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해석 구조를 전제로, 대외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 의도적으로

‘해석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퍼포먼스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심야열병식은 명확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다의적이고 계산 불가능한 위협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출되며, 전략적 억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과장이나 은폐가 아니라, 정보의 단편화, 편집, 그리고 불투명성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해석 주체가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심야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화성-16형 ICBM이다. 화성-16형은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 현존하는 ICBM 중 가장 큰 규모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⁰⁾ 그러나 야간 조명 하에 전시된 형태로 공개되어 실전 배치 여부, 추진 방식, 다탄두 탑재 가능성 등 핵심 기술 요소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³¹⁾ 조명을 통해 미사일의 외형만을 강조했고, 이동 중 핀조명과 연막 효과를 통해 윤곽은 부각하면서도 구조나 메커니즘은 철저히 감춰진 상태로 공개한 것이다. 같은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SLBM인 북극성-4A도 마찬가지로 외형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능력은 역시 은폐된 상태로 남았다. 이와 유사하게 2022년 4월 열병식에서 재등장한 화성-17형도 이전보다 정교화된 외형으로 다시 등장하였으나, 사거리, 다탄두(MIRVs) 가능성, 발사 플랫폼 등은 불분명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연출 방식은 전략무기의 실체보다 ‘위협의 감각’을 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은폐를 넘어, 전략적 인상을 형성하는 수용 구조로 볼 수 있다. 무언가 ‘강력한 것’이 존재한다는 감정적 인상을 조성하되, 그것이 지닌 실질적인 능력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외 관객이 위협에 대한 결론을 이르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위협의 존재 가능성만을 암시하며, 판단의 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30) 홍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 pp. 5-6.

31) “탄두 부분의 모양으로 추정 시 다탄두 탑재형(MIRVs)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나 아직 실험 발사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심야열병식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홍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 p. 6.

연출 기술은 이러한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 드론 카메라 및 사진의 고도 및 각도는 미사일의 하부 구조를 피하고, 영상은 대부분 지연 편집되어 실시간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음향과 조명은 현장의 몰입도를 제어하는 한편, 대외 관객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장면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조명은 특정 부위만 비추고, 연기나 산란된 빛은 세부 식별을 방해한다. 이로써 시각적 명료성을 최소화하고, 존재의 감각은 부각시키되 정보의 단정은 유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연출은 감정적 융합을 통해 진정성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아닌, 감정의 동일화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판단을 유예시키는 전략적 퍼포먼스로 작동한다. 즉 대내 관객에게는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감정의 일체감을 구성하는 장면이었던 심야열병식이, 대외 관객에게는 감정의 융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상태에서 해석의 다양성과 불확실성만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외 관객은 정보의 단편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완결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략적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비융합 상태는 일견 퍼포먼스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외 관객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의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효과의 본질로 기능한다. 감정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역지의 심리적 기반이 마련되며, 북한은 이를 통해 억지력의 전략적 효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대외 관객이 수용하는 것은 메시지의 명확성이나 정당성이 아니라 해석 불가능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 서로 상이한 해석 공동체에 대해 정반대의 감정 효과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감정의 몰입과 충성의 내면화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석의 유예와 인지적 긴장을 통해 전략적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한 사회적 퍼포먼스를 통해 두 개의 상이한 수용구조와 정치적 효과를 병치하려는 고도의 연출 전략이며, 현대 권위주의 체제에서 퍼포먼스가 단일한 관객을 상정하지 않고 다층적 수용 구조에 기반해 기획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등장한 심야열병식의 함의를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열병식을 대체로 군사력 과시나 선전 도구로 국한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심야열병식을 하나의 연극적 장면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대내외 상이한 ‘해석 공동체(audiences)’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심야열병식이 단일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폐쇄적 선전 도구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상징 정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심야열병식은 단지 시간대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심야’라는 비일상적 시간성은 통치 권위의 초월성과 비가시성을 상징하며, 감정의 몰입과 수용자의 해석 구조를 조율하는 정교한 연출 장치로 작동한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과 백두 혈통의 상징화, 감정 곡선을 따라 배치된 각본, 조명과 음악 등의 상징 생산 수단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지도자의 신비성을 강화한다. 특히, 김주애의 등장과 같은 연출은 단지 개인의 노출이 아니라, 체제의 영속성과 혈통 정당성을 내면화시키는 의례적 장면으로 기능하며, 감정의 융합을 극대화시키는 정서적 설계의 일환이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동일한 퍼포먼스가 정반대의 효과를 노린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해석 공동체로 상징하되, 감정적 융합이 아닌 ‘해석의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설계한다. 화성-16형, 화성-17형 ICBM, 북극성-4A 등 주요 무기체계는 심야 조명과 연출을 통해 실질적 능력은 가리되 잠재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고, 이는 전략적 억지력의 상징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진정성의 감정적 효과가 대외 관객에게는 의도적으로 차단된 상태, 즉 탈융합(de-fusion)의 전략적 설계로 전환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감정의 동일화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감정의 일체화 자체를 기획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퍼포먼스의 실패가 아닌, 이질적 수용 공동체를 전제로 한 병치된 효과를 전략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상징 정치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화실천이론의 사회적 퍼포먼스 개념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내적 공동체에서 융합이 이뤄질 때 퍼포먼스의 성공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사례는 퍼포먼스가 동일한 연출 구조를 가지고도 관객이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감정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외 관객을 향해 판단을 지연시키는 설계는 퍼포먼스의 탈융합 상태 자체를 효과로 전유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사회적 퍼포먼스의 성공은 반드시 관객으로 하여금 ‘진정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분화 구조에 따른 전략적 설계로도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한 문화실천이론이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도 유효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권위주의 체제에서 관객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강제된 수용자일 수 있으며, 진정성은 연출된 감정 구조에 의해 보다 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퍼포먼스의 연출 구조와 수용 구조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북한의 사례는 분석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퍼포먼스의 관객이 ‘사회 내부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대외 공동체’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실천이론의 경험적 적용범위를 확장하며, 사회적 퍼포먼스의 개념의 외연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중 관객 구조’와 대내외 관객 ‘감정의 병치 설계’는 향후 퍼포먼스 정치를 연구하는 데 있어 새로운 주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문화실천이론의 사회적 퍼포먼스 개념이 자발적 민주주의 공동체를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데 반해, 권위주의 체제는 퍼포먼스를 통해 상이한 감정 효과와 정치 효과를 동시에 연출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 정치 이론(Emotional Politics)과의 결합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치적 실천의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이론적 기여를 지닌다. 북한의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닌, 정권의 정당성과 억지 전략이 동시에 구현되는

통치 장면이다. 이러한 복합적 연출은 향후 북한의 통치 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어 퍼포먼스 정치의 관점이 중요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열병식이 갖는 시간성, 조명 연출, 무기 노출 방식, 관객의 감정 구조 설계 등은 북한의 통치 전략이 단순한 상징의 반복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연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군사적 행태를 이해함에 있어, 이론적·실천적 관점을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김정은 시대의 심야열병식은 권위주의 퍼포먼스 정치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계되고 연출되는지 보여주는 집약적 사례이다. 이는 통치 정당성과 전략적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병치하는 장면이며, 대내외 관객의 수용 구조를 설계한 복합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심야열병식에 대한 분석은 단지 무기의 성능이나 메시지의 명확성에 그치지 않고, 감정, 상징 전략의 통합 구조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적 퍼포먼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포착하는 데 기여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종원. 『죽은 자를 통한 북한 체제 정통성 확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대상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Alexander, Jeffrey C., Bernhard Giesen, and Jason L. Mast. *Social Performance: Symbolic Action, Cultural Pragmatics, and Ritu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Brady, Anne-Marie. *Marketing Dictatorship: Propaganda and Thought Work in Contemporary China*. Asia/Pacific/Perspectiv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8.

Charles E. Merriam. *Political Power*. New York: Colier Book, 1964.

Edelman, Murray Jacob.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Geertz, Clifford.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Goodwin, Jeff, James M. Jasper, and Francesca Polletta. *Passionate Politics: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Kertzer, David I. *Ritual, Politics, and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Laruelle, Marlene.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Oxon: Routledge, 2009.

- Marples, David R. *Heroes and Villains: Creating National History in Contemporary Ukraine*.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7.
- Saxonberg, Steven.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Schechner, Richard.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06.
- Wedeen, Lisa. *Ambiguities of Domination: Politics, Rhetoric, and Symbols in Contemporary Syr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 Hoffmann, David L., ed. *The Memory of the Second World War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UK: Taylor & Francis.

2. 논문

- 강태호. “다큐멘터리와 정치선전: 리펜슈탈의 〈의지의 승리〉.” 『독어교육』, 제 52 집 (2011), pp. 235-262.
- 김승래. “김정은 정치 담화에 대한 비판적 담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3).
- 노재범 · 김용현. “김정일시대 ‘우리식 열병식’의 형성과 변천: 정치 · 군사 · 이념적 의미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제 81 권, 2 호 (2025), pp. 239-268.
- 류한수. “제 2 차 세계대전 시기 붉은 군대 전투 역량의 실상과 허상.” 『슬라브 연구』, 제 33 권, 3 호 (2017), pp. 31-61.
- 서유석. “북한 열병식 개최의 역사와 성격변화.” 『국방연구』, 제 55 권, 2 호 (2012), pp. 77-101.

- 송희영. “히틀러의 연설. 영광과 도취의 도가니.” 『카프카연구』, 제 37 집 (2017), pp. 147-166.
- 송치만, 조은진. “북한의 집단적 몸짓 기호의 의미작용 연구.” 『통일인문학』, 제 62 집 (2015), pp. 171-206.
- 신종우. “환골탈태 북한군 열병식.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자료 분석.” 『국방과 기술』, 제 502 호, (2020), pp. 136-143.
-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무현. “북한 열병식 무기 공개의 특징과 의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장양규.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 변화와 확대 의도.” 『국방정책연구』, 제 40 권, 1 호 (2024), pp. 35-72.
- 장석준 · 윤희수. “김정은시대 심야열병식의 정치 · 군사적 의도와 특징.” 『북한학연구』, 제 21 권, 1 호 (2025), pp. 85-130.
- 정영철. “북한의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 40 권, 제 2 호 (2024), pp. 117-144.
- Alexander, Jeffrey C. “Cultural Pragmatics: Social Performance Between Ritual and Strategy.” *Sociological Theory*. Vol. 22, No. 4 (2004), pp. 527-573.
- Alkatiri, Zeffry and De Archellie, Reynaldo. “National Patriotic Day Parade: The Politics of Historical Memory and Reconstruction of The Russian Identity During Putin Era.” *Cogent Arts & Humanities*. Vol. 8, No. 1(October, 2021), pp. 1-16.
- Liu, Yiben and Zhou, Shuhua. “Evolving Chinese Nationalism: Using the 2015 Military Parade as a Case.” *East Asia*. Vol. 36, No. 3(June, 2019), pp. 255-270.

- Tian, Xinl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 Reports— Based on the Guardian News Report of China’s Military Parade to Mark the 70 Years of Second World War.”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Vol. 8, No. 4(Spring 2018), pp. 433–444.
- Kuever, Erika. “Performance, Spectacle, and Visual Poetry in the Sixtieth Anniversary National Day Para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udies in Ethnicity and Nationalism*. Vol. 12, No. 1(April, 2012), pp. 6–18.

3. 보고서 등 기타

- 홍민. “북한 노동당 창건 75 주년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0–26 (2020).
- 홍민.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 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11 (2022).
- 고재홍.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열병식의 특징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ssue Brief」 제 110 호 (2021).
- 김보미. “북한 정권 수립 73 주년 기념 열병식: 조용한 자축의 의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ssue Brief」 제 287 호 (2021).

4. 뉴스 ·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박수윤. “北 첫 심야 ‘깜짝 열병식’…김정은 눈물 뒤 ICBM 공개하며 웃음.” 『연합뉴스』 2020 년 10 월 10 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0052900504>(검색일: 2025 년 6 월 20 일).
- 양육. “2023 년 북한 열병식, ICBM 말고는 보여줄 게 없었다.” 『이코노미 조선』 제 482 호 (2023).

- 이상현. “‘김정은 딸’ 김주애, 건군절 열병식서도 포착… 軍행사 ‘단골’.” 『연합 뉴스』 2023 년 2 월 9 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062200504>(검색일: 2025 년 7 월 3 일).
- 장슬기. “열병식에도 참석한 김주애, 백두혈통 보위에 핵심적 역할 맡나.” 『데일리 NK』 2023 년 2 월 10 일. <https://www.dailynk.com/20230210-5/?tztc=1>(검색일: 2025 년 7 월 3 일).
- Joshi, Manoj. “China’s Military Came Out on Parade But The Real Action Will Be In The Se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September 4, 2015. <https://www.orfonline.org/research/chinas-military-came-out-on-parade-but-the-real-action-will-be-in-the-sea>(accessed: June 30, 2025).
- Kamarck, Elaine and Muchnick, Jordan. “Army parade fuels debate over power, politics, and pride.” *Brookings*. June 12, 2025,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rmy-parade-fuels-debate-over-power-politics-and-pride/>(accessed: June 26, 2025).

Shadow Warfare in Parade: The Political–Military Logic of North Korea’s Midnight Military Parades

Park, Jeongsue (Korea University)

Chang, Sok-chun (Korea University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and military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midnight military parade’ under Kim Jong-un through Jeffrey C. Alexander’s theory of social performance in Cultural Pragmatics. Unlike prior studies that frame parades as displays of force or propaganda tools, this paper argues that the midnight parade operates as a dual mechanism, which are reinforcing domestic legitimacy and projecting strategic uncertainty abroad through theatrical performance. It analyzes the functioning of key performance elements – background symbols, scripts, actors, audiences, symbolic production, and mise-en-scène. The use of “midnight”, lighting, and scene control heightens the deification of Kim and enhances visual spectacle, while the presentation of weaponry institutionalizes ambiguity. This study reinterprets the parade as a symbolic strategy of governance, offering insights into the regime’s performative logic and strategic signaling.

Keywords: North Korea, authoritarian regime, military parade, authoritarian legitimacy, strategic ambiguity, social performance

투고일: 2025.07.31. 심사일: 2025.08.12. 게재확정일: 2025.09.05.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교수). 미국 University of Texas, Austin 정책학 박사. 연구 분야는 분배정책, 복지정책, 정책평가, 방법론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설문조사에 있어서 순서효과에 대한 연구” 『조사연구』(2022), “이론기반평가의 이론적 재조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2020),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2018) 등이 있음.

김근희

국방부 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국방협력관(과장급 인사교류 파견 근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구 분야는 군사적 효과성, 민군관 협력, 조직자원 등이며, 이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임.

김광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군사학과 교수. 군사학 박사로서 군사작전 및 특수작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본 총력전 수행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2022), “조중연합사 운용과 북한 군사전략 영향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2023) 등이 있다.

박정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연구분야는 권위주의, 북한정치 및 사회문화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Introducing Career Transition Data on Elites in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14(2025).가 있음.

안정은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 분야는 외교정책, 국제정치,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Why Did Trump Start a Trade War with China? Revised Populism of Political Newcomers and U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Pacific Focus』(202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한국과 국제정치』(2025) 등이 있음.

안재현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고급 정규과정 및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군사학과 석사과정.

장석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정책학(북한학) 박사. 연구 분야는 북한군사, 북한정치체제, 당-군 관계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국가전략』 제30권 4호(2024), “북한군 병영생활을 통해 본 김정일-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 변화: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41권 2호(2025) 등이 있음.

장재규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박사. 연구 분야는 군구조, 한미동맹, 군사혁신/미래전, 군사이론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 『한국군사학논집』(2021), “전작권 전환: 미래 연합사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방정책연구』(2021) “한국군의 합동성 문제 고찰: 인식에 기초한 평가와 해결책” 『국가전략』(2022), “한국군의 용병술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군사연구』(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전망: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 관점에서” 『국방정책연구』(2023),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2023), “군구조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2023) 등이 있음.

지효근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연구 분야는 동맹이론, 한미동맹, 군사혁신, 미래전, 북한 군사문제, 해외파병(국방외교)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북한군사론』(2025, 공저), “헤즈볼라의 ‘전술 13원칙’과 하이브리드전쟁의 출현” 『한국군사』(2025), “무형전력이 전투 승리에 미친 영향 연구” 『정신전력연구』(2024), “국방혁신 4.0에 대한 비판적 소고”(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2024), “국방무관의 외교적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2023),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2019) 등이 있음.

황현아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국방대학교 안보정책 석사.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18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 | | |
|---|-----------|
| 1.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 제도 분석 | 차정미 |
| 2.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 김순태 |
| 3.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 부승찬 · 박경진 |
| 4. 트럼프 행정부 FTA 정책의 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 | 박진수 |
| 5.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 이기태 |

| 여름호 |

- | | |
|--|-----------|
| 1.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 허태희 |
| 2.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 김현경 · 김성진 |
| 3.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 송태은 |
| 4.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과 경제제재, 1960~1978 | 최규빈 |

| 가을호 |

1. 이스라엘의 핵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 주는 함의 김태현
2.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박창건
3. 강성 권력과 연성 권력 측면에서 바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주도권 경쟁 세이훈 마흐무들루 · 신상윤
4.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윤해성 · 임유석

| 겨울호 |

1.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김재엽
2. 미국-적대국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본 북·미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리비아, 쿠바 사례와의 비교 박경진 · 김용호
3.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양갑용 · 장영태
4.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이원영
5.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최선 · 김재우

2019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박인휘
2.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김태중
3.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1977-1991)에 대한 RMA적 사후해석의 극복
: 카터 행정부의 ‘상쇄전략’에 대한 기술 기회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박상연
4.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전략 이상현

| 여름호 |

- | | |
|--|-----|
| 1.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 장노순 |
| 2.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 홍석훈 |
| 3. '중국 특색 국제정치이론' 논의의 출현과 향후 전망 | 함명식 |
| 4.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창권 |

| 가을호 |

- | | |
|--|-----------|
| 1. 신흥안보 거버넌스
: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 윤정현 |
| 2.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의 한계와 미국의 대응의 시사점 | 박주희 |
| 3.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 | 이종서 · 문인철 |
| 4. 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 이흥석 |

| 겨울호 |

- | | |
|--|-----|
| 1. 북미 핵 장기갈등
: 1993.3-2018.6 | 장경룡 |
| 2.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오수대 |
| 3.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 엄현숙 |
| 4.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 허태희 |
| 5.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 지효근 |

2020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 | | |
|--|-----------|
| 1.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 쟁점 및 전망 | 이정훈 · 박재적 |
| 2.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CMI) 강화를 중심으로 | 차정미 |
| 3.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적 성격과 사이버안보 | 박주희 |
| 4.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 석재왕 · 홍윤근 |

| 여름호 |

- | | |
|---|-----------|
| 1.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 분석 | 양희용 |
| 2. 트럼프 시대 미군의 전력 운용개념 연구
: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과 ‘동적 전력운용(DFE)’을 중심으로 | 김태현 · 이성훈 |
| 3. 전환기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들의 도전과 과제 | 조윤영 · 이상호 |
| 4. 한국군 기반통신망 분석 및 발전 방향
: 지상군 중심으로 | 박태웅 · 한현진 |

| 가을호 |

- | | |
|---|-----|
| 1. 디지털 전환기의 산업재편과 ICT 기반 남북협력 방안 | 윤정현 |
| 2.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징 | 김수연 |
| 3. 정보화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사이버 교류협력을 위한 시론 | 엄현숙 |
| 4. 타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대응방안
: 행위, 제도, 관념의 측면에서 | 이성훈 |

| 겨울호 |

- | | |
|---|-----|
| 1.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와 미중갈등
: 한반도 문제의 연계성 | 박인휘 |
|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과 평가 | 김영준 |
| 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인호 |
| 4.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 인도 모디(Modi)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의 충돌 | 김태형 |
| 5.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2.0 구상
: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 조재욱 |

2021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 | | |
|--|-----------|
| 1.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반길주 |
| 2. 프랜차이즈 이론을 통해 본 알카에다와 ISIS의 확산전략 비교 연구 | 전창범 · 석재왕 |
| 3. 동남아시아의 분절적 다자주의
: 위기인가 기회인가? | 배기현 |
| 4. 해외 정보기관들의 정보체계 개선동향과 정책적 의미 | 허태희 |
| 5.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방향 연구 | 정한범 |
| 6.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 ‘인간의 얼굴을 한 수령’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소환·발전 | 김종수 · 김상범 |

| 여름호 |

- | | |
|--|-----------|
| 1. 1960년대 유럽 3국의 선택과 한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 황일도 |
| 2.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분석과 북한 개발협력 시사점 | 최창용 · 문경연 |
| 3.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 이기태 |
| 4.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 박주희 |
| 5.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 전영선 |

| 가을호 |

- | | |
|---|-----------|
| 1. 신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슈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유철 |
| 2. 안보위협 최신 암호통신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 김창섭 · 이상진 |
| 3.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 김영준 · 신영환 |
| 4.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함의 | 이상현 |
| 5. 수원국의 체제전환은 공여국의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가?:
중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 박지연 |
| 6.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 이희옥 · 신지선 |

| 겨울호 |

- | | |
|---|-----|
| 1. 미디어 전쟁과 청중비용 효과의 다귀결성: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미디어 전술을 중심으로 | 김지용 |
| 2.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이중관계:
사이버 위협의 공개지목과 사이버 공작을 중심으로 | 장노순 |
| 3. 메타버스 시대, 도시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방향 | 문인철 |
| 4.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 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 이승열 |
| 5. 김정일 시대 경제성장 전략의 평가와 함의 | 조동호 |

2022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 | | |
|---|-----------------|
| 1. 트럼프의 이단성과 바이든의 정상성?
: 대중(對中) 전략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 공민석 |
| 2. 중국의 군사혁신 전략 변화와 전망 | 김상규 |
| 3.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 조봉현 · 송재국 · 정일영 |
| 4. 김정은 시대 북한 수핵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핵협력 방안 | 김수연 |
|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경담론의 변화와 신안보 재조명 | 윤혜령 |

| 여름호 |

- | | |
|--|-----------|
| 1. 미국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대(對)중국 견제 전략과 함의 | 이홍정 · 임경한 |
| 2. 미·중 복합 지정학적 갈등과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및 대응 | 서동주 |
| 3.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전략:
‘세기의 대변화론—중국몽—일대일로’ 연계분석을 중심으로 | 차정미 |
| 4.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 모델:
외무성의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오승희 |
| 5.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한반도 억제태세 기여와 역할: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 함형필 · 이만석 |

| 가을호 |

- | | |
|---|-----|
| 1.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 주장환 |
| 2. 남북경협외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 조동호 |
| 3.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 박소혜 |

| 겨울호 |

- | | |
|---|-----------------|
| 1. 시진핑 시기 중국 집단시위 대응 전략의 변화 | 김진용 |
| 2.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동학:
요시다 시대와 아베 시대를 중심으로 | 신정화 |
| 3. 일본의 항공산업 발전 및 기술축적 전략:
냉전기 일본의 전투기 면허생산 및 독자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고경윤 |
| 4. 유럽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위한 EU의 전략 | 윤성욱 |
| 5. 공방균형이론을 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 김성우 · 조상근 · 진중근 |

2023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 | | |
|---|-----|
| 1. 김정은 체제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전략 | 조윤영 |
| 2. 김정은 정권의 대외무역 정책과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 이철 |
| 3.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대내 정책 위험 요인 분석:
‘피크차이나(Peak China)’ 논쟁을 중심으로 | 이재영 |

| 여름호 |

- | | |
|--|-----------|
| 1.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 설인호 · 손한별 |
| 2. 식량안보 중심의 신흥안보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간 연계성 분석 | 이다선 · 지성태 |
| 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 전망:
지정학 이론과 크림전쟁(1853-1856)의 교훈을 중심으로 | 강정일 |
| 4.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 | 장재규 |

| 가을호 |

- | | |
|---|-----------|
| 1.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 최영관 · 박성철 |
| 2. 미래전 전망과 공중-우주 교차영역에서 한국 공군의 대응 방안 | 엄정식 |
| 3. 한국의 원조 동기에 관한 ‘안보’적 관점 | 김지영 · 강성철 |
| 4.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 양문수 |
| 5. 미국의 공개 귀속 활용 전략 분석 및 시사점 | 박주희 |
| 6. EU의 경제 강압 규정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박경진 |

| 겨울호 |

1. 팬데믹 이후 사회분열로 인한 테러위기와 수단에 관한 연구:
비핵 전자기펄스 (NNEMP) 공격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신형석 · 김영훈 · 전제환 · 이현우
2. 미·중 전략경쟁, 전쟁으로 갈 것인가?:
세력우위론적 접근 남궁영 · 장시영
3.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미래 ‘합동성’ 발전 방향 연구 한윤기 · 배진석
4.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분석:
정권안보와 위협균형의 관점에서 류인석
5. 일본 정치엘리트의 퍼포먼스:
세습의원의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염동호

2024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안보진화론과 신냉전기 기능적 현실주의의 태동 반길주
2. 2024년 대만선거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합의 표나리
3. 피후견국의 위기조작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북한관계를 중심으로 이영수 · 박상남
4. 러시아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소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의 관점에서 고주영 · 권원순
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지효근

| 여름호 |

1.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
우주잔해 국제협력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접근 정현주
2. 나토 확장에 따른 러시아 엘리트 그룹의 행위전략과 정책산출 연담린
3. 2022-2023년 대만해협 위기 평가와 한국의 대비 방향 이택선 · 이홍정
4. 경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집권기를 사례로 주장환
5. 테러와 테러 유사범죄 개념 비교 연구 전창범

| 가을호 |

1. 미·중 해양 패권경쟁:
서태평양 해역의 도련(島鏈) 개념을 중심으로 정호섭
2. Post-2028년을 대비한 일본의 대(對) 한국 협상 외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서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지연전략 박창건 · 변우희
3. 한미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구조 분석:
구성 요소와 발전 방향 박한빈 · 이상진
4. 우주 공간에 대한 배타적 지정학(exclusionary geopolitics)과 우주 거버넌스 이가연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관한 연구: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 김도영 · 강정일

| 겨울호 |

1.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서동주 · 김정기 · 이상준
2. 병역자원 감소와 군사체계의 유연전략성:
국방인력체계의 개혁과제 윤대엽
3. 군사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근희 · 조홍주
4. 미중갈등의 최전선은 왜 대만인가?:
사서(四書)로 살펴본 유교의 화이론(華夷論) 구진영

2025 국가안보와 전략

| 불호 |

- | | |
|--|-----------------|
| 1.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장 전략:
NATO와 협력을 중심으로 | 박재혁 · 손동성 · 강석중 |
| 2. 북·러 군사 밀착의 동북아 지정학과 평양의 전략적 선택 | 김진하 |
| 3. 북핵 대응체계의 재정립: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와 대안 | 류인석 |
| 4. “핵-재래식 통합(CNI)”의 개념과 구조:
한미동맹의 CNI 구현을 위한 함의 | 손한별 |
| 5. 해저케이블 안보와 회색지대 공세 | 반길주 |

| 여름호 |

- | | |
|---|-----------|
| 1. 대만의 주권국 여부와 미·중 패권경쟁 속 대만문제 전망 | 장시영 · 남궁영 |
| 2. 미·중 영향력 경쟁과 필리핀의 딜레마 :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 사례 | 이한나 |
| 3.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 안영준 |
|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자전 양상과 교훈 | 배진석 · 한윤기 |
| 5. 최근 북한의 지식재산권 발전전략과 상징성 | 강채연 |

『국가안보와 전략』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 형식 및 제출 요령

가.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hwp)으로 작성하고, 본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국문요약 및 영문 Abstract는 600자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 (1) 국문요약 및 영문 Abstract는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 (2) 국영문 요약에는 주제어(keywords)를 5개 이상 포함해야 한다.

나. 원고의 구성은 제목, 저자(소속기관), 목차,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 Abstract(keywords 포함), 저자소개 순으로 하되 장, 절의 하위제목 등은 1, 가, (1), (가), ①의 순으로 한다.

- (1) 목차는 장 단위까지만 표시한다.
- (2) 영문 Abstract에는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 (3) 저자소개는 현 소속 및 직책과 약력, 연구 분야, 주요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200자 이내의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다.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괄호 속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외래어의 경우 국립국어원 어문 규범을 따르되, 중국식 한자 표기의 경우 번체자(繁体字)를 사용한다.

- (1) 외국 인명은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되 첫 번째에 한해 괄호 안에 원어 표기를 병기한다.

예. 시진핑(習近平),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 (2) 외국 기관,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의 명칭은 통일된 한국어가 존재할 경우

이를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첫 번째에 한해서만 한국어 다음 괄호 안에 원어 약칭을 병기하고 이후에는 원어 약칭을 사용한다.

예. 유엔, 나토, 유럽연합(EU), 오키스(AUKUS)

라. 원고는 저자의 성명과 소속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 양도동의서’와 함께 기한 내에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inss.jams.or.kr>)에 등록해야 한다.

2. 각주 작성 요령

가. 인용 출처는 각주에 저자명, 문헌 제목,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 등을 적어서 표시한다.

나. 동일한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는 저자명과 문헌 제목만을 표시한다. 영어 문헌의 저자명은 성만 표시한다. ‘앞의 글’, ‘위의 책’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한글 논문, 기사 등의 제목은 따옴표(“)로, 단행본, 편저서, 학술지, 언론매체의 제목은 겹낫표(『』)로 표시하고, 보고서 시리즈 제목(전략보고, 이슈브리프 등)의 경우 홑낫표(「」)로 표시한다.

라. 영어 등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하되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 각 단어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마. 한글 문헌의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운데뿔점으로 구분하되, 두 번째 표기부터는 4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 ‘홍길동 외’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바. 영어 문헌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 2인이면 and로, 3인 이상이면 쉼표(,)와

and로 구분한다. 두 번째 표기부터는 4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 성(last name)을 사용하여 ‘Nye et al.’ 방식으로 표시한다.

사. 인용 페이지는 전체를 모두 표기하여야 한다.

예. pp.163-167 (○) / pp.163-7 (X)

아. 각주 작성 예시

(1) 단행본

- 양승태,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pp.34-36.

(재언급시) 양승태,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pp.38-39.

- 임수호,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장달중 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p.135.

- Michael C. Horowitz, *The Diffusion of Military Power: Causes and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pp.145-149.

(재언급시) Horowitz, *The Diffusion of Military Power*, p.57.

(2) 논문

- 이종은, “민주시민의 덕성,” 『한국정치학회보』 34집 1호, (2000 봄), pp.121-122.

- William T. Tow, “Reshaping Asian-Pacific Security,”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8, No. 1(Winter/Spring 1994), pp.92-93.
- 오일석, “원유 · 가스 탐사개발 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88.

(3) 보고서 및 발표문

- 건설교통부, 『도로용량 편람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KHS-20000-10 (서울: 건설교통부, 1981), p.53.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ressure Ulcers in Adults: Prediction and Prevention*, AHCPR Publication No. 92-0047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2), pp.15-16.
- 박형중,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모델 시론,”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년 12월 14일), p.93.

(4) 뉴스 ·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정빛나, “북한, 코로나 속 평양종합병원 착공...김정은 직접 ‘발파단추,’” 『연합뉴스』 2020년 3월 18일, <https://yna.co.kr/view/AKR20200318015751504?input=1195m>(검색일: 2020년 3월 21일).
- Christina Lu, “The U.S.-China Fault Line Is Felt in the Academy,” *Foreign Policy* April 5, 2023, <https://www.foreignpolicy.com/2023/04/05/china-us-geopolitics-academia-university-partnership/> (accessed: April 6, 2023).

- 김보미 · 김일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59호 (2020), p.5.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d=408707 (검색일: 2020년 3월 21일)
-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February 21, 2018, p.21.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6/-1/-1/1/2018-NUCLEAR-POSTURE-REVIEW-FINAL-REPORT.PDF> (accessed: March 18, 2020).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 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에 관한 정보를 <참고문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
- 나. 참고문헌은 1. 단행본, 2. 논문, 3. 보고서, 4. 뉴스·기사 및 인터넷 자료의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러 언어의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각 항목 내에서 한국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하고, 영어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서명, 발행처, 출판사, 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며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연도, 페이지 순으로 한다.
- 라. 한글 문헌의 경우 저자명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어 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last name)을 먼저 표기하고 성표를 찍은 뒤 이름(first name)을 표기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마. 참고문헌 작성 예시

(1) 단행본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 박건영 · 신윅희 편. 『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통계청. 『1994년 통계연감』. 서울: 통계청, 1995.
- Pynn, Ronald E., ed. *American Politics: Changing Expect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4.
- Brands, Hal and Michael Beckley.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NY: W.W.Norton & Company, 2022.

(2) 논문

- 황의정.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 규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7년 봄), pp.108-143.
- Tow, William T. “Reshaping Asia-Pacific Security.”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8, No. 1 (Winter/Spring 1994), pp.85-100.

(3) 보고서

- 장세호.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실패와 다시 부상하는 평화협상 재개론.” 국
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통권 492호 (2023).
- 민정훈.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및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
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36 (2020).

(4) 뉴스·기사 및 인터넷 자료

- 정빛나. “북한, 코로나 속 평양종합병원 착공...김정은 직접 ‘발파단추’.”
『연합뉴스』 2020년 3월 18일. <https://yna.co.kr/view/AKR20200318015751504?input=1195m>(검색일: 2020년 3월 21일).
- Christina Lu, “The U.S.-China Fault Line Is Felt in the Academy.”
Foreign Policy April 5, 2023. <https://www.foreignpolicy.com/2023/04/05/china-us-geopolitics-academia-university-partnership/>
(accessed: April 6, 2023).

4. 표 및 그림 표시 요령

가. 표 및 그림은 그 전체수가 각각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하나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표 1-1〉, 〈그림 2-3〉 등으로 각 장마다 새로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나. 표 및 그림의 경우, 바로 아래에 출처를 표시한다.

예. 출처: 통계청, 『1994년 통계연감』(서울: 통계청, 1995), p.56.

『국가안보와 전략』 원고모집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을 연 4회(3·6·9·12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전략』에는 국제정세, 안보, 북한·통일문제, 남북문제, 주요국가의 외교정책과 국가전략 등 외교·안보 전 부문에 관한 논문을 수록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당 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논문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주시는 기고문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고,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기고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전략』은 시사적이거나 학술적인 내용으로 독창적이고 정책 대안이 담긴 논문을 선호합니다.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한글(hwp)파일로 작성하되 저자의 성명과 소속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완성원고는 「논문게재 신청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함께 기한 내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inss.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와 전략」 편집위원회

